

1주차 2강

여성주의와 사회복지

학습 목표

- 여성주의 이론을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복지주의, 탈근대주의, 생태주의, 페미니즘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해방이후부터 1990년대 이후까지 우리사회의 여성주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여성주의(페미니즘) 이론
2. 우리 사회의 여성주의(페미니즘)

- 여성억압과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여성해방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다양한 관점들
- 페미니즘은 1792년 메리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가 그의 저서 「여성의 권리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에서 ‘여성문제’를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데서 출발
- 페미니즘은 여성억압과 여성해방을 설명하는 독립적인 이론인 동시에 실천

1) 자유주의 페미니즘

(1) 18세기

- 자유주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 및 합리성 등을 인간 고유의 특성으로 보고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들의 자유가 최대한 발휘될 때 가능.
- 그러나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18세기 계몽사상의 흐름이 소수 남성들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반대, 여성의 교육기회 균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차별화하기 시작.

(2) 19세기

-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위해 교육기회뿐 아니라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기회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남성과 똑같은 기회와 자유를 보장받으면 여성 역시 합리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 것.

(3) 20세기

- 남성과 여성을 똑같게만 취급하는 제도, 법들과 그들에 대한 역할기대는 남녀의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화 과정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처사, 남성과 여성이 양성적 인간이 되는 그날까지 사회가 성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20세기에 들어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주로 한시적인 특별고용과 적극적 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 실현
- 여성의 재생산과 사적인 가사노동 등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노동보다 열등한 것처럼 인식. 공적·사적 영역의 이분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음.
-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인간 본성을 이성에 대한 ‘정신적’ 능력으로 파악.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여성-신체, 남성-정신이라는 남성적 편견을 고수하여 이후에 나타나는 페미니즘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음.

2)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1) 19세기 마르크스(Marx), 엥겔스(Engels) 등의 사상가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2) 생산수단의 소유화, 교환가치, 잉여가치의 개념을 출산, 양육, 돌봄 등의 가사노동과 연결시켜 이해.

(3) 계급의 분류

- 사회적으로는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도 노동자 계급으로 분류, 정치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사회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성취하고자 투쟁할 때 여성노동자들의 해방과 자유도 포함.

(4)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억압의 궁극적 원인을 계급차별에서 찾음.

(5) 여성억압이 사유재산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계급 간의 갈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불평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

(6) 자본주의 존립에 있어, 한편으로는 여성을 생산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전담자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의 이득을 봄.

(7) 여성해방을 위해 사적 소유의 폐지와 여성의 생산노동 참여,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주장

(8) 여성은 임금을 받지 않고 남편에게 의존하는 사람이든지 낮은 보수를 받는 저임금 소득자든지 둘 중 하나가 됨.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결혼을 남성노동자가 재정적 지원과 교환하여 여성으로부터 가사와 성적, 감정적 서비스를 받는 상태로 봄.

(9)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 관계를 가정

-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남성의 의무는 재강화되고, 설사 아내가 고용된다 해도 그녀의 첫 번째 의무는 남편과 자식, 병자, 또는 노인을 보살피는 것이 됨.

(10) 기여

-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노동력, 가족, 결혼 등을 통해 여성이 받는 억압의 근본 원인을 통찰

(11) 한계

- 여성의 지위와 기능을 설명하는 근본적 요소로 계급을 중요시한 나머지 자본에 의한 여성억압만을 강조함으로써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을 간과

(12) 비판

-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출산문제 및 성문제(피임, 낙태, 강간, 폭력 등)와 관련된 문제들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여성들의 노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비판을 받음

3) 급진주의 페미니즘

(1) 여성억압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지배체제, 즉 가부장제에 따른 것으로 봄.

(2)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주목하여 여성문제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인 출산과 이로 인한 의존에서 일차적으로 파생된다고 봄.

(3) 여성과 남성의 성차이, 남성중심적 성차별 구조, 여성의 성 개념을 본격적으로 논의,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 가부장제 등을 비판

(4) 기여

- 가부장적 담론과 이데올로기, 남성중심적 사회질서, 성적 차별구조 등의 폐기를 주장함으로써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보지 못한 여성 신체의 의미와 가부장제의 억압을 주요 논쟁으로 부각시킴

(5) 남녀 차별주의

-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뿌리 깊은 인간의 억압형태라는 사실에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다 같이 동의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모든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님.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급진적-자유주의론적 페미니즘과 급진적-문화적 페미니즘으로 나누어 설명
 - 급진적-자유주의론 : 여성성과 남성성에서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생물학적·사회적 혁명이 필요하고, 이는 자연적인 출산을 인공적인 출산으로 대체하고 편의에 의해서 선택하는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가정이 생물학적 또는 혈연적 가족을 대체하는 것
 - 급진적-문화적 페미니즘 : 자연적인 출산능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봄. 이들은 인간 종족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여성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어머니 역할은 실제 여성의 힘의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보며, 만약 이런 역할이 없어지게 되면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존경과 필요가 감소될 것이라고 봄.
- 따라서 이들은 급진적-자유주의론 페미니스트들이 생물학적 임신과 분만의 경험을 정치적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어머니 역할만을 비난했다고 주장.

(6) 여성의 눈

- 여성억압을 ‘여성의 눈’으로 보자고 주장함으로써 남성성과 구분되는 여성성을 발견하는데 큰 기여.

4) 사회주의 페미니즘

- (1) 계급억압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여성억압의 핵심인 가족과 성 등을 이해하는 데 역점을 둠으로써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핵심적 통찰을 결합.
- (2) 계급억압이 여성억압의 유일한 원인도 아니고 가장 큰 억압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과 계급에 의한 억압을 상호 보완적,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동시에 여성억압의 근원으로 작용한다고 봄.
- (3) 산업노동력으로서 여성의 노동에 관심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 내의 여성노동에도 관심을 기울임.
- (4)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성역할을 넘어서 양성적인 완전한 인간을 지향하며, 상품화되고 타락하고 소외된 성의 여러 형태들을 초월.
- (5)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으로 인해 여성이 억압을 받는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름.
 - 이중체제론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별개의 사회관계로 봄.
 - 자본주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가부장적이라고 봄.
- (6) 가정 내에서 당연히 여성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이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남성과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하며, 지불노동과 부불노동의 분리를 철폐하고 남성만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통념을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

(7) 자본주의 타도가 여성해방에 도움은 되겠지만 곧바로 성불평등의 종결은 아니며, 가부장제와 성별분업의 철폐, 나아가 성불평등 자체의 타파를 지향하는 별개의 혁명을 통해 수행될 것이라고 봄.

(8) 기여

-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의 기원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에서 찾아냄으로써 성불평등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 또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정신분석적 페미니즘들을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는 한 가지 개념틀 안에 포괄하려 노력함으로써 페미니즘 이론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그림]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차별

출처 : 여성복지학 32p

5) 복지주의 페미니즘

- (1)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성의 기능인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여성억압임을 강조하면서 등장.
- (2) 공적영역에서 기회를 획득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 내에서 어머니와 아내로서 여성의 욕구충족에 목표를 둬.
- (3)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를 여성들의 중요한 동반자로 보기 때문에 여성의 삶에서 국가는 규제자라기보다는 잠재적인 복지급여자임.
예) 복지서비스를 여느 국가보다도 많이 제공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복지국가는 '성친화적' 국가로 평가
- (4) 출산이나 아동양육과 같이 여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과 단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예) 가족수당의 경우 마르크스주의 및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수당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임금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반대했지만, 복지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임금노동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보아 가족수당에 찬성.

(5) 여성을 일차적으로 아내와 어머니로 보는 복지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 체제의 큰 변혁이나 소멸을 기대하지 않음. 오히려 현재 처해진 노동자계급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현 상태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많은 힘을 쏟음.

(6) 한계

- 복지주의 페미니즘이 모성으로서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여성을 모성과 동일시함으로써 가족을 온전히 유지하고 결국은 남성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보수적인 이론

(7) 비판

- 헤일라 로우보담(Heila Rowbotham)은 복지주의 페미니즘이 관념론적이며 생물학적 결정론을 극복하지 못한 채 모성과 결혼을 여성의 운명으로 간주

(8) 복지국가에서 남성은 주로 사회보험에, 여성은 사회부조에 집중되는 현상은 결국 복지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가 여성의 동반자이거나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빈곤을 방치하고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질서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았음을 보여줌

6) 탈근대주의 페미니즘

(1) 근대성이란

- ‘나’라는 주체가 세계의 중심이라 보고 ‘타자’를 대상화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말한다. 그리고 중심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타자를 주변인으로 보고 이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배제

(2) 남성은 그들의 가치, 규범 등을 통해 남성문화(가부장제)로 여성을 지배

(3) 탈근대주의 페미니즘

- 다른 어떤 페미니즘보다도 복잡하고 다원적임

(4) 한계

- 백인 여성, 흑인 여성, 서구 여성, 제3세계 여성, 식민지 여성, 제국 여성 등 각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억압과 차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서구 백인 여성의 경험을 모든 사회의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

(5) 여성들의 다양한 차이에 주목

- 여성성과 남성성이 고정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탈근대주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힘, 특히 정치력을 잃어버렸다는 비난

7) 생태주의(에코) 페미니즘

(1) 생태주의 페미니즘이란

- 생태주의 페미니즘이란 용어는 1974년 프랑수와 드 본느(Francois de Bonne)의 저서 「페

미니즘 또는 파멸」에서 처음 등장. 이후 생태주의 페미니즘은 더 다양화되었고 구체화되어 왔음

(2) 생태주의 페미니즘의 중심 가설(Warren)

- 여성과 자연의 억압 간에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음
- 이 연관성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여성억압과 자연억압을 이해하는데 필수요소
- 여성주의 이론과 실천에 생태학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함
-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주의 관점이 포함되어야 함

(3) 환경 재난과 환경 악화

-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 대한 영향보다 더 크고, 환경 파괴를 반대하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도 여성이었다는 사실에 주목

(4) 16세기 이래 근대과학의 발전 속에서 남성은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해 왔는데, 이는 대부분의 가부장제 사회에 팽배한 남성과 여성 간의 착취적, 억압적 관계와 관련이 있음

(5) 생태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의 위계질서적이고 이원적이며 억압적인 사고양식과 문화는 여성과 자연 모두에게 해를 끼침.

(6) 생태주의 페미니즘은 일단 여성-자연의 연관성에 관심

- 자연·문화적 생태주의 페미니즘
 - 전통적으로 여성과 연관되는 속성들이 사회적이기보다는 생물학적·심리적 경험의 산물이라 보고, 여성과 자연에게 강요되는 열등성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남성들의 덕목보다 여성들의 덕목이 더 우월하다고 봄
- 영적 생태주의 페미니즘
 - 인간의 땅에 대한 지배권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부장적 종교를 벗어나 여성의 영성에 주목함. 여성의 역할은 가이아(생명을 주고 모든 존재물들을 창조)의 역할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연과 여성의 관계가 자연과 남성의 관계보다 우월하다고 설명
- 사회주의 생태 페미니즘의 경우
 - 여성-자연의 연결지점이 생물학적이거나 심리적이기보다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이라 보고, 여성-자연의 속성을 양성 모두에게로 가져와야 한다고 봄. 따라서 남성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노약자를 돌보는 일, 생태적으로 땅을 회복하는 일, 생존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생산활동을 위한 일에 여성과 함께 동참해야 함.

구분	자유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복지주의 페미니즘	탈근대주의 페미니즘	생태주의 페미니즘
원인	기회 부족	경제력 부족	가부장제	경제력 부족 가부장제	재생산	남성중심의 언어	남성중심적 개발
해결 방법	기회 제공	경제활동 참여	가부장제 도전(여성 문화 창조)	성별분업 제거	재생산 보상	다양성 추구	여성적 가치와 생명 존중
운동 사례	가족법 개정운동	비정규직 여성노동운동	월경축제	공동육아 운동	성친화적 복지운동	여성적 글쓰기 운동	여성환경 운동

<표> 여성억압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관한 각 페미니즘의 입장

출처 : 여성복지학 40p

2 | 우리 사회의 여성주의(페미니즘)

- 여성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구조나 역사적 배경, 문화 등과 밀접하게 연결
- 여성문제는 그 시대의 여성이 특수하게 고통받고 있는 억압과 차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시대의 사회상이자 부산물이기도 함.

1) 해방 이후 ~ 1960년대

- (1)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일제강점기에 처음 나타남
 - 당시의 여성들은 남존여비의 가부장제 속에서 극심한 노동에 시달렸으며 매매혼, 조혼, 민며느리제, 축첩제 등의 폐단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었음.
 - 농촌여성들은 봉건적인 소작농의 일꾼으로 끊임없이 일했으며, 도시로 유입된 어린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착취당함.
- (2) 1945년 ‘건국부녀동맹’, ‘한국애국부인회’ 등을 결성
- (3) 1950년대 후반에는 ‘가정법률상담소’, ‘YWCA’ 등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문제와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운동
- (4)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로 총집산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를 펼침

2) 1970년대

- (1) 1970년대에 들어서 대학교육을 받은 중산층 젊은 여성들은 성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기존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을 비판
- (2) 이들은 서구에서 일어난 여성운동에 공감을 표시하며 법적, 제도적 성불평등을 인

식하기 시작

- (3) UN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선포하면서 한국 여성계에서도 가족법 개정, 대학의 교과과정 내 여성학 교육의 개설 등을 주장
- (4) 1970년대에 제기된 여성문제의 특성(여성사연구회, 1988)
 - 여성의 고등교육과 경제활동의 기회가 증가됨에 따라 여성의 역할과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법적,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여성의 의식구조와 성윤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산업현장의 일선에서 극심한 노동착취를 몸소 겪었던 여성노동자들은 자발적인 노조운동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의 상황과 성과 노동 간의 문제를 조금씩 인식할 수 있음.
 - 정치적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단순한 여성의 사회봉사활동을 초월하여 어떤 것이 진정한 여성운동인가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시작하는 기회를 만들었음.
 - 서구의 페미니즘이 소개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성문제를 이론적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초기에는 서구의 이론을 그대로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키려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지만 점차 우리 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염두에 둔 창조적 이론 모색을 시도하였음.

3) 1980년대

- (1) 광범위한 대중 여성이 주체가 되어 각 계층별로 다양하게 전개
- (2) 1987년 이후 여성노동자운동은 여성노동자로서의 특수한 요구를 제기.
 - 차별임금 철폐, 정년차별 철폐, 평생노동권 확보, 모성보호 쟁취, 직장 내 폭력 추방 등
- (3) 정치적 격동기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고학력 중산층 여성은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불평등 구조에 의해 여성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점차 구체적인 여성문제에 접근
 -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 (4) 1984년 ‘또 하나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여성단체는 사회구조가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영향
 - 성차별 비판, 사회교육과 문화행사 주관
- (5) 성문제를 사회문제로 이끌어 냄.
- (6)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입각한 여성운동은 각 부문별로 광범위한 여성문제들을 포함하는 대중운동으로 기틀을 다졌으며, 연대활동을 펼침으로써 사회변혁의 주체자가 됨.

4) 1990년대 이후

- (1) 1990년대 여성운동은 외견상으로는 전문성을 띤 소규모 다양한 운동단체로 분화.
- (2) 개방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폭넓은 집단을 규합하여 여론을 형성, 정책수립에 반영

- (3)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대중의 결합은 여성 개인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는 역량을 발휘한 것.
- (4) 여성단체의 연대활동은 국회의 여성정책전담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를 도모하였고, 이후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직접적인 여성의 권익 향상과 복지에 일익을 담당
- (5)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법, 동성동본 금혼 폐지 등의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법제의 선진화를 이룩했으며 2005년에는 호주제를 폐지.
- (6) 최근에는 한국사회의 탈근대주의 페미니즘과 생태주의 페미니즘이 서구의 페미니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 (7) 이러한 페미니즘의 학문적 성과는 2005년 세계여성학대회의 유치로 이어졌으며, 전 세계에서 아시아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됨.

■ 학습정리

1. 여성주의(페미니즘)이론

1) 자유주의 페미니즘

- 남성과 여성을 똑같은 취급하는 제도, 법률과 그들에 대한 역할기대는 남녀의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화 과정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처사, 남성과 여성이 양성적 인간이 되는 그날까지 사회가 성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2)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노동력, 가족, 결혼 등을 통해 여성이 받는 억압의 근본 원인을 통찰함.

3) 급진주의 페미니즘

- 여성억압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지배체제, 즉 가부장제에 따른 것으로 봄.

2. 우리 사회의 여성주의(페미니즘)

1) 사회주의 페미니즘

- 계급억압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여성억압의 핵심인 가족과 성 등을 이해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

2) 복지주의 페미니즘

- 출산이나 아동양육과 같이 여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과 단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3) 탈근대주의 페미니즘

- 성은 그들의 가치, 규범 등을 통해 남성문화(가부장제)로 여성을 지배한다고 봄.

4) 생태주의 페미니즘

- 가부장제의 위계질서적이고 이원적이며 억압적인 사고양식과 문화는 여성과 자연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봄.

2주차 1강

성인지적 관점과 실천 전략

학습 목표

- 젠더의 의미와 시각, 한계, 그리고 성인지적 측면의 성불평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성인지적 사회복지실천의 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젠더의 의미와 시각, 한계, 그리고 성인지적 측면의 성 불평등
2. 성인지적 사회복지실천의 원칙

1) 젠더의 의미와 시각

(1) 젠더(gender)의 개념

- 사회문화적인 과정에서 형성된 남녀 간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성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동과 특성이 포함되며, 시기와 장소,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젠더(gender)는 섹스(sex)와 구별되는 문화적 성을 의미함. 교육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문화적 습득의 결과를 젠더(gender), 즉 성차(性差)라고 보는 것.
 - 생물학적 몸의 조건이 여성이나 남성이나에 의거해 여성의 역할 및 지위 그리고 남성의 역할 및 지위를 구분하여 그에 걸맞은 성역할 정체성을 학습함으로써 획득된다고 보는 것.

(2) 성인지적 관점

- 목적 : 젠더에 기반한 불평등한 차별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성적 불평등의 요소들을 근절해 나가는 것
- 목표: 성인지적 정책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삶의 경험과 상황이 다르고 사회경제적인 지위에서도 차이가 있는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분야에 그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양성 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함.
- 남성성은 합리적, 경제적 합리성, 가장, 성적 강인함을 통해 남성이 여성을 리드하고 가정과 사회의 주체로 가정되며, 반면 여성성은 비합리적, 정감적, 경제적 의존과 종속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연약함을 통해 여성이 남성의 보조적(주변적) 위치에 배열함으로써 여성의 남성에의 종속을 당연히 여기는 관념을 형성함.
- 젠더(gender)는 사회적 의미의 성이고, 성(sex)은 생물학적 의미의 성을 뜻함.

2) 젠더의 한계

(1) 성을 남녀 이분법적 성관계만을 사회에서 정상적 관계로 간주해 왔음.

(2)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위계성이 있음.

- 이러한 논리들은 결국 남녀 간 성별분업을 정당화시켰고 성의 내용적 실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음.
 - 남성적인 신체 특징을 기준으로 삼고 이에 따라 여성적인 신체 특징을 남성성이 없다거나 부족한 상태로 해석하는 관점임.

3) 성으로 표시되는 다른 역할들이 있다고 보는 시각

(1) 인도의 히즈라(hijra)

- 아주 독특한 젠더양식
-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 인도 전역에 백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함.

(2) 북아메리카 북부의 인디언 마을에서 찾을 수 있는 버다치(berdache)

- 남자같이 보이는 데도 여성 옷을 입고 다니면서 밥 짓기, 빨래, 아기 돌보는 일 등을 하고 있음.

(3) 남녀 간의 성적 욕구

- 그들의 성에 관계없이 동성애도 이성애나 양성애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 성적 욕구는 살아가면서 누구든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관점.

4) 전통적인 젠더편견 해소 방안

-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론다 쉬빙거(R. Schleginger) 교수 : 과학적인 여성의 역사 연구
 - 여성 숫자를 늘려라(fix the number)
 - 제도를 바꿔라(fix the institution)
 - 지식체계를 변화시켜라(fix the knowledge)의 세 가지 처방을 제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 연구과정에서도 젠더편견(gender bias)을 제거하고 젠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삶의 질과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임.

5) 성인지적 측면의 성불평등

- 성인지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
 - 여성의 불이익 문제에 관심을 두는 여성주의(feminism) 관점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
 - ① 여성과 남성이 자신들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인한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봄. 특정 개념이나 정책 및 실천 등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관점
 - ② 사회복지실천에서 성인지적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삶과 사회복지실천의 현장 및 개입에서 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향을 인식·고려할 수 있는 관점 제공
 - ③ 196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된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경험과 조건을 재개념화하고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은 성인지 관점으로 발전하게 됨.
 - ④ 여성 혹은 남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위계적 사고모형을 거부하고 양성의 연결성을 강조.

2

성인지적 사회복지실천의 원칙

1) 젠더문제와 사회복지실천의 연관성

(1) 성인지적 측면에서의 젠더

- 인간과 환경 간의 교류에서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그간 사회복지실천 교육에서는 사회문화적 성의 이슈인 젠더를 간과해 옴.

(2) 사회복지실천에서 성인지적 관점

- 클라이언트의 삶과 사회복지실천의 현장 및 개입에서 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

(3) 196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된 여성운동

-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경험과 조건을 재개념화하고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은 성인지 관점으로 발전.

2) 복지국가와 젠더

(1) 복지국가들

- 남성 가장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여 성 분업을 지지하고, 가족 내의 돌봄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남성 생계부양자 유형, 성별 역할분업을 지지하지만 돌봄과 임금노동에 대해서 동등한 가치와 보상체계를 갖춘 성별 역할을 중시.

(2) 복지국가에 대한 젠더관점적 접근

-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젠더관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복지국가 유형화와 시민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기존의 복지국가가 가부장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남성부양자 중심의 제도를 발달시켜 왔고, 주로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었던 출산과 가사, 양육 등의 가정 내 재생산적 역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이유로 각종 사회정책들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4) 현재까지의 복지논쟁과 여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복지논쟁

- 현재까지의 복지논쟁은 주로 성장과 분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에 집중되어 왔고 여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복지논쟁은 미흡한 실정.
-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에 있어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family model)에서 맞벌이 모델(dual earner family model)로의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젠더 관점의 통합이 필수적으로 요구.

(5) 젠더 관점에서 제시하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복지현안을 정리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및 사회적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 위협 및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정책 방안이 필요함.
-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이전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아동 및 노인의 돌봄이 필요. 정책을

돌봄자 및 돌봄 대상자 각각의 관점에서 성인지적으로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3) 성인지 관점과 사회복지실천

(1) 사회복지실천에서 성인지적 관점

- 클라이언트의 삶과 사회복지실천의 현장 및 개입에서 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

(2) 젠더(gender)

- 사회복지실천에서 남녀 간의 정서, 인지, 행동의 유사점과 차이, 그리고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되고 구성되는 젠더(gender)는 성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제외.

(3) 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수립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함.
- 또한 여성의 사회보험제도나 수급권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급여의 성별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에 기인한다고 봄.

(4) 성인지적 관점의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인 입장

- 여성을 지지한다는 것
-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의 자기실현에 있음.
- 여성들 개인이 처한 환경적, 물질적, 이념적 조건 속에서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은 정치적 특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음.

4) 성인지적 사회복지실천의 원칙

(1)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

- 여성주의적 원칙을 개발하고, 적용시키고,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는 행동
 - 여성주의적 실천(feminist practice)과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은 서로 공유하는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
 -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the personal is political)이라는 관점은 사회복지실천에서 환경 속의 개인(person-in-environment)이라는 패러다임과 일치.
 -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도 함께 추구하는 사회복지사가 바로 여성주의 원칙에 의해서 행동

(2) 사회복지 교육이나 실천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여성주의에 입각한 분석의 원칙

- 잘못된 이분법적인 사고나 인위적인 분리의 제거(the personal is politic)
 - 젠더적 분석은 사회의 모든 현상의 상호관련성을 강조. 이는 개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 를 계속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생태학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만 가능.
 - 잘못된 이분법은 위험하고 결과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행동양식을 강화시킴.
 - 상호관련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존의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는 사회의 대다수 성원들이 만족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
 - 권력의 재개념화(reconceptualizing of power)
 - 권력은 여성주의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 여성주의자들은 권력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 도전하는 것.
 - 가부장적인 권력의 개념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
 - 성인지적 시각에서 권력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장적인 기능. 개인에게 삶을 스스로 통제하며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한 능력을 허용.
 - 과정의 중요성 인식(valuing process equality with product)
 - 강압적이고 불평등하며 다른 억압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취한 목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됨.
 -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여성주의적 전망은 “목적의 중요성은 그 것이 추구하는 방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초.
 - 결정하는 과정은 최종적인 결론 못지않게 중요.
 - 예) 적절한 아동보호나 직업훈련 없이 공공부조 수혜자인 여성들에게 일을 요구하는 제도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 사회복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표는 현재의 일을 강제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 재명명의 합법화(relabeling)
 - 자기 자신의 경험을 명명하는 권리는 모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주의자들에게 필요한 과제.
 - 여성주의 학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재명명할 권리를 갖게 되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됨.
 -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the personal is political)이라는 생각
 -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사고는 여성주의 운동 초기의 의식화행위와 관련되어서 처음으로 표현. 이 사고는 여성주의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것. 이런 생각은 “인간이 품고 있는 가치나 신념, 인간이 세운 목표, 인간이 추구하는 생활스타일의 형태” 등을 정치적인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해로부터 발전.
 - 여성주의적 원칙은 개인적인 행위나 행동을 사회구조와 연계시켜서 이해함. 사회운동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또 개인의 행동이 집단적으로 추구될 때 사회운동을 발생시킴. 제도에 도전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촉구.
 - 제도적인 구조의 변화는 개인들에게 그들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
- * 위와 같은 원칙들을 사회복지실천에 접목시키기는 매우 어렵지만 사회복지사들에게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할 수 있는 비전이나 과정을 제시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실천할 때보다 역동적인 도전을 가능하게 함.

■ 학습정리

1. 젠더의 의미와 시각,한계, 그리고 성인지적 측면의 성 불평등

1) 젠더(gender)의 개념

- 젠더(gender)는 섹스(sex)와 구별되는 문화적 성을 의미함.
- 교육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문화적 습득의 결과.
- 생물학적 몸의 조건이 여성이나 남성이나에 의거해 역할 및 지위를 구분하여 성역할 정체성을 학습함으로써 획득된다고 보는 것.

2) 성인지적 관점

- 젠더에 기반한 불평등한 차별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성적 불평등의 요소들을 근절해 나가는 것.

3) 젠더의 한계

- 젠더는 남성중심의 사회적 배열을 유지시켜 남녀 불평등한 성적 체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성 관념을 조장시켜 왔음.

4) 성인지적 측면의 성불평등

- 성인지적 정책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은 성 불평등한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인식을 전환하고 더 나아가 정책의 기초로 삼게 하는 것임.

2. 성인지적 사회복지실천의 원칙

- (1) 여성주의적 실천(feminist practice) 과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은 서로 공유하는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
- (2)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the personal is political)이라는 관점은 사회복지실천에서 환경 속의 개인(personin-environment)이라는 패러다임과 일치.
- (3)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도 함께 추구하는 사회복지사가 바로 여성주의 원칙에 의해서 행동

2주차 2강

여성과 복지국가

학습 목표

- 복지국가의 개념과 여성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를 이해하고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발전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복지국가의 개념과 여성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의 특성
2.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및 여성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복지국가의 개념

- 복지국가의 공통적인 특성
 - 사회구성원에 대한 최저수준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킴.
 -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직접적으로 여성의 삶의 여건을 형성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는 사회제도를 통해서 남녀관계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침.

2) 복지국가의 유형과 여성

- 에스핑앤더슨
 - 노동자가 본인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탈상품화 정도 등을 기준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또는 조합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하여 복지국가 유형론 정립함.
- 탈상품화 정도
 -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국가가 얼마나 금전적인 보상(급여)를 보장해주는가에 대한 것임.
 -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가라는 것을 의미.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
 - 공공부조를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둠.
 - 저소득층 선별 과정은 엄격하게 진행하여,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탈상품화 효과는 가장 낮은 정도.

(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탈상품화 효과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사회복지정책 역시 낮은 수준
 - 적극적인 사회보험을 이용하여, 각 계층별로 상이한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임.

(3)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 복지국가유형 중 사회복지정책이 가장 높은 수준
 - 사회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함하여 복지를 하고 있음.

* 에스핑앤더슨은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함.

<표>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

구 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주요 프로그램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보험	기초연금을 기본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급여단위	(혼인)가족	(혼인)가족	개인
급여수혜조건	자산조사	취업활동 및 사회보험 가입	시민권
급여와 서비스 질	시장에서 행한 역할에 따라 차이가 남	수평적 재분배 : 사회적 지위의 차이 유지(보상원칙)	수직적 재분배
여성의 삶	무보수 보호노동, 높은 취업률(대부분 불완전 고용)	보호 및 가사노동 담당자로서의 여성(복지국가의 자원),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낮은 취업률	높은 취업률, 공공서비스망을 통한 보호 및 가사노동 부담 경감
탈상품화 수준	최소화: 사회적 위험 발생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적 연결망	중간 수준	높은 수준
주요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출처 : 박영란 외(2001).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 28.

3)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

(1) 성별분업

- 복지국가는 남성이 가장 및 그에 의존하는 가정주부라는 기존의 성별분업 형태를 그대로 수용하여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만들.
-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복지국가가 가정하고 있는 여성들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들은 어머니, 임금노동자로서의 이중고를 겪거나 자신의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김.

(2) 여성빈곤

-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이라는 계급의 문제만 부각될 뿐 여성빈곤의 차이와 원인에 대한 분석은 주목받지 못함
- 노동력의 성에 근거한 임금차별, 고용차별 등 불평등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상품화 현실을 무시함

(3) 의존형태의 변화

- 여성의 의존형태가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영역으로 바뀜
- 공공정책은 여성들에게 경제활동과 고용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경제적 자립 가능성 높여줌

4) 여성주의적 복지국가 유형 분석

(1) 세인즈베리

- 가족 이데올로기의 사회정책에 대한 영향, 복지혜택과 기여의 단위와 권리의 본질, 가족 내 성별 노동분화를 강화하는 다른 정책의 영향,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 여성노동의 유급 또는 무급의 정도에 따라 사회정책 모델을 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과 개인적 모델(individual model)로 유형화함
- 부양자 모델에서의 가족 이데올로기
 - 결혼을 중시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엄격한 노동분화를 강조
 - 남편은 가장이며 전일제 고용에 종사하고 가족구성원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 아내의 의무는 좋은 가정을 꾸미고 가족을 돌보는 것
 - 성별분업은 가족법, 사회적 및 노동규칙과 세금체계에 명문화되고 있고, 일상의 생활양식을 형성
 - 복지혜택의 단위는 가족이며 최저임금과 보수는 가족 임금의 개념을 반영
 - 남편은 부양자의 지위를 아내의 피부양자의 지위를 갖고 가족 또는 가구는 사회보험의 기여와 조세의 단위이며, 남성의 취업과 소득에 우선권이 주어짐.
- 개인적 모델에서 가족 이데올로기
 - 남편과 아내가 그 자신의 소득 유지에 책임이 있으며, 남편과 아내는 재정적 유지와 자녀의 보호를 공유
 - 복지의 혜택, 기여 및 조세의 단위는 개인이고 피부양자에 대한 공제나 수당이 없음.
 - 노동시장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재생산 활동의 많은 부분과 가족보호가 공적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사회보장체제에서의 수급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
 - 가족보호노동의 사회화는 여성의 이중고를 경감시키며, 노동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조세제도를 통해서 결혼 후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 개인적 모델의 특징은 성에 의한 계층화나 가족형태에 의한 계층화가 줄어들음.
 - 여성이 자신의 노동과 개인중심의 조세를 통해 복지국가에 기여하고 자신의 수급권을 갖게 됨.
 - 이렇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성친화적이며 가족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음.

<표2> 사회복지정책의 부양자 모델과 개인모델

차 원	부양자 모델	개인적 모델
가족 이데올로기	결혼형태 선호/엄격한 성별분업 남편 =소득, 아내 = 가족돌봄	선호하는 가족형태 없음/역할 분업 남편 =소득, 아내 =소득/가족돌봄
수급권	부부간 차이 있음	부부간 동일함
수급권의 근거	생계부양자	시민권 또는 거주조건
복지혜택 수여자	가장/세대주	개인
복지기여단위	가구 또는 가족/세대	개인
조세	부부합산과세 : 피부양자 공제	부부별산과세 : 동등 세금공제
고용 및 임금 정책	남성에게 우위	양성에게 동일함
보호영역	사적	공적(강력한 국가 개입)
보호업무	무급	복지 수급에 기여
해당국가	영국, 아일랜드, 독일	스웨덴

출처 : Sainsbury(1994 : 153), 조흥식 외(2000).여성복지학. p.105 재인용.

5) 성통합적 복지국가

- (1) 최근 북미, 유럽, 오스트리아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성(gender)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재구조화
- (2) 전통적인 남성가장 모델에서 벗어나 여성을 고려한 양성모델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3) 여성의 돌봄노동의 성격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여성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성역할에 대한 고려가 중요

2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및 여성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 (1) 여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이며, 전면적인 여성억압이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적 개입의 총체로 규정
-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포괄적인 국가정책
- (3) 여성문제를 단순히 여성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모든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인

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사회제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동원칙의 정책

2) 여성복지정책의 기본 목표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3)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발전

(1) 해방이후~1950년대

-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은 해방 이후 1947년 미군정기의 부녀국 설치에 따른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시작
- 1950년대 가족법이 제정되었으나,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성불평등적 내용으로 이루어짐.
- 1950년대 부녀복지정책은 부녀 및 아동 구호와 전쟁미망인 구호사업이 주를 이룸

(2) 1960년대

- 윤락여성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부녀직업보도소, 부녀상담소와 전쟁미망인을 위한 모자세대의 보호사업에 중점을 둠

(3) 1970년대

- 경제성장정책과 함께 향락산업이 번창하던 시기로 여성의 성이 상품화, 여성들은 저임금 노동력에 내몰리게 되었으며 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 대우를 받음

(4) 1980년대

- 민주화운동의 확산과 함께 여성운동이 활기를 띠게 됨
- 부녀복지라는 용어 대신 여성복지라는 용어를 사용
- 1983년에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
- 국무총리산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 1984년에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
-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
- 198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담당기구를 가정복지국으로 승격 개편
- 1989년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남녀평등과 모성보호를 더욱 강화하였고,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였으며 가족법을 남녀가 평등하게 대폭 개정
- 1980년대에 이르러 여성문제에 대한 접근은 특정 여성계층 외에 일반여성으로 정책적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요보호여성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차별해소나 일반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유도 등을 다룬 여성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5) 1990년대 이후

-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은 그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고 여성의 인권문제가 대두된 시기
-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 1994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5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 1997년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 1998년에는 여성할당제를 정당법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제1차 여성 정책기본계획(1998-2002년)을 수립하여 이행
- 1998년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
- 1999년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성희롱과 성차별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6) 2000년대 이후

- 2001년에는 여성부의 신설
- 2003년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 2004년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
-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정책을 이관받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 2008년에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
- 2008년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
- 2013년에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시행
- 2014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 변경하고 2015년 시행
- 2015년에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2015-2017)
 -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 주기로 수립(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15.7)되어 양성평등정책기본 계획으로 명칭 변경
- 2018년에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2018-2022)

4) 여성복지 관련법과 여성의 법적 지위 취득과정

(1) 여성복지 관련법

- 여성발전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 여성발전기본법
 - ◆ 1995년 12월 제정, 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 ◆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 ◆ 여성 차별 문제에 중점을 둔 <여성발전기본법>과 달리 <양성평등기본법>은 남성도 성별 분리나 성별 고정관념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 ◆ 2015년 개정
 - ◆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
 - ◆ ‘양성평등’의 개념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명시
 - ◆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 양성평등이라는 정책 목표 변화에 맞춰 '모성보호'에 집중됐던 시책도 '부성보호'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확대되었으며, 남성의 육아휴직 등도 활성화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법 개정에도 맞춰 매년 7월 1~7일로 지정되었던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바뀐.
-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 1987년 제정, 육아휴직 등이 제도화됨.
 - ◆ 제7차 개정을 거쳐 2007년 12월에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법제명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 ◆ 2007년 개정,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
 -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 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부터 30시간까지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
 -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과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여성의 법적 지위 취득과정

- 시대별 여성의 법적 지위 취득과정
 - 조선 말기부터 일제시대
 - ◆ 이 시기에는 근대 법제의 수용과 함께 여성의 지위가 대폭 향상됨
 - ◆ 일제하 가족법 규정은 법률혼주의 도입, 일부일처제, 여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근대적 제도를 도입
 - 헌법 제정 이후부터 1950년대
 - ◆ 제헌헌법(1948. 7. 17)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선언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배척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이 남녀평등사상에 기초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함
 - 1960년대부터 1970년대
 - ◆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오히려 남녀 간의 불평등은 심화됨.
 - 1980년대
 - ◆ 제5·6 공화국 헌법에 남녀평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신설,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 1990년대
 - ◆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1995년), 가족법 개정(1990년), 국적법의 개정(1997년)과 국제사법의 개정(2001년)
 -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 ◆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여성 관련 법률들은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법의 제정과 개정에 한층 더 발전됨.

■ 학습정리

1. 복지국가의 개념과 여성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의 특성

1) 복지국가의 개념

- 복지국가의 공통적인 특성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최저수준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킴.

2) 복지국가의 유형과 여성

-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가라는 것을 의미.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
 - ◆ 저소득층 선별 과정은 엄격하게 진행하여,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탈상품화 효과는 가장 낮은 정도.
 -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탈상품화 효과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사회복지정책 역시 낮은 수준

- ◆ 적극적인 사회보험을 이용하여, 각 계층별로 상이한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임.
-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 복지국가유형 중 사회복지정책이 가장 높은 수준
 - ◆ 사회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함하여 복지를 하고 있음.

3) 여성주의적 복지국가 유형 분석

- 세인즈베리는 가족 이데올로기의 사회정책에 대한 영향, 복지혜택과 기여의 단위와 권리의 본질, 가족 내 성별 노동분화를 강화하는 다른 정책의 영향,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 여성노동의 유급 또는 무급의 정도에 따라 사회정책 모델을 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과 개인적 모델(individual model)로 유형화함.
 - 부양자 모델에서의 가족 이데올로기
 - ◆ 남편은 가장이며 전일제 고용에 종사하고 가족구성원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 아내의 의무는 좋은 가정을 꾸미고 가족을 돌보는 것.
 - 개인적 모델에서 가족 이데올로기
 - ◆ 남편과 아내가 그 자신의 소득 유지에 책임이 있으며, 남편과 아내는 재정적 유지와 자녀의 보호를 공유

2.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및 여성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여성정책의 개념

- 여성문제를 단순히 여성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모든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사회제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동원칙의 정책

2) 여성복지 관련 법

- 여성발전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2014년 5월 28일 제정, 2015년 7월 1일 시행)
 - 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30일 제정, 공포
 - 1995년 제정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
-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07년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은 제7차 개정을 거쳐 2007년 12월에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법제명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3주차 1강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

학습 목표

- 여성주의 상담의 개념 및 상담기법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다.
- 여성운동의 개념과 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여성주의 상담의 개념 및 상담기법
2. 여성운동의 개념과 역사

1) 여성주의 상담의 개념

- 여성주의적 이론과 방법들을 상담에 도입하여 여성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나 사회현실구조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며 성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상담이론

2) 여성주의 상담의 특성

- (1) 여성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서 기인.
- (2) 여성주의 상담과 여성상담은 구분해야 함.
 - 단순히 상담의 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하면서 여기에 상담의 이론을 대입시키는 것만은 아님
- (3) 상담자는 여성주의적 패러다임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스스로의 인식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내담자의 이러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가는 적극적인 역할자가 되어야 함

3) 여성주의 상담의 목표와 실천

- (1) 여성주의 상담의 목표 : 여성주의 상담이 목표로 하는 바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의식화를 통하여 스스로 여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배양에 있음.
- (2) 내담자의 의식화, 현재 문제의 해결, 인간관계 재조정, 성장
 - 자존감 향상, 긍정적 자아상 형성 등을 가능하게 함
- (3) 여성들의 진정한 치유를 통하여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상담
- (4) 여성의 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여성이 존재하는 삶의 장이 어떻게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함께 이해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조직의 치유를 동시에 추구

4) 여성주의 상담자의 자세

- (1) 상담
 - 매우 정교하고 고도의 정신집중적인 활동이므로 상담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확고한 흥미와 훈련된 능력이 필요
- (2) 상담자
 - 사회구조의 특성이나 사회적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상담이론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내담자의 삶의 과정과 고통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함
- (3) 자율적 의지 존중

내담자가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함

(4) 수용

- 여성의 증상을 병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성장과 적응의 차원에서 이해

(5) 상담자가 지나치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 내담자가 받는 정서적 충격과 불안감 고려

(6) 여성들에게 지지체계가 있음을 지각하고 자조적인 힘을 강화

5) 여성주의 상담의 기법

(1) 성 고정관념의 실체를 파악하고, 내담자의 문제해결 방안이나 내용 안에 성 고정관념이 내재하여 있는지 유의해야함

(2) 상담자

-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내담자의 의식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의 내부적 · 외부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 권위자, 해석자가 아니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내담자를 판단하거나 상담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문제해결 방안을 결정하지 않음
- 내담자가 인지적, 경험적 차원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내담자가 우울, 공포, 분노, 불안, 스트레스 등 일상화된 심리적 억압을 표출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감정적 혼란이 내담자 자신에게서 기인된 것이 아님을 인식시킴

(3) 상담의 궁극적 목표

- 내담자가 오랜 인식과 행동 틀을 교정하고 독립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음
- 인적,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잠재능력에 이르기까지 내담자가 자신의 자원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4) 여성주의 상담

- 다른 이론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식 변화를 지향한다 하여도 상담의 기본 원리를 간과하지 않음
- 여성주의 상담은 내담자의 적극적 자의의식 고양과 개발이 중요.
→ 자기분석 모형을 활용하거나 자기주장훈련,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 향상, 의식고양 기법, 임파워먼트 기법 등을 활용

6) 여성주의 상담과 사회복지실천

(1) 여성주의 상담을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체계 정비가 필요

- 여성상담기관이나 관련 조직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인 경우가 많음
- 여성운동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기관의 경우에도 그 주요 활동가들은 사회복지 기반

(2) 사회복지 영역에서 여성주의 상담의 방법론 적용이 확대되어야 함

- 진정으로 여성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목표 달성이 어려움
- 여성주의 상담은 현재의 여성운동단체나 여성상담소만의 고유한 행동이론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방법론으로 정착되어야 함

- (3) 여성주의 상담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인 능력 고양에 필요
-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 이외에도 상담의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음
 - 내담자의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돕는 기술과 절차, 상담사례와 상담기관을 관리하는 기법 등 상담가로서 배우고 익혀야 함. 여기에 여성주의적 의식과 이론의 접목을 위한 새로운 학습이 추가로 필요함
- (4) 여성주의 상담, 여성운동, 사회복지의 접점을 찾아 통합적 발전이 필요
- 최근 여성상담기관이 다양화로 과거에 비하여 여성운동의 기반을 상실하기도 함.
 - 진정한 여성주의 상담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과 공고화 노력이 더욱 필요
- (5) 사회 변화라는 공동된 목적에 집중
- 여성주의 상담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회복지와 접점을 이루어야 함.
 - 여성주의 상담은 사회복지의 역동적인 실천기술에서 배워야 함.

2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및 여성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여성운동의 개념과 범주

(1) 여성운동의 개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노동권, 평등권, 생존권 등의 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사회운동

(2) 여성운동의 범주

- ①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운동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여성단체 중심의 운동으로 결집되는 경향이 있음
- ② ‘전국여성단체명록’에서는 ‘여성이 개인이 아닌 조직활동을 통해 여성문제와 지역사회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자발적인 집합체’라고 규정, 이것은 여성단체의 범주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고 있음
- ③ 여성단체는 단순한 여성들의 모임에서 벗어나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조직체나 여성문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하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체.

2) 여성운동의 역사

(1) 해방 이전

- 한국에서의 여성운동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국내외적으로 소위 근대화의 격동기와 때를 같이하여 시작됨.
- 처음으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순성여학교를 설립한 찬양회가 대표적임. 이후 대한부인회, 대한여자홍학회, 진명부인회, 여자교육회 등 많은 여성단체들이 조직됨.
- 3.1 운동은 침체된 여성운동에 새로운 장을 제공하고 종래 여성운동과는 또 다른 변화

4 | 여성복지론

- 1920년대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해결에 발 벗고 나서게 되어 여성 자신들의 문제를 깊숙이 인식하고 자신을 해방하려고 함.
- 신여성운동의 절정은 1927년 근우회의 조직활동
 - 근우회는 당시 식민지하 민족해방운동의 일대 통합조직인 신간회의 창립에 자극
 - 분산된 여성운동계도 단결된 한 개의 조직으로 그 역량과 실천상의 효과 극대화
- 근우회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차별 철폐, 일체 봉건적 인습과 미신 타파, 조혼 폐지 및 결혼의 자유, 인신매매 및 공창 폐지, 농촌부인의 경제적 이익 옹호, 부인노동의 임금차별 철폐 및 산전후 임금 지불, 부인 및 소년공의 위험노동 및 야업 폐지를 내걸고 민족 해방, 계급해방, 여성해방의 기치를 올림

(2) 해방 이후~1960년대

-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 :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근로여성의 보호 및 모성보호를 명시하면서 일하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시작
- 1956년에 여성법률상담소가 설립 : 가족의 예측으로부터 고통 받는 여성에 대한 상담활동이 시작
- 1959년에는 8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창립되었고, 1960년 최초 여성 관련 연구기관인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가 창설됨

(3) 1970~1980년대

- 70년대 여성운동의 시작은 크리스찬 아카데미(Christian Academy)의 ‘여성사회’ 교육의 영향으로 ‘여성인간선언’이 발표됨
- 1973년에는 63개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범여성가족법 개정 촉진회’가 결성됨
- 1977년에는 대학에 여성학이 도입, 개설되면서, 여성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연구되어 새로운 실천과 방법론이 모색되기 시작함
- 1983년에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창립됨
- 1987년에는 21개 단체를 주축으로 진보연합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족되었으며,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여성민우회가 창립됨
- 1989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9년에는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가족법 3차 개정 이 이루어져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함

(4) 1990~2000년대

-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1994년에는 공무원 육아휴직제도가 시작됨
-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1994년에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1997년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2005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됨
- 2001년에는 여성부가 신설됨, 2005년 들어 여성가족부가 출범하면서 여성운동의 핵심 주요 사업으로 빈곤의 여성화 방지, 성평등 사회보장 및 가족정책 확산을 위한 활동을 실시함

3) 여성운동과 사회복지실천

(1)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과 실천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민감해야 함
- 새로운 논제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 유도,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슈 제기, 법 제정 등 제도화를 위한 조직적 노력 등이 여성운동으로부터 학습되어야 할 과제임

(2) 여성의 문제가 사회복지의 해결 과제

-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결핍의 상황을 제거하는 것.
- 때문에 여성과 연관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사회복지실천의 당면한 과제

(3) 여성친화적인 사회복지실천의 미래

- 지금까지 여성이 신체적 · 경제적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는 평등한 조건으로 권력투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
- 욕구의 분석과 이에 의한 가치 창조, 환경의 이해와 영향요인 분석, 대상자 특성 분석에 기초한 실천계획 수립 등 다면적 과정과 단계에서 여성의 시야와 관점을 중심으로 한 사업의 재배치, 전환, 피드백 등이 필요함

(4) 사회복지 운동가의 발굴

- 사회단체, 주민조직과의 연대를 유지하며 지역에서의 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 진정한 사회복지운동가의 발굴과 양성이 필요함

(5) 사회복지의 주체의식

- 지금까지의 여성운동은 여성 스스로가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녀왔고, 상대적으로 여성이 처한 빈곤한 여러 조건이 투쟁 정신을 이끌어 냈다고도 볼 수 있음
- 여성운동에서 보여준 활동가들의 주체의식 내지 주인의식은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중요한 모델임

(6) 의식개혁운동으로서의 사회복지실천

- 진보적 여성운동에 의해 제기된 여성문제는 기존 사회복지정책에서 확립된 인식과 이론들을 재고찰 하도록 하였고,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성역할이나 성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조직 및 정책의 기본적 원칙, 구조, 효과를 이해하도록 주지하게 함

(7) 지역밀착 활동의 강화

- 현재는 주요 여성운동조직이 지역 기반의 활동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
- 사회구성원이 없는 사회운동은 허구라는 점에서, 지역밀착형 운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

(8) 인간운동, 남녀공존운동

- 여성운동은 인간운동이며 남녀공존운동이라는 점에서 인류 공존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 학습정리

1. 여성주의 상담의 개념 및 상담기법

- 여성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나 사회현실구조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여성의 경험을 이해
- 여성주의 상담과 여성상담은 구분해야 함.
- 자기분석 모형을 활용하거나 자기주장훈련,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 향상, 의식고양 기법, 임파워먼트 기법 등을 활용

2. 여성운동의 개념과 역사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노동권, 평등권, 생존권 등의 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사회운동

3주차 2강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학습 목표

- 사회보험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험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에 대해 알고 젠더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사회보험과 여성
2.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1) 사회보험의 기능

- 사회구성원들의 생애사 가운데 발생가능한 위험
- 즉 빈곤, 실업,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다양한 급여형태를 통하여 유사시의 소득보전의 기능

2) 사회보험의 종류

- (1) 국민연금: 노령으로 인한 노후의 빈곤방지
- (2) 건강보험: 질병에 의한 소득상실 방지
- (3) 산업재해보상 보험: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인한 비용 지급
- (4) 고용보험: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위한 비용지급

3) 사회보험의 특성

- (1) 사회보험: 전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가입의 원칙
- (2) 지불보험료: 소득비례를 원칙으로 하지만 급여제공은 더 필요한 정도에 따라 우선하고 있는 수지불상등의 형태로 소득재분배를 구현하고 있음
- (3) 복지국가 초기 남성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시스템은 여성을 세대주에 의해 부양되는 피부양자로서 최소한의 급여만을 인정함

4) 사회보험과 젠더

- (1) 국민연금과 젠더 소외 : 연금수급권
 - 기본원칙: 1소득 1연금제
 - 여성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성과 동일하게 취업하여 연금을 가입
 - 또는 소득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는 임의가입자로서 가입.
 -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수급권은 배우자로부터 부속되어 발생하는 파생적 수급권으로 수동적인 위치임
 - 외국의 사례1. 일본
 - 2004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전업주부에 대한 급여확대에 집중
 -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일정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 그러나 전업주부에게 본인부담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려면 여성이 가정내에서 행해지는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비용이 먼저 지불되어야 하는 과제가 선행되어야 함
 - 외국의 사례2. 미국
 - 여성의 연금수급을 배우자에 의한 파생적 권리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미국의 전업주부 연금제는 배우자의 보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 취업여성보다 전업주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관대하게 구성하고 있음

(2) 이혼시의 연금분할제도

- 연금분할제도
 -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획득한 연금수급권을 이혼 시 부부 공동의 몫으로 분할하는 제도
- 연금분할제도 도입 배경
 - 사회보장체계의 중심이 여성의 경우 남성배우자에게 의존체계였으나 이혼이라는 기존 배우자 의존체계의 단점은 곧바로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
- 연금분할제도의 의의
 - 가정내 부부간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소득활동과 비소득활동에 대하여 동등한 법적 경제적 가치를 부여함
 - 여성이 담당해왔던 무급가족 돌봄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권리화 함
 - 육아 및 가사노동 등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못했던 여성이라도 배우자의 연금분할수급권을 통해 노후의 소득보장이 일정부분 가능하게 됨
- 연금분할의 요건
 -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본인이 60세에 달한 때
 - 60세가 된 이후 노령연금 수급자인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 이혼 이후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이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 외국의 사례1. 독일
 - 연금분할시기를 혼인 중에도 가능하게 하는 관대한 형태 : 혼인기간이 25년 이상인 부부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연금분할을 이용할 수 있음
- 외국의 사례2. 일본
 - 혼인기간 중 당사자간 합의한 비율대로 분할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음
 - 연금은 '부부단위'라고 하는 전통적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이 우선임

(3) 유족연금

- 한 가구에 있어 주요 소득자의 상실에 따른 소득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대비 제도. 그 권리는 사망한 배우자의 보험료 각출에 기반함
- 지급기준
 -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가입자 등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율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유족의 기준 : 배우자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로 규정하고 있음(국민연금법 제 72~73조)
- 수급권의 효력
 -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됨
 - 18세 미만의 자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반적으로 배우자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동안 급여를 제공하고 이후 55세까지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외국의 사례1. 일본
 -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의 유족에게 지급
 - 유족의 범위: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
 - 유족연금지급제한 규정: 배우자가 850만 엔 이상의 수입이 5년간 계속된 경우, 3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유족배우자는 연금수급기간을 5년간으로 한정
- 외국의 사례2. 미국
 - 고령의 유족배우자에게 피보험자의 연금액의 100%를 지급함
 - 혼인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원 배우자에 대해서도 유족연금이 지급됨
 - 한 가구의 주요 소득주체가 되지 못하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연금기록보다는 배우자의 연금기록을 이용하여 수급하는 편이 유리함, 취업인센티브를 억제하는 현상을 낳음
 - 유족연금으로 받는 급여가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노후의 여성빈곤의 유형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음

(4) 출산크레딧(2008년 1월부터)

- 자녀를 둘 이상 낳은 국민연금 가입여성의 연금가입 기간을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인정기간
 - 자녀 2명 : 12개월, 자녀 3명: 둘째자녀 인정 12개월에 자녀 한명마다 추가 18개월 합한 기간임(국민연금법 제19조)
- 취업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재진입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연금가입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
- 외국의 사례1. 독일
 - 10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험료 납부가 없어도 자격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함
- 외국의 사례2. 프랑스
 - 자녀 1인당 3년간의 각출면제기간으로 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0%의 연금증액이 인정됨
- 외국의 사례3. 일본
 - 자녀가 3세에 달할 때까지 육아휴직 및 가족개호 휴직기간 중 보험료 부담을 면제
 -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표준보수월액이 저하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실제로 저하한 임금에 기초하여 산정
- 시사점
 - 정책 취지가 여성의 연금권 보장을 통한 소득보장의 목적 보다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서 제안되었다는 한계
 - 주로 근로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업주부, 자영업자 배우자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의 여성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5) 연금제도에서의 젠더 소외

- 사회보험의 전제 : 취업기간 동안의 보험료 각출을 통해 수급권 확대
- 여성의 생애기간동안의 취업구조는 남성처럼 지속적이지 못함.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정규직 고용형태와 적정한 소득에 대한 여성들의 진입이 어려움
- 국민연금 이외의 사회보험에서의 여성의 가입률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2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1) 공공부조 제도

- (1)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금 및 현물급여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소득보장 제도
- (2)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3) 근로복지적 관점
 -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의 참가조건으로 생계비의 지급
- (4) 공공부조대상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2) 공공부조와 젠더

- (1) 빈곤의 여성화
 - 빈곤계층에 속하는 여성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원인
 -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에서의 참여와 사회보장에서의 배제
 - 경제활동자체의 진입이 어려움, 비정규직의 여성화, 근로빈곤층
- (2) 자활사업과 젠더
 - 노동 능력이 있는 수급대상자에게는 취업과 자활을 조건으로 하여 급여를 제공하여 빈곤탈피 시도, 이를 근로조건부 수급이라 함
 - 자활사업의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의무참가자
 -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액이 선정기준을 상회한 경우, 수급자로서의 자격 상실하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의 여성참가자 증가
 - 남성에 비해 약 70%를 차지하고 자활사업내용에 따라 90%이상의 참가비율을 나타내기도 함
 - 현재 여성대상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전통 직종은 임금이 낮아 자립의 가능성이 낮음
 - 다양한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이 가능한 직종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3) 사회수당과 여성

(1) 사회수당제도 개관

- 임금체계중심의 사회보장제도는 가족 수나 부양가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가족수당과 같은 사회수당제도가 필요함
- 사회수당제도의 배경
 - 인구정책적 관점 : 아동의 생활보장 구체화 시키는 현금급여, 자녀출산 장려 측면
 - 아동복지적 관점: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수당제도를 마련하여 건강한 양육이 이루어져야 함

(2) 아동수당과 젠더

- 핵심질문: 수급권자를 누구로 지정하고 있는가
 - 일본: 주로 부친을 수급권자로 하여 부친의 소득수준에 의해 수급자격의 유무가 결정됨
 - 핀란드: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젠더문제와 연계하여 가족 안에서 여성의 위치를 향상하고 남녀평등을 이루고자 하여 여성을 수급자로 지정함
- 아동수당의 수급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가족임금을 여성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됨
 - 여성에게도 노동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의 위치를 승인할 수 있어야 함
 - 수급권자를 남성에게 주는 것은 여전히 성별, 노동자현실적으로 아동의 주 양육자의 역할을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전형적인 젠더격차를 보여주는 것임

■ 학습정리

1. 사회보험과 여성

1) 사회보험의 기능

- 사회구성원들의 생애사 가운데 발생가능한 위험

2) 사회보험의 종류

- 국민연금: 노령으로 인한 노후의 빈곤방지
- 건강보험: 질병에 의한 소득상실 방지
- 산업재해보상 보험: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인한 비용 지급
- 고용보험: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위한 비용지급

3) 사회보험의 특성

- 사회보험은 전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가입의 원칙
- 여성을 세대주에 의해 부양되는 피부양자로서 최소한의 급여만을 인정

2.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1) 공공부조 제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금 및 현물급여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소득보장 제도
-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의 참가조건으로 생계비의 지급
- 공공부조대상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2) 공공부조와 젠더

- 빈곤의 여성화
- 자활사업의 여성참가자 증가

3) 사회수당과 여성

- 임금체계중심의 사회보장제도는 가족 수나 부양가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가족수당과 같은 사회수당제도가 필요

4주차 1강

여성 교육

학습 목표

- 양성평등과 양성평등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여성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양성평등교육의 개념
2. 여성교육의 발전방안

1) 양성평등의 이해

(1) 양성평등의 개념

- 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남녀가 신체적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평등으로 본질적 특성에 의해 평등함.

(2) 양성평등 차원에서의 평등의 의미

- 기회의 평등
 - 법과 제도상으로 어느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 그러나 사회가 체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구조 속에서 기회의 평등은 간접적인 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음
- 조건의 평등
 - 남녀가 갖는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
 -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비교대상이 동등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
- 결과의 평등
 - 평등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 우대조치 같은 일종의 '역차별'을 감행
 -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강제성을 띤 평등
 - 남녀평등이 달성될 때까지 취해지는 조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해당

2) 교육과 여성의 역할

(1)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음

- 따라서 그 사회가 남성 혹은 여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남녀의 교육내용이 정해짐

(2) 현대사회로 오면서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학교교육이 오히려 남녀간의 차별적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성불평등을 재생산

- 여성교육의 목적은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성별로 분리된 문화와 가치체계에 더 잘 적응하게 되는 것

(3) 남성을 양육, 보호, 내조하는 지위에 한정되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일을 하거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금지되었음

(4) 남편과 그의 가문 번영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준비과정이 여성교육이었으며, 따라서 여성교육은 한정된 삶의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됨

- (5) 형식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성 뒤에 있는 실질적인 불평등이 제거되려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남녀차별의식에 변화로,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평등이념이 확산되어야 함.

3)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1)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

- 양성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남녀 모두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양성평등교육의 목적

- 자아실현, 자립적 태도 배양, 타인 존중, 잠재 인력 개발

(3) 양성평등교육의 내용

-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태도를 갖지 않으며,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연결하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된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촉진
- 학생이 성정형화된 교육경험을 갖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의 목적을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결정하는 자립적인 마음과 태도, 능력을 배양

(4) 양성평등교육 확산의 한계점

- 양성평등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다 알고 있다는 분위기임.
- 양성평등교육의 초점은 알고 있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임.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는 것이 중요함.

4)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 차별

(1)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 차별의 개념

- 성역할 고정관념
 -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성별에 따라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
- 성역할 발달 과정
 - 가정의 부모와 학교의 교사들에 의해 아이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습득하며 성장하게 됨
- 성 차별
 - 성구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이 행동으로 옮겨지거나 표현된 것

(2) 생활 속의 성 차별 예

- 무거운 짐은 남자가 짐
- 요리는 여자가 함

- 공대는 남자가 다님
- 남자는 울면 안 됨
-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함
- 여자는 얌전해야 함

(3) 성역할 고정관념 깨기

- 트로피 남편(Trophy Husband), 미스터 맘, 홈 데디, 요리하는 남편, 아이 보는 아빠 등의 증가
- 성역할 고정관념을 양성평등의식으로 전환하는 노력 필요

(4)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성차별 내용

- 교과서 속 성차별 사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 교과서 속 삽화, 이미지, 표현 등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내포하는 표현
 - 남성은 활동적인 이미지를 강조, 여성은 다소곳하고 얌전한 이미지
 - 체육활동을 묘사하는 삽화에서도 응원단은 모두 여자, 심판과 감독 및 선수는 모두 남자
 - 한 초등학교 체육 교과서에서는 사춘기 신체 성장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 내용과 관계없이 남학생은 ‘힘이 세다’ ‘운동을 좋아한다’ 등의 표현들과 함께 튼튼한 신체를 강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여학생은 ‘예쁘다’ ‘날씬하다’ 등 외모를 묘사하는 표현들 속에 허리에 손을 올리고 귀여움을 강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남학생은 푸른색의 상의와 바지를, 여학생은 분홍색의 원피스를 입었음.
 - 3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남학생은 축구를 좋아하는 것으로, 여학생은 분홍색 가방과 인형을 떠올리는 것으로 묘사함.
 - 4학년 사회 교과서 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남성으로 그려졌고,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모두 남성으로 제시됨.
 - 초등학생에게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시 교과서 속에 스며든 성 역할 고정관념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함.

5)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1) 양성평등교육의 의미

- 소극적인 양성평등교육
 - 남녀 양성에게 똑 같은 교육의 목적, 기회, 과정 내용 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
- 적극적인 양성평등교육
 - 남녀 양성이 동일한 학습 성취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을 활용하는 교육
- 비판적인 양성평등교육
 - 양성 평등한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비판적인 의식과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2) 양성평등 구현 방법

- 양성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 학생들이 남성적임과 여성적임에 대한 성 고정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교육 내용을 강조
 - 각 교과에 양성 평등적 시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적극 반영
 - 각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제시 방식을 양성 모두에게 친화적인 형태로 바꿈
 - 교과서의 내용이나 삽화에 여성 인물을 남성 인물과 비슷한 비율로, 그리고 비슷하게 비중 있게 등장시킴
 - 사회에 편재해 있는 성에 관한 고정 관념을 배제하고,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
 -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공정하게 소개
 - 여성 관련 내용을 교과서의 주변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본문 속에 주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제시
 - 성차별을 반영하는 언어 표현을 자제하고, 성평등한 언어 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

(3) 양성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수업

- 성차별이 제거된, 양성 평등한 수업 방안
- 양성 평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양성 평등 의식 함양 수업

(4) 양성평등교육 관련 정책 방안

- 국가 차원의 확고한 계획 수립, 성 평등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교육 관련자들의 양성 평등의식 제고, 양성평등의식 교육 시간 확보 등

(5) 양성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관련자의 역할

- 교육 행정직 및 전문직, 교장 및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 대중매체 등의 역할 제고 필요

2 | 여성교육의 발전방안

1) 여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

- (1) 급격한 사회 변화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2) 자신이 속한 사회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때로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정치의식을 키움
- (3) 남녀평등관에 입각한 여성의 인간화를 지향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임
- (4) 국제경쟁과 개방화 시대에 알맞은 여성교육을 하려면 현모양처나 여성성의 강조에서 탈피하여 자아실현과 인간화에 치중한 ‘탈(脫)여성교육’ 개념으로 바꾸어야

함

(5) 가사노동 분담과 모성의 공공성

- 학교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없는 여성의 능력 개발과 고용증대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이중부담과 여성노동에 대한 착취를 야기시킴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적 영역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이 이루어지고 공적 차원에서는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
- 최근 모성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들에 대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의 비용부담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모성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란 이슈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

2) 여성교육과 여성정책의 방향

(1) 다행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근대라는 시대적 · 문화적 발상이었다면, 21세기의 탈근대 문화는 ‘경계 무너뜨리기’와 ‘주변에서 중심 보기’라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함으로써 성 위계구조가 해체되고, 이항대립의 구조가 무너지는 양성적 성의 시대라는 징후가 나타나는 시점임

(2) 경제수준의 향상, 자녀 수의 감소,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 수의 증가에 딸만 있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여성교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실행되려고 함

(3) 여성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여성 관련 정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여성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 때 되도록 많은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해당되는 이슈부터 찾아 그 정책의 정당성 추구에 힘써야 함
- 여성정책을 펼 때 우선 국가의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있고, 남성 비교집단과의 동등한 인권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여성정책이 있음

(4) 미래사회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단순한 인력 개발만이 아니라 모성의 공공성, 성평등, 인간으로서의 잠재적 능력 개발과 건전하고 공평한 사회화의 전 부문에 관련되는 여성의 지위 회복을 위한 총체적 접근이 되어야 함

- 중앙 및 지방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담당자를 비롯하여, 학교행정가, 교사들이 교육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성인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입이 필요함
- 교육에서의 성 정체성을 타파하고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여성 관련 기금 등 각종 관련 정부기금과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구하는 관계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5)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서의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부분

- 교과서상의 성차별적인 교육 내용을 제거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교육과정에서 여성의 경

- 협과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과정을 개발함
- 교과 선택 및 학업 성취도의 성차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청됨

(6) 여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부분

- 비전통적인 분야에 여성 참여 정책 개발을 강화해야 함
- 남녀공학교육 확대 방침을 재검토하고 남녀공학교육이 갖는 성차별적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학습정리

1. 양성평등교육의 개념

1) 양성평등의 이해

- 양성평등의 개념
 - 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양성평등 차원에서의 평등의 의미
 - 기회의 평등
 - ♦ 법과 제도상으로 어느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 조건의 평등
 - ♦ 남녀가 갖는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
 - 결과의 평등
 - ♦ 평등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 우대조치 같은 일종의 '역차별'을 감행

2) 교육과 여성의 역할

-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음
- 따라서 그 사회가 남성 혹은 여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남녀의 교육내용이 정해짐

3)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
 - 양성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남녀 모두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양성평등교육의 목적
 - 자아실현, 자립적 태도 배양, 타인 존중, 잠재 인력 개발

4)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 차별

- 성역할 고정관념
 -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성별에 따라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
- 성역할 발달 과정
 - 가정의 부모와 학교의 교사들에 의해 아이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습득하며 성장하게 됨
- 성 차별
 - 성구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이 행동으로 옮겨지거나 표현된 것

2. 여성교육의 발전방안

- 1) 급격한 사회 변화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2) 남녀평등관에 입각한 여성의 인간화를 지향,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할 것
- 3) 자아실현과 인간화에 치중한 ‘탈(脫)여성교육’ 개념으로 바꾸어야 함
- 4) 가사노동 분담과 모성의 공공성

4주차 2강

여성의 경제활동

학습 목표

- 여성 경제활동 현황을 나열하고,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및 불안정 고용실태를 제시할 수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여성 경제활동 현황
2. 여성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1)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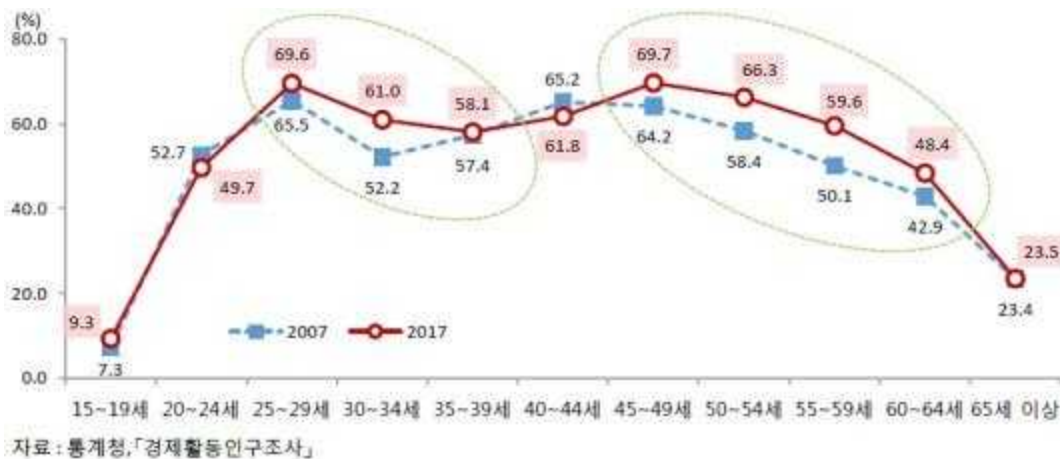
(1) 여성 경제활동과 성별관계의 변화

-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일과 가족 영역 관계에서 기업과 공장은 삶의 중심기관으로 재배치되는 일중심적 사회조직으로의 재편이 이루어짐.
- 취업을 선택하는 여성의 경우 일과 가족의 갈등이 전면화됨.
- 일과 가정의 양립체계가 수월한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과 비슷한 U자형 커브로 나타나며 결혼,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2)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도 여성인재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옴
- 남성 위주의 직장 내 분위기도 여성인재 활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옴
 - 2017년 여성의 고용률은 40대 후반이 69.7%로 가장 높고, 이어서 20대 후반(69.6%), 50대 전반(66.3%)순으로 높음
 - 여성의 고용률은 30대에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의 모양을 보임
 - 여성의 고용률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20~24세와 40~44세는 감소한 반면 다른 연령대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30~34세(8.8%p)와 55~59세(9.5%p)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함

[표1]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3) 교육 정도별 취업자

- 여성 취업자의 대졸이상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남성보다 5.9% 낮음

- 2017년 여성 취업자 중 「대졸 이상」의 비중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졸」이 38.5%를 차지함
- 남성도 「대졸 이상」이 4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졸(39.6%)」 순임
 - 「대졸 이상」 여성 취업자 비중은 2000년 19.2%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초졸 이하」, 2013년 「고졸」를 앞지른 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표2] 교육정도별 여성 취업자 구성비

[표3] 성별·교육정도별 구성비(2017년)



2) 여성경제활동의 장애요인

(1) 가사노동의 부담

- 우리나라 가부장제의 특징은 남녀 성역할의 극단적 분리방식임
 - 남성은 가정에서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의 가치를 높이고, 여성과 아이들을 사적 영역에 묶어두고 있는 편임
 -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이라기보다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가족을 위해 삶의 기쁨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임
- 가사노동에 대한 부정적 견해
 - 가사노동은 무보수 노동임
 -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주부라는 직업은 공적인 사회적 노동과는 달리 작업조건, 작업시간, 직업안정성, 보험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음
 - 가사노동은 사회노동과는 달리 개별 가족단위로 집안에서 고립된 채 행해지고 있음

(2) 일·가정 양립의 부담

-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니고 부모 공동의 책임이면서 사회 전체의 책임임.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여성노동자들이 직장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취업여성 친화적 보육정책의 재편이 요구됨
 - 오늘날 보편적 무상보육이 실현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보육시스템은 취업여성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OECD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우리나라에서 9시간 이상 보육을 원하는 취업여성은 많으나 장시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접근성이 취약함

[표4] 여성취업 장애 요인

(단위 : %)

		계	사회적 편견·관 행	직업의 식 책임감 부족	불평등 한 근로여 건	일에 대한 여성의 능력부 족	구인정 보 부족	육아 부담	가족돌봄 (육아제외) 1)	가사 부담	기타 ²⁾
여성	2011	100.0	20.2	2.9	11.6	1.7	2.3	48.8	-	6.9	5.7
	2013	100.0	19.6	3.0	10.9	1.3	2.2	49.6	-	6.7	6.7
	2015	100.0	20.4	2.9	11.6	1.7	1.5	50.5	-	6.6	4.8
	2017	100.0	22.9	2.5	11.3	1.3	1.5	47.9	2.4	5.3	4.9
남성	2011	100.0	22.6	5.7	10.2	2.1	1.8	43.9	-	5.5	8.3
	2013	100.0	22.0	6.7	9.0	2.0	1.4	43.5	-	5.3	10.1
	2015	100.0	22.6	6.3	10.0	2.6	1.0	44.4	-	5.3	7.8
	2017	100.0	23.9	5.6	9.2	2.3	1.2	43.9	2.0	4.6	7.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 1) 2017년 추가된 항목

2) '모르겠음' 포함

3) 여성과 노동정책

(1) 노동에 있어서 남녀의 임금차별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가로막아 인적자원 투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래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임

(2) 근로여건

- 2017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평균 근속년수는 4.7년, 월근로시간은 173시간, 월평균 임금은 229만8천원으로 나타남
-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근속년수는 2.5년, 월근로시간은 12.4시간 덜 일함
- 여성 월평균 임금은 전년(220만3천원)보다 9만5천원 증가하였으며, 남성 임금의 67.2% 수준으로 2015년 이후로 여성의 임금수준이 증가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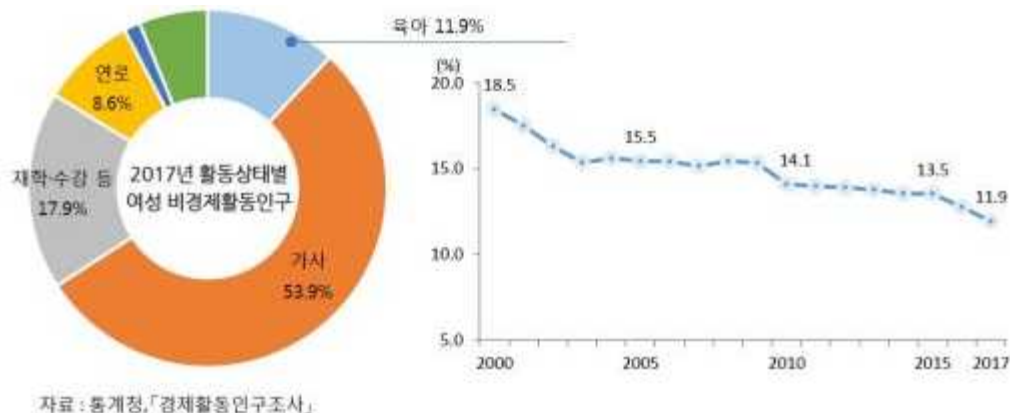
[표5] 근로시간과 임금수준



(3) 경력단절 여성

- 2017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8만5천명으로 전년(1,062만2천명)보다 3만7천명 감소함
- 이 중 활동상태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가사」가 5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재학·수강 등(17.9%)», 「육아(11.9%)」 순으로 나타남
- 활동상태 중 「육아», 「재학·수강 등」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 추세이며, 「연로», 「기타」는 증가 추세임

[표6] 활동상태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4) 여성노동자의 불안정 고용

(1) 여성노동의 주변적 특성은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남

- 현재 노동 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되고 있고, 양자 간에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중 임금근로자를 살펴보면 같은 학력수준의 남성에 비해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나타내고,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 감소세가 남성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음
- 근로형태별 취업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7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성이 363만2천명으로 남성(294만6천명)보다 68만6천명 더 많음
 - 여성의 연령대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50~59세가 22.7%로 가장 높고, 이어서 60세 이상(21.8%), 40~49세(21.2%)로 높게 나타남

(2)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노동공급 감소 및 저조한 노동시장 복귀율

- 여성노동현장의 제반여건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여성이 결혼 및 자녀 출산을 경험하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음
-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원인
 - 양질의 보육기관 부족과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인식의 잔재
 - 자녀 양육 및 교육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 기업에서의 보이지 않는 장벽과 차별
 -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를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인 근로여건 등

(3) 경력단절 후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하향 취업으로 평생소득의 손실을 고려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입이 있어야 함

(4)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분위기는 가사와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별분업화의 잔재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더디게 함.

(5) 여성고용의 질

- 여성의 경우 연령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고용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여성비율이 높다는 것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력이나 교육수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낮음

(6) 최근 여성고용과 관련된 선진국 정책 흐름

- 선진국들은 국가적인 고용정책의 한 방향으로 여성고용 확대 정책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
- 선진국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정책방향
 - ‘성별격차의 축소’와 ‘일과 가족 양립 지원’
- 일과 가족 양립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영역
 - 보육서비스 확대, 모성휴가제도 개선, 시간제 근로의 보호와 권리 확대
- 보육서비스와 관련

- 스웨덴이나 프랑스처럼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조차 추가적인 시설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가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아동 연령을 계속 낮추어 가고 있음
- 모성휴가제도 역시 계속 강화되는 제도
 - 산전후 휴가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제도도 강화하고 있음
 -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의 도입

2 | 여성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1) 여성노동시장의 과제

- (1) 한국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비슷한 수준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으며, 이러한 주요한 원인은 뿌리 깊은 남존여비사상 등 성차별임
- (2)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여성근로자의 권익 향상, 보육지원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여성유휴인력의 활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노동시장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기존의 정책기조와 여성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됨
- (3) 법과 규제를 통해서 여성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여성고용정책에는 노동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경제학적 접근이 보다 강조되어야 함
 - 성차별은 규제나 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별 관계없이 생산성과 능력을 발휘할 때 개선될 수 있음

2)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방안

- (1) 출산율을 높여 고령화 속도를 낮추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저성장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인구의 확보 및 여성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필요함.
- (2) 유연근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아동양육 지원 확대, 여성고용 안정성 제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활성화시킴.
- (3) 양육시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다양하게 개발, 기혼여성들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킴. 즉,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보육시설 마련이 필요함
- (4) 여성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및 처우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위한 법규를 강화시켜 실효성을 제고함

- (5)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하도록 함

3)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과제

- (1) 재교육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2) 근로 시간의 유연성이 높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가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3)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정 기간 노동시장에서 이탈되는 여성인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임
- (4) 일정 기간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는 여성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증대된 가사노동을 감당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5) 최장의 근로시간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가 어려워짐으로 근로시간의 개선이 필요함.

■ 학습정리

1. 여성 경제활동 현황

- 1)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 여성의 고용률은 30대에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의 모양을 보임
- 2) 여성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가사노동의 부담, 일·가정 양립의 부담
- 3) 여성노동자의 불안정 고용
 -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음
- 4)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원인
 - 양질의 보육기관 부족과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인식의 잔재

2. 여성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 1) 양육시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다양하게 개발, 기혼여성들의 고용기회를 증대
- 2)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맞벌이 부부들

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보육시설 마련이 필요

- 3) 여성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및 처우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위한 법규를 강화시켜 실효성을 제고함

5주차 1강

여성과 결혼 · 가족 I

학습 목표

- 우리나라 인구와 가족 및 가구유형 변화의 경향을 분석하여 나열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여성의 가족성원 돌봄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양육자의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인구와 가족 및 가구유형
2. 여성의 가족성원 돌봄 실태와 대안

1) 결혼과 가족의 변화

- 인구와 관련된 당면 문제 : 저출산, 고령화 등 최근의 인구 변화는 국가의 존망을 논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의 대처는 부족한 실정임
 - (1) 인구 변화1. 저출산 현상
 - (2) 인구 변화2. 인구 고령화 현상
-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높아, 고연령층에서 홀로 사는 여성노인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
- 홀로 사는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여성노인의 빈곤, 질병 문제는 여성 개인에게도 자기돌봄능력의 저하 등과 연관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과 과제가 되고 있음

2) 가족 · 가구유형 변화

- 결혼, 출산과 같은 행위는 아직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구 변화는 특히 가족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물론 여성이 가족 안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가족의 변화는 여성의 변화와 밀접함.

(1) 한국 가족의 가구당 평균 인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970년대에는 5인 가족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에 4인 가족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1990년대 진입하면서 3인 가족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2000년에 3.1명이던 것이 10년 뒤인 2010년에는 2.69명으로 축소됨
 - 가구 기본 단위를 결혼한 부부 2인으로 설정한다면, 단편적으로는 성인 두 명이 자녀 1명을 낳지 않는다는 결과임.
 - 수명이 날로 연장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성인 2명이 대체되지 않으므로 인구는 당연히 감소할 수 밖에 없음
-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1990년대부터 이미 한국사회의 인구위기는 시작되었고 1990년 후반에까지 지속되었던 산아제한정책은 시기적으로 오늘날의 저출산의 빌미를 제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님

(2) 다양한 가족 등장

- 1인 가구의 증가는 비혼 독신여성, 고령 여성노인 가구의 증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므로, 가족의 범주로 다루기 어려운 1인 독신여성가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

3) 결혼, 출산, 이혼 변화

(1) 결혼 연령

- 평균 초혼 연령은 2000년에 남성 29.3세, 여성 26.5세

- 2010년에는 남성 31.8세, 여성 28.9세
- 2019년에는 남성 36.3세, 여성 33.3세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

(2) 출산율

- 1970년 4.5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1980년 2.8명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IMF 시기인 1998년 1.48명으로 또 다시 급감함
- 일종의 가족부양 쇼크가 발생한 1998년 이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2005년에는 1.08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0년 1.23, 2013년 1.19를 기록함으로써 대부분의 OECD 유럽국가(프랑스 1.99, 독일 1.38, 영국 1.94, 이탈리아 1.41 등) 및 일본 (1.37), 미국(2.03) 등 보다 낮은 수치로 세계 최저 출산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4)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

(1) 가족 안의 여성

- 주부로서의 여성
 - 여성의 가사노동
 - ◆ 여성 노동의 장소로서의 가족
 - ◆ 사회참여와 자기발전의 기회제한 + 가사노동과 양육의 이중부담, 역할갈등
 - ◆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 부재 : 경제적 무능력과 의존+ 권력관계 불평등
 - ◆ 사회적 노동 참여시에도 돌봄, 양육자로서의 여성정체성 연장 : 사회적 노동에서의 성별업종 분리
 - 어머니 역할
 - ◆ 자녀의 성취, 가족의 화목유지에 대한 책임
 - ◆ 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매개체로서 어머니 역할과 전통적 성역할 활용
 - ◆ 모성신화와 모성의 도구화, 이에 따른 모성비난
 - ◆ 가족 내 역할 속에서만 존재하는 여성 : 한 인간으로서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 여성 부재

(2) 한국가족의 변화

- 가족형태의 전형성 약화와 비전형성 가족형태의 다양화
 - 2세대, 3세대 가족감소, 한부모가구, 노인가구, 1인가구, 비혈연가구 등의 비전형적 가족 형태가 급속히 증가
 - 미혼독신여성 및 이혼증가와 여성노인 1인가구의 증가, 2018년 여성가구주는 전체가구의 30.7%를 차지하며, 이중 70세 이상 고령여성 1인가구주는 29.3%로 비중이 가장 큼
 - 여성가구주 가구, 조손가구의 증가는 아동빈곤 및 돌봄 문제를 야기함
- 저출산과 고령화
 - 2018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3%, 합계출산율 0.977명
 - 노인인구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감소의 동시 진행으로 인한 문제
 - 2018년 생산가능인구는 5명이 1명을 2030년 2.6명이 1명을 부양해야할 것으로 전망됨

- 세대재생산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됨
- 결혼행태의 변화
 - 결혼지연(초혼연령 상승) 및 혼인을 감소, 이혼 및 재혼의 증가
 - 인구 천 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1995년 8.7에서 2018년 5.0 수준
 - 결혼에 대한 의식변화, 교육수준 증가, 청년실업문제, 경력추구경향, 주거비용상승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됨
- 맞벌이 가족의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전히 남성과 약20% 이상 차이가 남
 - 여성 고용률은 30대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임

(3)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

- 가족 및 결혼의 행태와 가치관의 변화
 - 결혼의 절대적 가치가 개인의 상대적 가치로 전환되어 결혼을 선택으로 받아들임
 - 이혼 및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도 급격하게 변화됨
 - 어머니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직업목표와 사회적 성공에 긍정적인 가치를 둠
- 인구학적 변화
 - 노후보장과 관련한 전통적 자녀관 변화 및 부계중심적 가족의 기반 약화
 - 여성 생애주기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욕구
- 가족 내 성역할과 권력관계 변화
 - 여성의 이중부담 증가, 경제참여활동 증가로 인한 가족 내 젠더권력 관계 변화
 - 가족 내 성별분업 약화로 인한 돌봄과 가사노동의 사회화 필요성 증대

2 | 여성의 가족성원 돌봄 실태와 대안

1) 자녀돌봄

- (1) 자녀돌봄은 가족의 형성과 더불어 발생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주요 임무로 인식되어 옴
- (2) 여성의 사회노동이 가속화되면서 자녀돌봄을 모성의 이데올로기로서 다루어왔던 우리 사회는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게 됨
 - 국가사회가 여성이나 가족 개개인이 겪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기보다는 결혼기피나 출산을 하락이라는 사회문제에 봉착하면서 이에 대한 수동적 접근이 시작됨
- (3) 현행 자녀돌봄정책의 성격
 - 가족의 자녀돌봄 부담을 국가의 서비스를 통해 대체하는 방식임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경제위기로 가족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여성이 주로 담당해 온 돌봄을 국가의 서비스로 대체하는 정책이 등장함
- 이러한 공적 돌봄의 핵심은 보육시설서비스 중심의 보육사업임
- 가족의 자녀돌봄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이에 대한 보충적인 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돌봄 기능을 유지해 나가려는 방식이 있음
 - 가정내 육아지원정책: 양육수당제도와 아이돌봄서비스제도
 - 부모의 자녀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돌봄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돌봄자원을 모색하는 형태임

(4) 우리 사회는 2020년 전후 인구변동이 본격화하기 전에 인적자원의 확대와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조처의 하나가 자녀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임

(5) 지난 수년간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대

- 2013년 보육료 전액 지원이라는 무상보육을 달성함(2012년 시범)
- 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형평성 차원에서 2009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전 계층으로 확대함
- 보육지원시스템의 갑작스러운 확대와 공급은 보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만과 맞물리면서 여성과 가
 -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으로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품질관리를 시도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이들 어린이집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매우 낮은 형편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여건을 대폭 개선하였으나 이에 대한 강제조항 역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6) 여성양육자 부담 감소를 위한 대안

- 생활 균형 강화를 통한 일상적 돌봄 보장이 필요함
 - 가족들은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일과 자녀돌봄의 조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연한 노동 시간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시간보험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용이하게 사용하길 원함
 - 실제로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이용률이 6.5%에 불과한 실정임
- 공보육체계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함
 -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 및 내실화,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으로 공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 저녁시간 및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확대
 - 일시적으로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기관 확대 등
- 아버지들의 역할행동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가족 내 동등한 역할분담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데, 남성이 돌봄의 책임자로 행동하도록 아버지 역할 전환을 돕는 서비스나 제도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남성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등 근로문화 개선이 필요함
- 돌봄의 재사회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 시민 네트워크, 지역사회 공동체는 기존에 정부가 제공해 온 자녀돌봄서비스의 대안적 사회화 방안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자생적 부모들의 모임 참여, 시민단체들의 돌봄 지원 활동을 촉진하고 모임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네트워킹을 지원해야 함
- 균형을 고려한 자녀돌봄서비스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정부의 자녀돌봄서비스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부모,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 간 협업체계와의 균형을 고려, 공급량을 조절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7) 최근에는 공공보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조부모에게 손자녀 양육을 의존하는 경향이 선호되고 있음

- 조부모 손자녀 양육은 또 다른 여성문제를 야기시키고 여성복지를 위협하고 있는데, 대를 이어 여성의 희생이 담보되는 형태의 가족돌봄이 발생하기 때문임
- 이러한 개인의 의식과 행동은 일시적으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보이지만 대의적으로 볼 때는 여성의 예측화를 촉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
- 국가는 여성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돌봄의 억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고 여성의 능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함
- 손자녀 돌봄 여성노인의 정책지원 욕구를 조사한 결과(최인희 외, 2012)
 -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정시퇴근 문화 조성 등) 필요성에 매우 공감
 - 보육서비스(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유치원, 도우미 파견 서비스, 공동육아 공간, 육아지원기관)의 확대에 매우 공감
 - 손자녀 양육 여성노인지원정책(양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보육 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조부모 건강관리 프로그램, 가사지원서비스 등)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
 - 여성노인들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자녀양육의 책임은 조부모가 아닌, 부모, 국가, 사회에 있다고 응답 함
 - 영아의 경우 부모가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육아휴직제도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며, 저녁시간에도 이용 가능한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확충 및 어린이집 하원과 부모 퇴근 시간 전까지의 공백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2) 노인돌봄

- (1) 최근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돌봄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 핵가족화가 일반화되고 취업여성의 증가,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에 따라 가족 내에서 노인돌봄의 주된 책임을 여성이 짚어지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됨
- (3) 노인돌봄은 그 대상이 여성노인일 때 부양자, 피부양자 모두의 여성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특히 최근 들어 시부모에 대한 며느리로서의 의무는 경감되어 간다 하여도 아이러니하게 딸의 의무가 강조되어 가고 있어, 여성은 여전히 노인돌봄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실정임

(4) 돌봄과 간병의 부담은 가족에게 심각한 무기력을 초래하는 문제로 지적된 바 있으며, 이는 극단적인 생계형 사건, 사고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기도 함

- 사회는 노인돌봄의 책임을 더 이상 가족 개인의 책임으로 미룰 수 없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 측면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공적 노인돌봄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임

(5) 현재의 공적 노인돌봄체계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

- 장기요양보험제도
 - 서비스 이용 사정 시 가족유형에 대한 고려가 없고, 서비스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점 등 공식 돌봄체계로서 가족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함
- 노인돌봄서비스(바우처사업)
 -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을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혜대상자의 규모도 적어 일반노인 돌봄 여성에게 적용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움
 - 현행 공식 노인돌봄 지원은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상돌봄이 필요한 노인 다수를 위한 돌봄 지원으로는 미흡함
 - 현행의 노인돌봄정책은 노인돌봄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에게 지장이 가지 않도록 가족의 돌봄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중간 수준의 기능장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활성화되어야 함

(6) 노인돌봄 관련 공적 서비스가 발달한 서구국가의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 정책

- 시간 지원: 일과 돌봄의 양립 지원
- 서비스 지원: 재가서비스 등
- 재정적 지원

(7)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 가족돌봄휴직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통해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
- 가족 돌봄자들은 요보호노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가족돌봄자들이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체계(교육, 상담 등)가 매우 제한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지원정책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대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가족돌봄자는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돌봄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경험할 뿐임
- 가족돌봄자를 주요 정책 및 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8)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개발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음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돌보는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가 구축되고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가 개발되어야 함
- 전통적 성역할의 고착화, 급여에 대한 사회적 적정선 설정 어려움, 서비스 질 관리의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보상방식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OECD 국가들의 가족돌봄에 대한 보상체계
 - 돌봄수당(carer's allowance),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제도

(9) 모든 가족생활주기에 걸쳐 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가족생활에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학습정리

1. 인구와 가족 및 가구유형

1) 결혼과 가족의 변화

- 인구와 관련된 당면 문제
 - 저출산, 고령화 등 최근의 인구 변화는 국가의 존망을 논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의 대처는 부족한 실정임
- 저출산 현상
- 인구 고령화 현상

2) 가족·가구유형 변화

- 한국 가족의 가구당 평균 인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다양한 가족 등장

3) 결혼, 출산, 이혼 변화

- 결혼 연령 높아짐
- 출산율 낮아짐
- 가족 해체를 높아짐

2. 여성과 가족구성원 돌봄 실태와 대안

1) 자녀돌봄 실태와 대안

- 실태

- 자녀돌봄은 가족의 형성과 더불어 발생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주요 임무로 인식되어 옴
- 대안
 - 가족의 자녀돌봄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이에 대한 보충적인 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돌봄기능을 유지해 나가려는 방식이 있음
 - 지난 수년간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대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 돌봄의 재사회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함

2) 노인돌봄 실태와 대안

- 실태
 - 최근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돌봄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핵가족화가 일반화되고 취업여성의 증가,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에 따라 가족 내에서 노인돌봄의 주된 책임을 여성이 짊어지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됨
- 대안
 - 모든 가족생활주기에 걸쳐 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가족생활에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5주차 2강

여성과 결혼 · 가족 II

학습 목표

-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다양한 유형의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
2. 다양한 유형의 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1) 맞벌이 가족의 증가

- (1) 현대사회는 혼자의 수입만으로 경제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됨
- (2) 사회는 자녀양육문제의 집단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기 시작함
- (3)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점점 더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고 있음
- (4) 맞벌이가족의 경우 우선은 무엇보다 가사노동 시간의 재구성과 과업의 재배치가 필요함
- (5) 맞벌이가정에 있어 가장 내적인 딜레마는 취업여성 자신의 갈등이고, 특히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서 오는 도덕적 딜레마의 극복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취업여성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

2) 노인인구의 증가

- (1) 현재 노인문제는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대처해야할 문제로 대두됨
 - 노인의 부양이나 지원 문제는 이제 각 가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벗어났음
- (2) 노인세대와 그 자녀와의 성인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됨
 - 일상생활에서의 가사적 원조나 의존상태보다도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효에 대한 기대감'은 갈등의 소지가 되어, 부모의 요구가 높으면 세대 간의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고 가족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림
 - 성인 부모-자녀관계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노인의 역할과 기능이 중시되고 있음
 - 예) 손자녀 돌봄의 역할담당자가, 많은 경우에 여성노인이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매우 중요시됨

3) 이혼 및 재혼가족

- (1) 이혼은 이혼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겨주지만 자녀 역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됨
 - 최근 들어 자녀양육권을 여성이 갖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여성이 자신의 위기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를 수용하고 치유해 주어야하는 현실적인 과제가 부여.
- (2) 여성이 재혼하는 경우 재혼가족 내에서의 역할관계와 인간관계를 조절하고 융합하는 역할자로 여성이 기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은 이질적인 가족구성원으로 뒤엉킨 가족관계를 조정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함
- (3) 많은 경우 재혼가족은 자녀를 포함하므로 계부모로서의 적응이 매우 중요한데, 이

경우에도 여성은 중심적 역할자로서 기능해야 함

- 자녀를 방문하는 이전 배우자에 대한 적응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며 양육비등 경제적인 압박도 간과하여서는 안 됨
- (4) 초혼보다는 재혼에서의 이혼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원이 받는 연속적인 상처는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음
- (5)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모의 경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음

4) 한부모가족

(1) 경제적인 어려움

- 모자가족의 경우 주 부양자이던 남편의 소득 상실로 인해 경제적 곤란이 초래되고, 모(母)의 불안정한 직종과 임금문제가 어려움을 가중시킴.

(2) 부-모의 역할 부족

- 모자가정에서는 가족부양자로서의 부의 역할, 부자가정에서는 가정관리자로서의 모의 역할이 부족함
- 남편과 자녀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던 여성은 역할 상실로 인해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에 심한 상처를 받을 수 있음

(3) 정서적인 문제

- 절망감이나 책임감, 슬픔,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반응이 지배적임
-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충격은 당사자의 불안, 우울, 상실감, 소외감으로 이어지고,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자신감 결여, 절망감 등 심각한 정서적 위기 경험

(4) 자녀양육문제

- 모(母)는 자녀를 충분히 돌보아 주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녀양육문제가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고 일관성을 가지기가 어렵게 됨
-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짐으로 부담을 느낌

5) 조손가족

- (1) 양육자와 피양육자 간의 연령차이, 세대차이가 큼(소통의 문제, 훈육의 문제 등)
- (2) 양육환경의 문제(경제적, 자원적 한계)
- (3) 손자녀들의 정서적인 문제

6) 다문화가족

- (1)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경험

- 식습관, 가족행사, 자녀양육방식에서 배우자와 문화적 차이를 경험

(2) 결혼이민자 가족의 당면 문제

- 의사소통과 언어문제가 있음
 - 일상생활상의 상호작용 곤란을 초래하며, 이는 곧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이어짐
 - 영어 사용이 가능한 필리핀보다는 베트남, 태국 여성들의 의사소통 곤란이 두드러짐
- 가사노동 분담, 생활방식 차이로 인하여 갈등, 시부모와의 갈등, 가치관이나 생활습관의 차이

(3) 자녀 양육상의 문제

-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 정체성 혼란, 집단따돌림의 경험
- 특히 한국어 구사력이 불완전하고, 학습능력이 뒤떨어지며,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고, 학교에서는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학생들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7) 1인 가구 증가

- (1)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규모 축소
- (2)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에 부모부양 회피 및 남녀 평균수명 차이로 인한 고령독거 가구의 증가
- (3) 청년실업 심화에 따른 비혼율 증가 등의 혼인율 하락 및 이혼율 상승
- (4) 결혼적령기 청년층의 개인주의화 및 독거생활의 편의성 증가
- (5) 온라인 매체 증가 등 생활의 편의성 증가, 자기 경쟁력 강화 등

8) 1인 가구의 특성

- (1) 20~30대 1인 가구
 - 대부분 미혼으로 고학력자
 - 생계비 마련 및 주택구입 등의 경제 적인 준비가 주요 관심사이며 결혼과 관련해서는 막연한 부담감과 비현실적인 기대나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 (2) 40~50대 1인 가구
 - 다수가 이혼한 사람이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음
 - 주요 관심사는 본인의 건강과 노후준비임
- (3) 60세 이상의 1인 가구
 - 주로 배우자의 사망이나 자녀의 결혼 등으로 인해 혼자 살고 있음
 -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미래 전망이 부정적임

- (4) 60대 이전 연령대의 경우에는 남성의 독거기간이 여성에 비해 길지만, 60대 이후 고령자가 되면 여성의 독거기간이 남성에 비해 길어지게 됨
- (5)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하여 행복도가 낮고 사회자본 축적 정도도 낮음

2 | 다양한 유형의 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1) 맞벌이 가족의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영역

- (1) 자녀양육, 즉 공적·사적 보육시스템의 강화가 중요함
- (2) 방과 후 자녀보호 등을 위한 프로그램, 도우미제도 등이 지역별로 체계화해야함
- (3) 노인, 장애가족원 등 부양대상 가족을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와 가족간호제도 등의 도입 및 확대도 필요함
- (4)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나 출산보육 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을 높여 급여 보장, 직장 내 지위 안정성 등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정책으로 확대 정착되어야 함
- (5) 물론 이러한 제도들은 남성에게도 개방되어 맞벌이가족의 가족돌봄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여성의 심리정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고화되어야 함

2) 노인가족의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영역

- (1)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경제적인 보장 문제임
- (2) 물론 노인 스스로의 장기적인 경제적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는 부모가 자녀양육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심지어는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소득 계층에서도 자녀가 모두 독립한 이후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음
- (3) 특히 노후준비가 원활하지 않은 빈곤계층의 노후보장은 고스란히 국가의 책임으로 남게 됨.
- (4) 노인가족의 경우 남녀 수명 차이로 인하여 여성노인이 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 형편인데, 소득활동이나 급여수준이 높지 않은 여성의 경우 노년기에 홀로 되었을 때 남은 생존기간 동안의 경제적·의료적인 지원이 매우 절실했음
- (5) 여성이 수급자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그 수령액 수준이 매우 낮음.
- (6) 출산크레딧과 같이 여성노인의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

상도 필요함

3) 이혼 및 재혼가족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영역

- (1) 가족의 빈곤화가 가속되고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2) 실질적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
- (3) 현재의 경제적 소득 수준만을 고려한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이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가 불가능한 형편이며, 실제로도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전문기구도 없는 형편임
- (4) 이혼, 재혼가족의 적응을 위해서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담과 재교육 등이 활성화되어야 함
- (5) 현재 가정법원에서 이혼 신청한 부부를 대상으로 가사조정위원 등에 의한 상담활동이 실시되고 있음
- (6)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상담 및 조정 서비스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나 체계에 의한 상담,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7) 이혼 이후의 추후관리와 이혼의 적응을 위한 지원도 중요
- (8) 미국의 이혼가족중재(F.A.M. : The Family Arbitration / Mediation) 프로그램처럼 적극적으로 이혼과정에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함
- (9) 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처럼 실질적인 지원서비스도 필요함

4) 한부모가족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영역

- (1)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에 의하여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음
 - 그 대상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에 한하고 그 지원액도 미미한 실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기초를 따르는 것일 뿐 한부모가족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라고 보기는 매우 취약함
- (2) 정부의 가족복지정책은 명목상으로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제각각의 가족구성원 중심으로 부처별 서비스가 이루어짐
- (3) 한부모가족의 여성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는 물론이고, 이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체계를 갖춘 상담 등의 복지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

5) 조손가족의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영역

- (1) 경제적, 물질적 지원
- (2) 조부모-손자녀 관계를 부모-자녀관계의 기능적 측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 (3) 조부모와 손자녀 양측 모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
- (2) 보육과 교육 지원, 교육상담서비스, 멘토제도 활성화 등

6) 다문화가족의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영역

- (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언어교육이나 문화적응교육에 치우치고 있고,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 있음
- (2)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아직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어서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차별화되어야 할 것임
- (3) 학력이 낮은 여성들을 위한 대안적 교육시스템, 언어적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취업처 개발 및 연계, 가정폭력이나 이혼 등 가족문제를 겪는 여성들을 위한 문화인지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함
- (4) 국적 기반의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이혼, 사별 가정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함

7)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영역

- (1) 지역사회 안전체계 구축
 - 서울시에서는 싱글여성 전용 안심 임대주택 공급, 싱글여성 안전존 조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지역보안시스템 강화 등의 안전장치 설치 확대 등을 추진
 -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사회안전을 위한 여러 조치들도 시행되고 있으나, 노인 등 다양한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2) 주거복지 측면에서 주거의 안정성과 편리성 증진이 필요함
 - 1인 가구의 주택문제 해결은 단순히 소형주택의 공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 공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그러한 의미에서 1인가구를 위한 코하우징, 다세대공동주거 등이 제안
- (3) 소득보장 및 일자리 정책
 - 청년실업 및 여성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접근 또는 성인지적 인식이 필요함
 - 여성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보다 견고한 정책적 준비와 대응이 요구됨
- (4) 양육과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 (5) 심리적 지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영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 청년 여성들에게는 사회적응이나 가족형성의 불안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가족 별리, 해체 등을 겪는 중장년기의 여성 1인 가구원에게는 정신 건강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함
- (6) 빈곤하고 장기적인 1인 가구 기간을 극복해야 하는 여성노인들을 위해서는 안정된 돌봄서비스, 가족대체서비스 등의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학습정리

1.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

- 1) 맞벌이 가족의 증가
 - 현대사회는 혼자의 수입만으로 경제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됨
- 2) 노인인구의 증가
 - 현재 노인문제는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대처해야할 문제로 대두됨
- 3) 이혼 및 재혼가족
 -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모의 경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음
- 4) 한부모가족
 - 경제적인 어려움
 - 부-모의 역할 부족
- 5) 조손가족
 - 양육자와 피양육자 간의 연령차이, 세대차이가 큼(소통의 문제, 훈육의 문제 등)
- 6) 다문화가족
 -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경험
 - 의사소통과 언어문제가 있음
 - 자녀 양육상의 문제
- 7) 1인 가구 증가
 -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에 부모부양 회피 및 남녀 평균수명 차이로 인한 고령독거가구의 증가

2. 다양한 유형의 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 1) 맞벌이가족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영역
 - 공적·사적 보육시스템의 강화
 - 방과 후 자녀보호 등을 위한 프로그램, 도우미제도 등
 - 노인, 장애가족원 등 부양대상 가족을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와 가족간호제도 등의 도입 및

확대 등

2) 노인가족의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영역

- 경제적, 의료적 지원 필요
-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의 개별 수급권으로의 전환, 부양가족연금의 현실화
- 출산크레딧과 같이 여성노인의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3) 이혼 및 재혼가족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영역

- 실질적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
-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담과 재교육 등이 활성화
- 이혼 이후의 추후관리와 이혼의 적응을 위한 지원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 한부모가족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
-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지
- 한부모가족의 여성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체계 필요

5) 조손가족의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적 실천

- 경제적, 물질적 지원
- 조부모-손자녀 관계를 부모-자녀관계의 기능적 측면에 접근
- 조부모와 손자녀 양측 모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
- 보육과 교육 지원, 교육상담서비스, 멘토제도 활성화 등

6) 다문화가족의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 언어적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취업처 개발 및 연계, 가정폭력이나 이혼 등 가족문제를 겪는 여성들을 위한 문화인지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
- 국적 기반의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이혼, 사별 가정의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고려

7)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 지역사회 안전체계 구축
- 주거복지 측면에서 주거의 안정성과 편리성 증진
- 소득보장 및 일자리 정책
- 양육과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강화
- 심리적 지지 서비스 확대

6주차 1강

여성과 빈곤 I

학습 목표

- 빈곤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여성빈곤의 원인을 나열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빈곤의 개념과 특성
2. 여성빈곤의 원인

1) 빈곤의 개념

(1) 빈곤의 여성화 개념

-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의 빈곤화는 서로 다른 개념
 -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층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
 - 여성의 빈곤화는 여성가구주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여성의 빈곤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의미함
- 피어스(Pearce)의 연구
 -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나 교육수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빈곤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
 - 연구 결과(1978년) 미국 성인 빈곤층의 66%, 노인 빈곤층의 70%, 그리고 빈곤가구의 50% 이상이 여성이 가구주인 가정이었고, 빈곤이 전반적으로 여성화되고 있음
- 여러 선행연구 결과 빈곤의 여성화는 단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임
- 1990년대 중반 UN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이처럼 많은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젠더화된 빈곤현상에 대해서 “빈곤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기도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보다 3배 정도 높은 빈곤위험을 보이며 IMF 이전인 1990년대 중반과 비교했을 때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증가추세에 있음
-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IMF 경제위기 때문임
 - 노동시장에서 여성근로자들의 퇴출, 결혼해체로 인한 여성가구주 증가 등이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
 - 이후 경제가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는 여성빈곤율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성’을 심각하게 드러낸 현상이며, 빈곤여성은 근로빈곤층과 더불어 대표적인 신빈곤층으로 언급됨

(2) 빈곤의 여성화를 주제로 실시한 연구의 내용

-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방식은 성별 빈곤격차를 통해서 빈곤의 여성화를 논함: 성별 빈곤격차는 남성(가구주)빈곤율과 여성(가구주)빈곤율의 차이를 측정하거나 남성(가구주)빈곤율 대비 여성(가구주)빈곤율의 수준(ratio)을 보여줌
- 여성빈곤율의 지속적 증가와 빈곤양상의 다양화를 의미하는 여성의 빈곤화를 설명함
- 어머니의 빈곤화, 비정규직의 여성화와 같이 특정 집단에서 경험하는 여성의 불이익이나 박탈, 사회적 배제 등의 현상을 분석함

(3) 유엔개발계획(UNDP)에서의 “빈곤의 여성화”

- 남성보다 여성이 빈곤상황에 빠질 위험이 높음
- 여성의 빈곤이 남성보다 더 심각함

- 빈곤층 내부에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음
- 점차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점차 증가함
- 성별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이 점차 가난한 여성의 비율을 높이며 사회 내부에서 “제도화”되는 경향을 지적함
- 기초교육의 부족 등으로 여성에게 빈곤위험이 높을 경우 그 국가에는 여성이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짐

2) 빈곤의 특성

▶ UN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또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1)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
- (2)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 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
 - 사회는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고 누리고 있는 자연, 사회 등이 현재 세대에서만 그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UN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해침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보며, 이를 위하여 단지 한 분야가 아닌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의 3가지 축이 상호간의 균형을 이루며 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지속가능목표의 핵심가치를 “Leave No one Behind”로서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을 것을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임
 - 이에 서명한 193개국들은 각 국가의 내부적인 발전의 방향과 대외적인 노력들을 이를 토대로 이행하기로 약속함
 - 지속가능 개발목표의 17개 주 목표
 - 목표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킴
 - ♦ 이 목표에는 절대빈곤의 퇴치와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내용이 포함
 - 목표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며, 개선된 영양상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
 -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층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며,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통하여 식량안보를 달성해야 함.
 - 목표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
 - ♦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를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를 모두에게 공급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의료보장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목표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
 - ◆ 남녀 및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대학, 기술 훈련, 직업 훈련 등 자신에게 필요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목표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정치, 경제, 공공 등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 ◆ 또한 조혼, 강제 결혼, 인신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나쁜 관행을 근절하는 것도 포함.
- 목표6. 모두가 물과 위생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보장
 - ◆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보장받는 것을 포함하여, 수질 오염 감소, 수자원 관리 등의 세부 목표가 포함.
- 목표7. 모두를 위한 적당한 가격이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보장
 - ◆ 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당한 가격의,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보급해야 함.
- 목표8.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
 - ◆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창업지원, 노동자 권리 보호, 지속 가능한 관광 등의 세부 목표를 달성해야 함.
- 목표9.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시키며 혁신을 장려
 - ◆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환경 친화적 공정을 적용한 산업의 확대, 과학기술연구 강화 및 투자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 목표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킴
 - ◆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
- 목표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
 - ◆ 충분하고 적당한 가격의 주택공급, 취약계층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의 확산, 세계 문화와 자연 유산에 대한 보존 등의 세부 목표가 포함.
- 목표12.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
 - ◆ 여기에는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지속 가능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음식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 목표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시행
 -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
- 목표1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
 - ◆ 해양오염을 막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어류 수확을 근절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양식업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
- 목표15. 지속가능한 육상 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하고,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

- 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중지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
 - ◆ 이 목표에는 산림, 습지, 산악지역 등 모든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사막화를 방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
- 목표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
 - ◆ 부정부패가 없으며, 폭력과 차별이 사라진 사회,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축.
- 목표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
 - ◆ SDGs의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협력, 평등한 무역, 시민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과 데이터를 통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

- ▶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는 ‘양극화’란 특성으로 심화되고 있음
-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실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상대적 박탈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약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 왔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수정하는데 주력하고, 빈곤과 직결되는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함

(2) 빈곤의 외부환경

- 빈곤을 논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 이동한 현상
- 빈곤을 측정 시에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권 소득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현상
-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현상으로 상대적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상
- 근로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의 존재와 그들의 열악한 생활실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
- 근로빈곤과 주거빈곤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현상

2 | 여성빈곤의 원인

1) 불평등한 여성차별적 노동시장

- 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M자형 구조
 -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30대 후반을 기점으로 M자형의 모양을 보임
- 취업지위과 임금의 성별 격차

2) 남성주도적 사회보장정책

-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 성별 격차
-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성별 간에 큰 격차를 보이며,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여성화’가 나타나는 이유
 - 경제활동참여율 및 참여의 질에 있어서 젠더 격차가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여성화를 만드는 큰 요인임
 - 국민연금의 제도규칙에서 가족돌봄에 대한 보상에 기반한 연금크레딧 인정 등이 연금제도의 수급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임
 - 젠더화된 성별분업 구조를 국민연금 제도규칙을 통하여 완화 혹은 의무화하는 장치가 없거나 미약한 것이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여성화로 귀결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임

3)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한 가족생활

- 여성빈곤과 가족에 대한 관계는 우선적으로 가부장적인 가족주의, 가부장제, 남성부양 가족 체계로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음
-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기고 여성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가족구조 안에서 배우자에게 의존적이고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여성빈곤을 초래한다는 것임.
 - 배우자가 생계부양능력을 상실하거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남성에 대한 의존의 고리가 끊어졌을 때 여성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조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노동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여성빈곤을 야기함
- 가부장적인 가족주의는 가사나 양육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여성에게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함
 - 미취학 자녀를 맡아 보호해 줄 대리자나 보육시설 이용 제한은 저소득 여성들의 취업 및 자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 구조와 가사, 간병, 보육 등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가의 보육비용, 보육과 근로시간의 불일치, 방과 후 교실 부족 등은 여성의 근로활동 제약의 원인이 됨
 -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족은 육아, 간병 등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재와도 관련이 있어 여성은 돌봄노동과 임금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됨. 이는 특히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옴
-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의 경우 그 어머니 한 사람이 가계소득원이고, 자녀양육자이며, 가사노동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함
 - 근로연계형 복지정책(workfare)의 맥락에서 빈곤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가족의 간병인으로서의 역할, 노동시장 내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고민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 M자형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문제에 기인하여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정책이 경력단절 여성을 주된 대상 집단으로 여겨옴
 - 그간 여성노동계의 적극적 개입으로 산전후 휴가기간의 연장과 급여의 사회보험화, 유급의 육아휴직제도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마련하였으며,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주요 전략이 정부 내 보편적 정책으로 등장하는 데도 크게 기여함

- 여전히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있으며,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큰 폭으로 존재하며,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 전환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남녀의 평등한 분담을 통해 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성 혼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를 고심하도록 방치해옴
- 정규직 여성의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와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을 스스로 선택하며 차별적 고용기제에 자신을 내어 팔기는 상황임
- 이주희(2012)의 연구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 여성에게 평등한 노동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과 가정에서의 무급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시민-노동자-돌봄인(citizen-worker-carer) 모델을 제안함
- 이는 고용과 돌봄의 양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같음’을 추구하는 모델로 여성이 고용과 관련하여 남성과 같아지는 동시에, 남성은 돌봄과 관련하여 여성과 같아지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적 특성임
- 여성이 돌봄노동에 남성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시민-노동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제안은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가장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이며, 한국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해 지향해야 하는 모델로서 높은 적합성을 보여줌
- 따라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편성의 회복’이라는 인권적 영역으로의 재정립을 통해 여성정책에서 분리해냄으로써 남성의 이해와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여성은 평생 평등노동권을 위한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저임금 및 불안정 고용, 평가절하된 여성집중 직종은 물론이고, 같은 직종 내에서 남녀 간 직무분리와 여성직무에 대한 평가절하, 승진 및 성희롱, 불평등 대우 등 인권과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노동단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성차별적 구조와 노동가치의 왜곡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함
- 여성노동의 ‘지속조건’을 ‘평등’이라는 보편성과 여성의 경험에 기반한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정책과의 괴리를 극복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통해 남녀가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함
- 여성노동자가 서비스업과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가 시효성 있게 작동되기 어려움
 - 이러한 정책 미스매칭의 주요 원인은 여성의 경험에 근거하여 정책이 입안되지 않았다는 점임
 - 여성들은 개인의 주변적 ‘운’에 따라 경력단절의 여부가 좌우되며, 끊임없이 강요받고 있는 경력단절의 기로에서 ‘악(오기)’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과는 괴리된 정책이 입안되었다는 의미임

■ 학습정리

1. 빈곤의 개념과 특성

1) 빈곤의 개념

-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층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
- 여성의 빈곤화는 여성가구주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여성의 빈곤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의미함

2) 빈곤의 특성

- UN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또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
 -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 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

2. 여성빈곤의 원인

- 1) 불평등한 여성차별적 노동시장
- 2) 남성주도적 사회보장정책
- 3)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한 가족생활

6주차 2강

여성과 빈곤 II

학습 목표

- 우리나라 여성 및 여성노인의 빈곤실태를 나열할 수 있다.
- 여성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여성 및 여성노인의 빈곤실태
2. 여성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여성빈곤의 실태

(1)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 (인구) 2018년 여성인구는 2,575만 6천명으로 총 인구의 49.9%를 차지함
- (가구주) 2018년 우리나라 가구의 30.7%는 여성이 가구주임
 - 60대 이상은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음
 - 혼인상태별 여성 가구주 구성비를 살펴보면, 미혼, 유배우 및 이혼은 증가 추세이며, 사별은 감소 추세임.
 - 2018년 혼인상태가 미혼인 여성 가구주는 143만 6천 가구로 여성가구주 중 23.7%를 차지함.
- 2018년 1인 가구 비중은 여성은 「70세 이상」, 남성은 「30대」가 가장 높음

(2) 빈곤 여성노인의 증가

-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43만1천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9%를 차지함(전체 일반수급자 149만 2천명).
 - 성별로 보면, 남자 수급자(14만5천명)보다 여자 수급자(28만5천명)가 약 2배 많으며, 남녀 모두 전년보다 각각 8,086명, 1,732명 증가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는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고령자는 2012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년보다 9,818명 증가함.
- (상대적 빈곤율) 2016년 중위소득 50%,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7%로 전년 (43.4%)보다 0.3%p 증가함(고령자통계, 2018).

(3) 여성가구주의 노동이행

- 여성은 결혼, 출산, 양육이 요구되는 시점에는 시간의 가치가 높아져 이에 맞는 노동임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을 탈퇴하게 됨
- 이처럼 여성들이 생애주기에 걸쳐서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를 하다보니, 남성들보다 노동시장 참여기간이 짧고 높은 수준의 몰입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진입하기가 어려움
- 문제는 열악한 인적자본을 가진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고 단순한 일을 수행하는 주변부적 일자리로 진입할 확률이 높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
 - 열악한 인적자본을 가진 여성들은 주로 일반서비스 직종이나 육체노동직 등에 취업하게 되고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불안정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쉽게 퇴장하거나 경제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다시 취업하는 등의 비연속적 취업력을 갖게 됨
- 여성의 노동이행 특성은 여성가구주가 되어 일차적 생계부양자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될 때 본격적인 문제가 드러남
 - 이혼이나 사별 등과 같은 가족구조 변화 후 생계부양자로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여성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

- 자녀양육의 책임을 갖고 있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일과 돌봄노동의 양립문제는 직업을 구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불안정한 노동지위를 선택하게 되는 요인이 됨
- 돌봄노동이 필요한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여성가구주에게 가구 내에서 어머니, 아내, 며느리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여성가구주로 하여금 비정규직 근로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여성가구주들은 생계부양자가 된 이후 활발한 취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성가구주의 취업실태를 보면, 주로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 단순노무직 등, 이들이 진입한 노동시장 부문은 대단히 제한된 직종일 뿐 아니라 비정규직, 비정형의 노동과 같은 저임금의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 있음

(4) 노동시장에서 여성가구주의 배제

- 김정현(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한 여성가구주들은 가부장제 가치와 규범이 팽배한 노동시장에서 제도적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노동기회의 축적과 이익할당에서 배제됨
 - 여성가구주 스스로도 자신의 노동가치를 평가절하하여 스스로 노동권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일탈하는 자발적 자기 배제행동을 함
-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노동 이행과정 연구 내용(김정현, 2012)
 - 여성가구주들은 주변적 노동으로 수평이동이 계속됨
 - 주변적 노동 안에서 ‘이 일 저 일 따지지도 않고’ 다양한 직종으로 ‘갈아타기’ 시작
 - 여성가구주들은 빈곤노동으로 수직 하강 이동함
 - 빈곤 여성세대주들은 조건부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노동에 회의를 갖게 됨
 - 늘 반복되는 일용직 노동에 지친 빈곤한 여성가구주들은 탈빈곤을 계획하게 됨
 - 자활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활에 계속적으로 잔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
 - 저소득 여성들은 비자발적으로 탈수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하지만 자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가능한 자활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기대함
 - 수급자격에서 벗어나는 것을 꺼려하는 중요한 이유는 주거불안정에 있음
- 정미숙(2007)은 이혼한 여성가구주가 경험하는 빈곤이 단순한 경제적 박탈의 의미를 넘어서 가족규범에 의한 자원배분과 자원통제로부터의 배제에 기인함

2) 여성노인 빈곤의 특성

- 대부분의 남성노인들이 생애기간 지속적으로 연금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식적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여성노인들은 그런 공식적 일자리를 갖고 있었던 경우가 매우 드물며, 소득이 중단된 이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소득의 공백을 채워 줄 별다른 방법이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됨
-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은퇴나 사별 이후에 빈곤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음
 - 여성노인들은 남편의 평생소득에 의존해서 생활을 영위하지만, 평균수명이 남편보다 길기 때문에 남편 사후에 상당 기간을 혼자서 살아가게 됨
- 단순한 소득의 중단뿐만 아니라 생애사적으로 누적되어온 소득과 자산소득의 젠더 간 불평등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는 점
 - 지금 65세 이상인 여성노인들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과도

- 기였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일자리, 특히 공식적인 일자리는 매우 제한됨
- 많은 여성노인들은 학력이 낮아서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
 - 많은 여성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자신의 생애기간 동안 무급가족종사자로서 혹은 비공식적 부문에서 간헐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러한 노동시장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 노인들은 공적연금의 수혜자격에서 배제되고, 노후를 대비해서 사적으로 축적해 온 연금이나 저축액도 남성노인에 비해 적음
 - 남성 중심적인 가족관계에서 주택을 비롯한 가족 재산에 대한 처분권과 통제력의 행사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임
 - 건강이 허락되고 일을 할 의사가 있어도 여성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 여성노인의 빈곤을 가속화시킴

3)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여성노인의 빈곤

- 국민연금수급자는 남성노인이 많았지만, 기초연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여성노인이 많았음.
- 각출 국민연금은 남성친화적 연금제도이며, 무각출 기초연금은 여성친화적 연금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젊어서 경제활동을 했던 결과물인 국민연금과 소득수준에 근거한 기초연금의 특성상 이와 같은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에 성별 수급률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남

4) 빈곤한 여성노인들의 실상

- 여성노인들의 빈곤상황에 대한 면접 내용(장미혜, 2012)
 - 대상자들은 최저 수준으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여유는 거의 없음
 - 생애기간 동안 정규직보다는 비공식적 영역에서 대부분 일을 해왔고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매우 단기간 일한 경험뿐임
 - 비공식적 영역에 종사한 것이 노후의 경제적 생활을 준비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원인임
 - 일을 한다고 해도 혼자서 하는 부업성격의 일이며 일의 종류도 매우 제한적임
 - 건강상의 문제와 저학력인 노인들이 많아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됨
 - 공적연금의 지원이 겹치거나 중복되는 지원의 경우 둘 중 하나가 삭감됨
 - 의료비 지원이 겹쳐서 실제로는 큰 수술 등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함
 - 의료급여 1종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외에 다른 의료 관련 혜택은 받지 못함
 - 배우자 사후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극소수임
 - 빈곤상태에 있는 여성노인들의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수입이 기초수급액보다도 적은 경우가 많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일을 할 의지가 있지만 못하는 경우 보조금으로는 본인의 의료비도 감당하기 부족함
 -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지출은 더욱 커짐
 - 젊은 시절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 공공근로나 일당 일자리 이외에 구할 수 있는 일자

리가 거의 없음

- 직업 교육과 경험의 부족은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리고, 노인들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미리 체념함
- ‘다른 사람이 내 돈 또는 재산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빼앗아간’ 경험을 70~79세 여성노인 중 15.37%, 80세 이상 여성노인 중 16.57%에 달함
- 재산소득의 경우 남성노인의 26.8%가 소유하고 있지만, 여성노인은 9.8%, 빈곤여성 노인에게서는 7.4%에 불과함
- 건강이 허락되고 일을 할 의사가 있어도 여성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어서 여성노인의 빈곤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대부분의 빈곤 노인들은 가족 역시 빈곤함. 자녀들도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에게 겨우겨우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 미안함을 크게 느끼거나 삶에 대해 비관함
-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자녀들이 부모를 돕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워낙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노인의 노후준비를 묻는 질문에는 자녀가 돌보아주기를 기대하는 경우와 손자, 손녀가 돌보아주기를 기대하는 경우, 형제가 돌보아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음
- 대부분의 노인들은 미래를 위한 대비책을 갖고 있지 못했음
- 기초생활급여를 받더라도 기본적인 식생활도 제대로 영위하기에 힘든 상황인 노인들이 많았음. 이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노인들이 많았음
- 면접대상 노인들 거의 대부분은 모두 생활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함
- 더 나은 주거환경은 이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욕구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의 91.4%가 고령자를 위한 주거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병원비나 약값을 내는 부담이 매우 줄었음에도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항목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데 익숙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임
-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에게 의지하는 기간도 김

2

여성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빈곤 여성의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1)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 및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사노동의 가치와 비용을 인정해야 함
- (2) 가사노동 가치 반영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치평가액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함
 - 국민연금 분할수급권 개선 등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을

병행하고 취업여성 근로소득 중 자녀양육비 공제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파출비용 등 대체서비스 활용을 각종 공제대상에 포함해야 함

- 여성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정규직에서의 남녀고용차별을 근절하고 고용형태별 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하여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보장책을 마련해야 함
 - 여성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시급함
- 여성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근로형태의 개발이 요구됨
 - 여성고용 창출을 위한 일 자리 나누기(job-sharing) 및 단시간 근로(part time job)의 확대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여성 개별 수급권의 확보가 필요함

- (1) 선진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여성)노인의 빈곤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바로 공적연금정책임
- (2)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 및 영세자영자에 포진되어 있는 여성근로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3) 연금크레딧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①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비경제활동기간 동안 연금크레딧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②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미래세대의 사회적 재생산은 연금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비경제활동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해야 함
- (4)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1소득자 1연금'이 아니라, '1인 1연금 체제'로의 장기적 변경을 검토해 보아야 함
 - 남성부양자 모형이 전제된 가구단위의 연금보장이 아니라 개별단위 보장으로 변경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도 공적연금을 통해 1차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임
 - 연금급여 수준은 사회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초보장수준만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1인 1연금 체제로의 전환과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는 공적연금의 보편적 노령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 소득비례연금은 본인의 기여에 정확히 비례하여 급여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3)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통한 양성평등정책 수립

- ① 여성 빈곤실태와 관련한 통계 및 지표를 개발해야 함
 - 여성빈곤의 다면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빈곤실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여성빈곤정책 수립에 성인지적 통계의 활용을 강화해야 함

- 과거 여성의 권리 주장을 위해 사용되었던 여성통계를 지양하고 사회 전국면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통계를 제공하는 성인지적 통계 생산의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빈곤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②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주요 정책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고 한 성에게 불리한 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여성빈곤정책을 여성정책이 아닌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함

■ 학습정리

1. 여성 및 여성 노인의 빈곤실태

1) 여성가구주와 빈곤

-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
-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의 증가
- 노동시장에서 여성가주주의 배제

2) 여성노인의 빈곤실태

- 많은 여성이 비정규직에 종사하여, 연금 가입 등 노후보장이 되지 않았음
- 노후소득보장체제와 여성노인의 빈곤: 공공정책의 수급률이 매우 불안정함

2. 여성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 1) 빈곤 여성의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여성 개별 수급권의 확보가 필요함
- 3)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통한 양성평등정책 수립임

7주차 1강

여성과 건강 I

학습 목표

- 건강권의 개념과 여성건강권의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외국의 여성건강 증진의 역사와 우리나라 여성건강의 결정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건강권의 개념과 여성건강권의 형성과정
2. 여성건강 증진의 역사와 여성건강의 결정요인

1) 건강권의 개념

- (1)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서 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포괄적 권리임(WHO, 1994).
- (2) 건강권을 기본적인 권리로 보는 관점은 건강수준이나 의료 이용 접근성이 성이나 경제 혹은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개인적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나 제도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임
- (3) 여성의 건강문제의 인식변화 과정
 - 여성의 건강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님
 -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은 성(sex)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 옴
 - 여성보다는 남성들을 우리 사회의 국민 대표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춘 의료나 보건정책이 개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근래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자녀를 임신하고 낳는 것을 제외하고는 남성과 다른 점이 없다고 가정해 왔으며 그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건강정책에 반영됨
 - 국제적으로도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여성건강에 대한 접근이 의학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이 왜곡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됨
 - 1995년 제4차 북경여성회의는 각 국가가 여성건강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받아들이고, 여성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보건의료 정보의 적절한 보급, 활용에 힘쓰도록 권고함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여성의 건강문제를 성인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여성건강권의 형성

- (1) 세계보건기구(WHO)의 알마아타선언(1978년)
 - 건강을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로 선포하였으며, 최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나 경제적인 여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사회적 차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불평등, 차별, 억압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미
 - 알마아타선언은 전 인류의 건강은 여성의 건강이 달성될 때 ‘비로소 긴 여정의 종착점’에 도달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수준이 곧 그 사회의 건강수준임을 명시
- (2) 1994년 카이로 세계인구개발회의는 생식건강권 개념을 정립함
- (3) 1995년 북경여성행동강령과 유엔인구기금(UNFPA)은 여성건강을 인권 차원에서 재평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 중요성을 부각시킴
- (4) 우리 나라에서 여성건강에 대한 국가정책적 개입
 - 1960~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하였던 가족계획사업이나 피임서비스 제공 등 산아제한정책이나 모자보건사업에 불과함

- 여성의 건강은 인구정책이나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도구로서만 인식되었을 뿐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건강문제는 거의 방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5) 건강 개념의 확대는 여성에게 단순히 신체적인 질병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여성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에 관심을 두자는 것임
- (6) 여성차별이나 여성 비하를 포함하는 관습, 태도, 전통 등에 의해서 여성의 건강은 쉽게 영향을 받음
- (7) 여성이 완전한 건강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려면, 여성이 경험하는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성인지적이고 세심한 이해와 함께 여성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성 차별적 인 역할이나 규범, 낮은 지위, 높은 기대 등이 변화되어야 함
- (8) 여성건강권에 기초한 건강관리의 특징
- 여성건강문제에 대한 범주를 기존의 관념과는 다르게 인식해야 함
 -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질병뿐만 아니라 똑같은 조건이나 상황에서 여성에게 더 높은 발병 률을 보이는 질환들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함
 - 질병치료의 대상이 되는 여성 당사자의 건강에 대한 욕구나 건강에 대한 신념, 가치, 경험을 중시해야 함
 - 여성 스스로가 자기 건강관리에 대해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옹호해야 함
 - 여성을 보건의료의 수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급자로서도 인식해야 함
 -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 취업상 지위나 여성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등이 동 시에 변화되어야 하고,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2

여성건강 증진의 역사와 여성건강의 결정요인

1) 외국의 여성건강 증진 역사

(1) 미국

- 여성건강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이래로 1970년대 초반까지 여성건강운동은 급속히 성장하 였고 낙태권에 대한 인정과 전 분야에 걸친 소비자 건강운동의 형태로 발전함
- 전국여성건강네트워크(NWHN : The National Women's Health Network)
 - 미국의 여성건강운동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조직
 - 현재 미국 내에서 여성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지역 내 기관들을 연결하는 대표적 기구임
 - 설립 초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이나 법률 제정에 관여하였고 여성건강정보 전달에 주력함
 - 소수집단의 인권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고, 여성건강단체 설립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여 성의 생식권과 저소득층 여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노력함
 - 1980년대에는 다양한 여성집단, 즉 레즈비언, 농촌여성, 장애여성 등의 건강요구를 반영 한 운동을 전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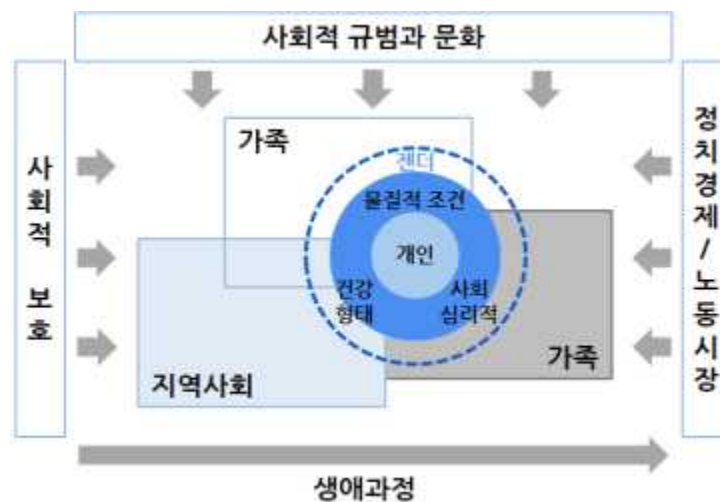
- 1990년대에 들어서도 미국 내 사회기관의 젠더형평성 실천이 여전히 부족했으며, 이 부분에서 전국여성건강네트워크가 많은 기여를 함
- 의회 및 의료기관에 여성 종사자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민간단체 주도의 운동방식이 정부조직 중심으로 변화였으며, 민간과 정부가 함께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하기 시작함
- 미국 보건복지부 여성건강문제 특별조사단(the Public Health Service Task Force on Women's Health Issues, 1985)
 - 여성건강에 대한 과학적 자료의 부족이 여성의 의료서비스 요구를 이해하는 데 장애물이 라고 밝혔고, 1989년 국립보건원은 충분한 수의 여성대상자를 임상실험에 포함시키도록 명령함
 - 1990년대 초반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성건강 평등법이 통과되었고, 국립보건원은 여성건강국을 설립함
 - 1990년 국가목표 검토 시 특별조사단이 권고사항을 제안함
 - ♦ 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사무국이나 보건복지부 내 사무국이나 산하기관을 만들어 여성 건강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것
 - ♦ 현행 정책에 관한 기획, 입법, 예산 등의 회의에 여성건강에 대한 상설 아젠다를 생성할 것
 - ♦ 보건복지부 고위관료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산하기관 대표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를 조직할 것
 - 이 세 가지의 제안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부 내의 여성건강국과 보건복지부 부속 여성건강 관련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가 되었음

(2) 캐나다

- 1990년 이후 국제적인 성주류화 흐름은 이러한 자생적인 여성건강운동과 합쳐져서 캐나다 여성건강정책이 제도화되는데 도움이 됨
- 여성들은 ‘지식이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보를 추구했고,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할수록 비전문가인 일반여성들도 의학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
 - 캐나다의 여성건강은 의사, 환자, 간호사, 치료사, 연구자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캐나다의 ‘모든 여성’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됨
-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전국 여성단체들은 여성건강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 연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공식적인 여성건강 네트워크를 형성함
- 10년 동안 캐나다 전국에 있는 여성들이 만나서 여성들의 자문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1993년에 캐나다 여성건강 네트워크가 만들어짐
- 1993년에는 캐나다 보건부 산하에 여성건강국이 설치되어 여성건강 관련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고, 성 및 젠더에 기반한 분석(GBA : Gender Based Analysis)을 보건영역에서 이행 함
- 1995년 지역별 여성건강센터가 건립되어 연구, 사업, 정책, 네트워크가 강화됨
- 1999년에는 정부 차원의 여성건강전략이 수립되어 1995년 UN 베이징대회에서 결의되었던 여성건강 증진 결의를 정식으로 실천하게 됨

2) 우리나라 여성건강의 결정요인

- (1) 디더리첸(Diderichen)의 건강불평등 설명모형과 루거(Ruger)의 건강잠재력 모델의 구성요소에 기반하여 여성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설명함(김남순, 2013).
- (2) 한국여성의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김남순, 2013)
 - 개인들이 가족, 일터, 지역사회라는 삶의 공간에 위치해 있음
 - 이러한 환경이 물질적 조건, 건강행태, 사회심리적 요인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침
 - 사회적 차원에서 정치경제/노동시장,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사회적 보호, 사회적 규범과 문화가 가족, 일터, 지역사회의 특성, 그리고 이것들이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중요시 함
 - 이러한 상호작용과 중층적 결정은 특정 시기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전 생애 과정에 걸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
- (3) 여성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물질적 조건,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요인, 가족 특성, 사회적 관계망,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규범, 제도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보호장치들이 함께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함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의 건강통계」, p. 9

■ 학습정리

1. 건강권의 개념과 여성건강권의 형성과정

- 1) 건강권의 개념: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서 생활 전반에 걸쳐 건

강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포괄적 권리임(WHO, 1994).

2) 여성건강권

- 세계보건기구(WHO)의 알마아타선언(1978년) : 건강이 기본권임을 강조
- 1994년 카이로 세계인구개발회의: 생식건강권 개념을 정립함
- 1995년 북경여성행동강령과 유엔인구기금(UNFPA): 여성건강을 인권 차원에서 재평가

2. 여성건강 증진의 역사와 여성건강의 결정요인

1) 외국의 여성건강 증진 역사

- 미국
 - 전국여성건강네트워크
 - 미국 보건복지부 여성건강문제 특별조사단
- 캐나다
 - 1993년 여성건강국 설치
 - 1995년 지역별 여성건강센터가 건립
 - 1999년에는 정부 차원의 여성건강전략이 수립

2) 우리나라 여성건강의 결정요인

- 여성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물질적 조건,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요인, 가족 특성, 사회적 관계망,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규범, 제도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보호장치들이 함께 개선되어야만 함

7주차 2강

여성과 건강 II

학습 목표

- 우리나라 여성건강의 실태 및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여성건강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우리나라 여성건강의 실태
2. 여성건강정책 발전방안

1) 건강행태(2017 국민건강통계_질병관리본부)

(1) 흡연

- 흡연율(만19세이상)은 2017년 남자 38.1%, 여자 6.0%로 2016년에 비해 남자는 2.6%p, 여자는 0.4%p 감소하였으며, 남자의 경우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결과
- 현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률(만19세이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가정실내는 남자 2.3%, 여자 6.3%, 직장실내는 남자 17.3%, 여자 8.5%이고, 공공장소실내의 경우는 남자 26.0%, 여자 17.9%로 나타남.

(2) 음주

- 월간음주율(만19세이상)은 2017년 남자 74.0%, 여자 50.5%로 남자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여자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월간폭음률(만19세이상)은 2017년 남자 52.7%, 여자 25.0%로 2016년과 유사하였고, 연령별로는 남자의 경우 20~50대 모두 50% 이상이었고 여자는 20대가 45.9%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음.

(3) 신체활동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만19세이상)은 2017년 남자 50.6%, 여자 46.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높았고(남자 67.0%, 여자 63.9%)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
- 근력운동 실천율(만19세이상)은 2017년 남자 27.5%로 여자 15.8%보다 높았고, 남녀모두 2016년과 비슷한 수준

(4) 정신건강

- 스트레스 인지율(만19세이상)은 2017년 남자 28.8%, 여자 32.4%로 여자가 남자보다 3.6%p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남자 30대(39.5%), 여자 20대(45.6%)에서 가장 높았음.
- 우울감 경험률(만19세이상)은 2017년 남자 9.1%, 여자 13.4%로 여자가 남자보다 4.3%p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70대 이상(남자 13.2%, 여자 20.1%)에서 가장 높았음.

(5) 삶의 질

- 주관적 건강 인지율(만19세이상)은 지속 감소경향으로 2017년 전체 29.2%였으며, 남자 32.1%, 여자 26.3%로 남자가 여자보다 5.8%p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남자 20대(40.6%), 여자 30대(31.5%)에서 가장 높았음.

2) 영양(2017 국민건강통계_질병관리본부)

(1) 식품군별 섭취량

- 우리 국민의 1인 1일 식품 총 섭취량은 1,561g으로, 곡류(289g), 채소류(267g), 음료류(207g) 등의 섭취량이 높았으며, 동물성 식품 중에서는 육류(129g), 우유류(115g)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2) 아침식사 결식

- 아침식사 결식률은 식품섭취조사의 '조사 1일전 아침식사 결식 여부'를 이용하여 산출함.
- 아침식사 결식률(만1세이상)은 2017년 남자 29.5%, 여자 25.7%로 전년과 유사함. 남녀 모두 20대(남자 54.9%, 여자 48.6%)가 가장 높았음.

3) 만성질환(2017 국민건강통계_질병관리본부)

(1) 비만

- 비만 유병률(만30세이상)은 2017년 남자 42.4%, 여자 27.7%이며, 남자는 증가 추세이고, 여자는 유지되고 있음.
- 2016-2017년 주관적 비만인지율(만30세이상)은 남자 80.4%, 여자 90.0%이며, 체중감소 시도율(만19세이상)은 남자 55.5%, 여자 67.1%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연도별 변화가 없었음.

(2) 고혈압

- 고혈압 유병률(만30세이상)은 2017년 남자 32.3%, 여자 21.3%이며,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 수록 높았음.
- 최근 3년간 30대 남자는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였음.

(3) 당뇨병

- 당뇨병 유병률(만30세이상)은 2017년 남자 12.4%, 여자 8.4%이며,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 수록 높았음.

(4) 이상지질혈증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만30세이상)은 2017년 남자 20.0%, 여자 22.6%로, 남녀 모두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를 넘어섬.

(5) 기타

- 폐쇄성폐질환 유병률(만40세이상)은 2017년 남자 18.2%로 여자 5.9%의 3배 수준이었음.

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2018)

- (1) 2016년 기준 기대수명과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6.1년, 0.5년 더 긴 반면,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은 남성이 0.4년 더 김.

- (2) 2016년 1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 중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패혈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3) 2016년 여성의 현재 흡연율 6.1%, 고위험 음주율은 5.4%로 전년보다 증가함.
- (4)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5) 본인의 건강이 좋다는 생각은 전년보다 여성은 증가, 남성은 감소하여 남녀차이가 줄어들음.

5) 여성의 정신건강문제

(1) 한국인의 정신질환 실태

-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1번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2)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

- 영국 정신건강재단과 캐나다 정신보건협회는 공통적으로 여성이 정신건강문제에 있어 남성보다 많은 취약성을 가진다고 하였음
- 영국 정신건강재단(Mental Health Foundation, www.mentalhealth.org.uk) 보고
 - 영국인 4명 중 1명은 일생 동안 한 번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겪는다고 함
 - 주요한 정신건강문제는 우울과 불안이며, 남성은 약 17%, 여성 약 29%가 발병함
 - 우울의 경우 여성 4명 중 1명이 겪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인 데에 반해 남성은 10명 중 1명이 겪는 문제이며, 불안 역시 남성보다 여성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2배 정도 높음
- 캐나다 정신보건협회(Canada Mental Health Association) 보고
 - 사춘기가 시작된 이후 여성이 우울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남성의 2배 이상 높음
 - 10~25%의 여성은 생애 한 번 이상 우울을 경험함
 - 일반적으로 여성 중 10%는 임신 중 우울을 경험함
 - 산후 12개월 동안은 기분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
 - 정신질환으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다고 추산하였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으로 야기되는 부담이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정신건강에 대한 기존 연구들
 - 개인의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및 직업,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고 있음
 - 여성이 남성보다 양극성장애를 제외한 기분장애(주요 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와 불안장애(강박장애, 범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과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은 알코올 사용장애가 여자보다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기분장애와 불안장애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여성은 남성보다 섭식장애 유병률이 높으며, 정신장애들 간의 복합상병(우울과 불안) 역시

높게 보고되고 있음

- 남녀의 차이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도움추구행위(help seeking behaviors) 등에서도 지속적인 격차를 보임(여성은 보건소 직원과 같은 Primary Health Care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정신건강문제를 잘 공유하는 반면, 남성은 정신건강문제보다 음주와 같은 문제를 더 잘 공유함)

(3) 우울 및 정서장애

- 우울

- :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 흥미상실, 식욕수면 변화, 피로, 자살 생각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업 상 곤란을 겪는 경우
- 기분장애의 대표 질환인 주요우울장애(우울증) 평생유병률은 5.0%(남 3.0%, 여 6.9%)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음
- 이번 조사에서는 주요우울장애의 일종인 산후우울증을 처음으로 추가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 여성 10명 중 1명(9.8%)은 산후우울증으로 밝혀졌다.
- * 주요우울장애 중 산후우울증 비율: 캐나다 8.7%, 일본 13.6%, 뉴질랜드 14%

- 불안장애

- :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장애
- * 강박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범불안장애
- 불안장애 평생유병률은 9.3%(남 6.7%, 여 11.7%), 일년유병률 5.7%(남 3.8%, 여 7.5%)로, 지난 일 년 간 불안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224만 명으로 추산됨

- 화병과 스트레스

- 화병은 한국인에게서만 나타나는 정신질환이자, 문화고유장애(문화관련증후군) 중 하나로 흔히 마음 속이 답답할 때 화병(울화병, 홧병)이 날 것만 같다는 말을 사용함.
- 화병은 여성이 남성보다 무려 4배이상 많고, 50대에 발생이 높음.
- 화병의 원인은 생활상의 고생, 고부간 갈등, 부부갈등, 억압 등의 문제 때문에 억울함, 분함, 화남, 속상함, 미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恨)과 같은 감정적 요인들임
- “화병으로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감정 해소를 못한 상태에서 오래가면 소위 정신신체장애(심리적.성격적 요인으로 생기는 병, 즉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기타 성인병)들이 나중엔 생김

- 알코올 사용장애

- :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살펴보면, 과도한 알코올 사용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알코올중독자에 비해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뒤따르며, 치료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박탈되어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알코올 사용장애 실태 : 알코올 의존(내성과 금단증상)과 남용(내성과 금단증상 없으나 일상생활에 부적응 발생)이 포함된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12.2%(남 18.1%, 여 6.4%)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았음

- 알코올 사용장애가 특히 남성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감소폭이 크지 않았고 남용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되는 경향을 보임
- 알코올 중독에 대한 홍보 등으로 인해 남성의 알코올중독 치료유입률은 개선되었지만, 여성들은 정신의료서비스를 찾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보건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알코올이 여성에게 주는 영향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알코올에 훨씬 높은 신체적 민감성을 갖고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짧은 기간의 음주에도 급속하게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는 데, 이는 알코올중독을 빨리 진행시키는 단축효과(telescoping effect)에 기인함

2

여성건강정책 발전방안

1) 우리나라의 여성건강정책

-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제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 하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등으로 다양하며, 이 중 여성건강정책에 대한 책임을 단독으로 맡고 있는 부처는 없음
 - 향후 성/젠더의 차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여성의 상황을 고려한 여성건강 연구의 기획이 필요함

2) 국가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제언

- (1) 건강검진사업 대상 연령 및 성별 특이성이 반영되어야 함
- (2) 건강검진사업의 성별 간 형평성을 추구해야 함
- (3) 건강검진사업의 성별 인지도 및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3) 여성정신건강에 대한 제언

- (1) 여성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구축
 - 국내 여성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되는 여러 법들이 있지만 개별 법들의 대상과 목적이 달라 각각 강조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고, 대표적인 정신보건법은 젠더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각각의 개별 법에서 여성과 정신건강을 강조하는 법의 보완이 필요함

(2) 여성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개발이 필요함

- 정책의 목표와 구체적인 세부목표의 설정, 우선순위, 개입이 필요한 영역과 대상, 누가 혹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하고 시간계획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 개입대상으로는 생애주기별 전체 인구집단 및 취약계층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다양한 부문의 협력적 접근이 필요함
- 데이터 구축 및 정보의 제공
 - 현재 5년 마다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여성의 정신건강 실태와 서비스 이용에서 젠더 차이, 여성에게 더 적절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수행평가 및 모니터링, 개입이 필요한 영역의 확인을 위한 조사, 연구와 기존 정신건강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성별분리된 결과의 제공이 필요함
- 여성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한 만큼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 정부의 각 부처와 부문 간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임
- 여성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주무부서가 있어야 하고, 관련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여성정신건강을 위한 국가정책을 중앙과 지역에서 협력체계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제공해야 함
- 정신보건 관련 실천가들에게 젠더 관점에 대한 인식을 더 증진해야 함
 - 정신보건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정에는 젠더가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 실천에 있어서 양성평등 모델이나 여성주의 심리치료 등 여성주의에 대한 교육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학습정리

1. 우리나라 여성건강의 실태

1) 국민건강통계(2017)

- 우리나라는 흡연율, 음주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2018)

- 2016년 기준 기대수명과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김.
- 2016년 1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 중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폐혈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3) 한국인의 정신질환 실태(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2016)

-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1번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2. 여성건강정책 발전방안

1) 우리나라의 여성건강정책

-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제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 하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2) 여성정신건강에 대한 제언

- 여성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구축
- 여성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개발이 필요함

9주차 1강

이혼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학습 목표

- 이혼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실태를 나열할 수 있다.
- 이혼의 예방 및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이혼 개념과 특성 및 실태
2. 이혼 예방 및 사회복지 지원체계

1) 이혼의 개념

(1) 이혼의 정의

- 만 18세 이상의 남자와 만 16세 이상의 여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것을 합의하고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는데, 이렇게 법률상의 부부가 사망에 의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함

(2) 이혼은 법적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는 일련의 사건들이 고리를 이룬 복합적인 과정임

(3) 이혼에 대한 관점

- 1950년대에는 일종의 일탈로 규정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혼을 불행한 결혼관계, 스트레스와 갈등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새로운 자기발견의 기회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기 시작
- 최근에는 이혼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간주하고 결혼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2) 이혼의 종류

(1) 협의 이혼

-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관할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함

(2) 재판상의 이혼

- 법에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두 사람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경우를 말함

3) 법률이 정한 이혼의 원인(민법 제 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4) 이혼의 증가 원인

(1)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여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살아야 한다거나, 이혼한 여자는 ‘소박맞았다’고 하여 실패한 인생으로 간주했고, 친정에서도 가문의 수치로 여겨 딸의 이혼 사실을 숨기곤 함
- 최근엔 ‘부부에게 문제가 있으면 불행한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예전에 비해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점차 약화되었고, 상황에 따라 이혼을 수용하는 태도가 증가하고 있음

(2) 여성들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됨

-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이 자아의식에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남성에 대한 종속, 굴종에서 벗어나 대등한 인격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요구하게 됨
- 여성단체, 대중매체의 홍보 등으로 인간의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여성이 줄어들게 됨
- 여성의 경제적 자립
 - 여성의 취업 증가는 여성에게 경제적 능력을 갖게 했으며, 결혼생활의 갈등이 심각할 경우 이혼을 고려하게 됨

(3) 결혼에 대한 의미의 변화

- 결혼을 남녀의 영구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사랑에 기초한 합의된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함
- 만일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의식이 보급됨
-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 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이혼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4) 자녀수의 감소

- 자녀가 많아서 이혼에 커다란 부담이 되던 과거와는 달리 근래에는 자녀가 1~2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자녀 때문에 불행을 참고 견디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인생을 구속하겠다는 사고가 감소함
- 자녀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중요시하거나 이혼 후 자녀도 훌륭히 양육하면서 자신도 새출발 하겠다는 진보적 사고방식이 생김

(5) 법제도의 변화

- 과거의 가족과 관련된 법은 가족을 유지하고 이혼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컸고 여성에게는 불리함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인정, 면접교섭권 신설, 자녀양육권의 선택과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과거보다는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게 됨

(6) 성역할의 변화

- 우리나라 남성의 역할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가부장제도 하에서의 남성 역할에 더 익숙해져 있고, 여성은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됨
- 가부장적인 아버지로부터 남편의 역할을 학습했던 남성과 가사분담과 자녀양육에서 동등함을 주장하는 아내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됨

5) 이혼에 관한 이론

(1) 사회적 교환이론

- 사회적 교환이론에 의하면 부부의 결혼관계가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고 평가되면 그대로 유지될 것이나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지속되기 어려움
- 결혼생활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현재 존재하는 대안들의 매력 정도, 결혼생활의 붕괴를 방해하는 장벽들이 있음

(2) 성비이론

- 이 이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남성의 인구 비율이 이혼율을 결정한다는 것임
- 남성에 대한 여성이 인구비율이 높아져서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남성들의 생활을 문란케 하여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쉽고, 그에 따라 이혼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

6) 이혼의 실태(출처: 통계청)

(1)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 조이혼율 :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2018년 이혼은 10만 8천 7백 건으로 전년(10만 6천 건)보다 2.5%(2천 7백 건) 증가함.
- 2018년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 2.1건은 1997년(2.0건) 이후 최저임.
-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은 4.5건으로 전년에 비해 0.1건 증가함.

(2) 연령별 이혼현황

- 2018년 남자 평균 이혼연령은 48.3세로 전년에 비해 0.7세 상승함.
- 10년 전에 비해서는 4.0세 상승함.
- 2018년 여자 평균 이혼연령은 44.8세로 전년에 비해 0.7세 상승함.
- 10년 전에 비해서는 4.3세 상승함.
- 남녀 간의 평균 이혼 연령 차이는 3.5세로 2012년(3.9세)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임.

(3) 혼인지속기간 및 미성년자녀 유무

- 이혼 부부의 평균혼인지속기간은 15.6년으로 전년대비 0.6년, 10년 전 대비 2.8년 증가함.
- 20년 전에는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이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20년 이상 및 4년 이하가 전체 이혼의 54.8%를 차지함.
- 혼인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도 지속적으로 늘어 10년 전에 비해 1.9배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의 이혼 비중은 45.4%, 지속적인 감소추세

(3) 이혼 사유별 현황(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2017년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구성비를 살펴보면, 「성격차이」가 43.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제문제」가 10.1%, 「배우자 부정」과 「가족간 불화」가 7.1%로 나타남
- 가족간 불화, 건강문제 등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점차 감소하지만 배우자의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경제문제, 성격차이 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2 | 이혼 예방 및 사회복지 지원체계

1) 이혼여성이 직면하는 문제

(1) 경제적인 문제

-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 새로 직장을 다녀야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임금이 낮고 숙련되지 않은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 가사유지비와 아동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문제

(2) 심리적 문제

- 인생의 실패자라는 느낌을 갖게 하여 분노, 우울, 상실감, 자존심의 저하, 불안감 등을 겪게 됨
- 대인관계를 두려워하여 사회적인 모임까지도 회피함으로써 고립될 상황에 처함
- 이혼자들은 정서불안증이 정상 결혼생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이혼자의 자살률도 결혼자의 3~4배가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빨리 재혼함으로써 이혼의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재혼율이 낮고 정서적 상처를 더 많이 받는 편임

(3) 사회적 고립

- 이혼은 이혼 전까지 맺어온 가족과 가족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법적, 인간적 관계가 끝나는 것임
- 이혼으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이들 중에는 인간관계를 두려워하며 사회적 모임까지 회피함으로써 사회관계망이 약화됨
- 배우자와 관련된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회의 부정적인 관념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

2) 자녀들이 직면하는 문제

- (1) 이혼하는 가정에서의 아동의 생활과 아동이 가지는 관계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영향을 받음
- (2) 이혼의 초기반응: 공포, 생명의 위협, 슬픔, 사실감, 이혼에 대한 거부감, 부모에 대한 분노, 무력감, 강한 외로움, 자신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게 되었다는 강한 죄책감 등
- (3)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이혼 후 더 큰 파괴행동을 보이는 반면, 나이드은 아이들은 우울증상이 많이 나타남
- (4)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이혼 당시 상황을 감정적 측면에서 잘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성인이 된 후 이성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 (5) 아동의 문제는 부모가 이혼 후에 가정생활을 잘 하지 못할 때 커짐
- (6) 아동이 듣는 곳에서 다른 부모 한쪽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아동의 사고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7) 이혼자녀들은 한쪽 부모의 상실로 인하여 역할 모델과 상호 협력의 부족, 부모·자녀관계에서 오는 거리감으로 자녀의 재능과 사회성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8)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느끼게 되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역할 혼돈과 전환을 경험하게 됨

3) 이혼여성을 위한 대책

- (1) 이혼 예방적 측면
 -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 대상: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
 - 목적: 결혼불만 요인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보다 나은 부부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함
 - 내용: 대인관계의 역동성, 가족 내 인간관계, 이성 간의 관계 특성, 의사소통방법, 갈등해결방법
 - 가족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 대상: 위기상태인 부부
 - 목적: 이혼예방을 위한 부부상담 및 치료
 - 내용: 위기의 원인이나 상황에 따라 상담 및 치료방법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므로 여러 유형의 상담 및 치료방법 제안
- (2) 이혼과정에서의 대책
 - 조정 및 중재 사항에서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결심한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 만족스런 이혼을 위한 조정 및 중재, 부부 당사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이혼관련 법률 상담의 기회 제공

- 화해, 조정,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률적 재판을 도움
 - 재판에 있어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 남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혼 후 불리해지는 배우자를 고려해야 함
- 자녀에 대한 배려
 - 부모가 이혼한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지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

(3) 이혼 후 다양한 대책

- 이혼 후의 남녀는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이 되므로 결국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이혼가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경제적 지원(65.4%), 자녀양육비 지원(11.1%), 주거 지원(8.5%) 순으로 나타남

(4)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체계

- 법률부조
 - 가사조정 위원회
 - ♦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인과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
 - ♦ 조정과 화해를 통해 가능하면 이혼을 예방하고, 이혼 시 합리적인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을 조정하도록 유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 ♦ 소송비용이 없는 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 ♦ 내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함
- 심리적 지원 상담
 - 한국이혼자클럽
 - ♦ 이혼 혹은 별거한 남녀를 대상으로 한 집단모임
 - ♦ 이혼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 실시
 - 가족과 성 상담소
 - ♦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
 - ♦ 전문가 가족상담 실시
 - 여성의 전화
 - ♦ 이혼여성을 위한 집단상담 실시
 - ♦ 자조집단 구성하여 사회적 지지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있음
- 민간차원의 복지체계

- 여성단체
 - ◆ 여성민우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으로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 집단, 법률상담,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복지관
 - ◆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제공
- 인터넷 공동체
 - ◆ 서로의 아픔과 다양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활성화 됨
- 종교단체와 연구소
 - ◆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종교를 매개체로 이혼 혹은 사별한 여성들 중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혼을 위한 만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학습정리

1. 이혼 개념과 특성 및 실태

1) 이혼에 대한 이해

- 만 18세 이상의 남자와 만 16세 이상의 여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것을 합의하고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는데, 이렇게 법률상의 부부가 사망에 의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함

2) 이혼의 증가 원인

-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들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 여성의 경제적 자립, 결혼에 대한 의미의 변화, 자녀수의 감소, 법제도의 변화, 성역할의 변화

3) 이혼에 관한 이론

- 사회적 교환이론, 성비이론

2. 이혼 예방 및 사회복지 지원체계

1) 이혼여성이 직면하는 문제

- 이혼여성이 직면하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 문제, 사회적 고립
- 자녀들이 직면하는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역할혼돈 및 전환, 자녀의 재능과 사회성에 부정적 영향

2) 이혼여성을 위한 대책

- 이혼 예방, 과정, 이혼 이후 측면으로 구분하여 대책 마련
-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체계: 법률부조, 심리적 지원 상담, 민간차원의 복지체계

9주차 2강

재혼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학습 목표

- 재혼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실태를 나열할 수 있다.
- 재혼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재혼의 개념과 특성 및 실태
2. 재혼가족이 직면한 문제와 사회복지 지원체계

1 재혼의 개념과 특성 및 실태

1) 재혼가족의 개념

(1) 국내

- 재혼이란 이미 한 번 또는 그 이상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배우자와 새롭게 가정을 재구성하는 것임

(2) 미국

- 재혼이란 배우자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 이상의 결혼으로 자녀가 있거나 없으면서, 하나의 가구를 유지하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됨

(3) 계부모가족(stepfamily)의 개념

- 부모의 한쪽이 친부모이며, 그 친부모가 재혼하기 전에 출생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임
- 연구자에 따라 계부모가족은 최소한 1명의 기혼자가 전혼관계에서 1명 이상의 자녀를 데리고 있으며, 그 자녀가 같은 가구에서 사는 경우의 가족(Crosbie-Burnett, 1989)으로 정의하여, 자녀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음

2) 유형

- (1) 재혼가족의 유형은 재혼부부의 결혼지위(미혼, 이혼, 사별), 자녀 유무, 자녀양육 유무 및 재혼자의 연령에 따라 매우 다양함
- (2) Clingempeel 등(1987)은 재혼부부 각각의 전혼자녀 유무와 양육권 유무를 기준으로 재혼가족을 분류했는데, 이는 재혼가족 내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함

<표 1> 재혼가족의 아홉 가지 구조적 유형

			아내의 전혼자녀 유무		
			전혼자녀 없음	전혼자녀 있음	
				양육권 없음	양육권 있음
남편의 전혼자녀 유무	전혼자녀 없음		무자녀 재혼가족**	비동거 계부가족 (nonresidential stepfather family)	동거 계부가족 (residential stepfather family)
	전혼자녀 있음	양육권 없음	비동거 계모가족 (nonresidential stepmother family)	비동거 계부모가족 (nonresidential stepparent family)	혼합 계부형 계부모가족 (mixed stepparent family)
		양육권 있음	동거 계모가족 (residential stepmother family)	혼합 계모형 계부모가족 (mixed stepparent family)	동거 계부모가족 (residential stepparent family)

3) 재혼의 특성

- (1) 재혼을 하려는 사람들은 유사한 결혼조건을 갖는 사람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혼한 사람끼리 재혼하는 경향이 있음
- (2)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이혼했던 경험이 있는 재혼인 경우 초혼에 비해 친지나 친구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나 축하를 받지 않음
- (3) 대부분의 이혼한 사람들은 전 배우자의 자녀를 갖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전 배우자와의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나 신뢰감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데 시간이 걸림
 - 재혼한 부부의 경우 만일 남편이 이혼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자신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거기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정적 압박을 경험함
- (4) 이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혼은 초혼의 경우보다 인간적으로 성숙되었기 때문에 때때로 아주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기도 함
 - 이는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이해하는 것이 결혼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결혼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임
- (5)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초혼에서와 같이 재혼에서도 이혼으로 끝을 맺기도 함
 - 이혼 후 재혼한 사람이 초혼의 경우보다 더 많이 이혼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두 사람 모두 이혼경험이 있을 때의 재혼이 초혼에서 이혼하는 경우의 약 2배가 됨
 -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혼의 파경원인이 재혼의 경우에도 계속 남아있음을 발견함
 - 이혼한 사람들에게 인간관계 교육과 재혼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부분임

4) 재혼과 자녀

- (1) 재혼에 있어서 중요한 적응 중 한 가지는 자녀와 계부, 계모 간의 관계임
- (2) 자녀의 적응에서 자녀의 나이는 중요한 요인이 됨
 - 아주 어린 자녀들과 성인 자녀들은 사춘기에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계부, 계모를 받아들임
- (3) 사별에 의한 경우보다 이별에 의한 재혼일 때 자녀들은 더 쉽게 받아들임

5) 재혼가족의 실태

- (1) 연도별 · 종류별 혼인의 실태(2018 혼인 이혼 통계)
 - 2018년 남자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초혼이 84.0%, 재혼이 16.0%임.
 - 전년대비 초혼은 2.8%, 재혼은 1.4% 감소함.
 - 2018년도 여자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초혼이 81.6%, 재혼이 18.1%임.
 - 전년대비 초혼은 3.0%, 재혼은 1.3% 감소함.
 - 남녀 모두 초혼은 77.6%, 남녀 모두 재혼은 11.9%를 차지함.
 - 전년대비 초혼과 재혼 모두 감소했으며, 남녀 모두 초혼(-3.0%)과 남자재혼+여자초혼(-3.0%)이 가장 많이 감소함.

(2) 평균 초혼 및 재혼 연령

-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30.4세로 남녀모두 전년에 비해 0.2세 상승함.
-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1.8세, 여자는 2.1세 상승함.
- 평균재혼연령은 남자 48.9세, 여자 44.6세로 남녀모두 전년에 비해 0.2세 상승함.
-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3.9세, 여자는 4.3세 상승함.
- 남녀 간의 평균초혼연령 차이는 2.8세로 저년에 비해 0.1세 상승함.

2

재혼가족이 직면한 문제와 사회복지 지원체계

1) 재혼가족이 직면하는 문제

(1) 사별 후의 재혼적응문제

- 결혼생활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가족관계에서 배우자를 잃었을 경우, 이혼보다 급작스럽게 준비 없이 당하게 되므로 적응하는 데는 더욱 곤란을 느끼게 됨
-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지장을 가져오고, 핵가족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혼자된 노인은 고립감과 역할 상실 등의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수명 단축 및 자살률의 증가, 행동의 장애 등을 나타내기도 함
- 주위 사람들의 동정이나 가능한 면의 원조를 받을 수 있고, 사별 초기에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정신적 타격이 크게 작용하겠으나, 시일이 경과하면 체념상태에 이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각오와 가족 간의 단결이 강화될 수도 있음
- 재혼의 가능성으로 보아서는 남성이 유리하나 기혼 자녀와 동거를 할 경우 기존 역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문제를 갖게 되는 반면, 여성은 재혼가능성이 적으나 역할의 계속이 가능하므로 적응에 도움을 받기도 함

(2) 이혼 후의 재혼적응문제

- 이혼은 이미 별거 또는 가출, 유기 등의 비정상적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에 의한 역할 변화보다 변화기가 충분히 있는 경우가 많고, 대개 결혼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관계이므로 배우자 상실에 대한 고통은 덜할 수도 있음
- 이혼한 사람을 주위에서 관찰하면, 불안, 수치심, 이혼자라는 선입관, 성적 욕구, 주체성의 위기 등에 대한 당사자의 적응뿐 아니라 자녀의 적응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특히 이혼 당사자의 경우 감정적인 격분을 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분노가 장기화하여 때로는 이성애에 대한 증오, 정서불안, 자살의 유혹, 불건전한 성생활, 열등감 등 이상심리에 빠지기 쉬움

(3) 자녀의 적응문제

-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실감, 고독감으로 인한 불안정, 부적절감으로 고통을 받으나, 부모가 이혼할 경우 양부모에 대한 충성심에 갈등을 느끼게 됨
-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정현숙, 1996)
 - 이혼 이후 기간이 길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할수록(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통념) 양육부모의 재혼이나 성에 관계없이 양육부모와 긍정적 대화를 많이 하고, 비친권 부모와 접촉을 많이 할수록 이혼 후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들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인들은 가족의 구조적 특징보다는 자녀들의 현재 양육부모 혹은 비친권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외국의 동성부모가설(同性의 부모가 친권을 가질 때 더 잘 적응한다)과는 달리 남아가 부모의 친권 유무에 관계없이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혼가족을 위한 문제영역 체크목록표 】

<재혼가족이 기능적 단위로 발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영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계부모의 어려움
- ▶ 계형제자매 간의 라이벌과 질투
- ▶ 경계의 모호성
- ▶ 전 배우자 사이의 미해결된 갈등
- ▶ 생물학적 어머니와 계모 사이 혹은 생물학적 아버지와 계부 사이의 경쟁
- ▶ 부재 부모에 대한 이상화
- ▶ 부모와 계자녀(비생물학적 자녀)의 친밀감 결여
- ▶ 부재 부모와 계부모에 대한 아동의 충성심 갈등
- ▶ 부재 아동과 계자녀에 대한 부모의 충성심 갈등
- ▶ 자녀의 성이 다른 문제
- ▶ 재혼에서 출생한 자녀의 영향
- ▶ 재정적 의무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비, 자녀양육비 지급)
- ▶ 청소년 이슈- 양육권 변화의 요청, 느슨해진 성적 경계

출처 : Goldenberg & Goldenberg(1998 : 165), 이원숙(2004 : 355) 재인용.

2)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가족생활교육

- ① 재혼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혼 준비를 위한 예비교육이 요구됨
- ②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화한 프로그램, 안내책자, 지침서 등의 개발과 신문이나 방송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한 재혼가족의 모델을 제시하는 정보적 지원활동이 필요함
- ③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재혼부부의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

내용은 물론, 특히 전혼자녀의 훈육이나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 크므로 반드시 부모역할 및 계부모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④ 재혼가족 내 자녀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가족생활을 다룬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유형(이혼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의 장단점과 갈등양상, 그리고 슬기로운 대처방안,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내용들을 좀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함

(2) 가족상담 및 치료

- ‘온전한’ 가족에 대한 정서적 개념을 극복하는 일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하며 계부모가족을 핵가족 틀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불필요함
- 계부모가족을 초혼가족과 다르게 평가하는 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에 계부모가족의 개인들은 정서적으로 더 혼란스러움
- 성공적인 계부모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치료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적 중재는 정당성 교육, 무력감의 감소, 부부관계의 강화임
-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를 치료하는 데에서 치료과정에 새로운 부부와 더불어 전배우자, 조부모 혹은 다른 중요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이 때때로 중요함
- 공동상담이나 공동치료자가 함께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3) 동년배 지지집단 형성

-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재혼가족)끼리 자신들의 문제와 갈등, 관심사를 표현함으로써 그 상황이 자기 가족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 따뜻하고 지지적인 장을 제공받게 됨
- 재혼가족에서 발생하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기술 및 부모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이 문제에 대처하는 창조적 방법에 대해 듣고 자신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공식적 모임이 끝난 뒤에도 동년배 지지집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받음으로써 지속적인 상호 지지가 가능하다는 유익한 점이 있음

(4) 재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

- 가족전문가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잘 적응하는 계부모가족의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하여 일반인의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해야 함
 - 계부모가족은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장기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극복해나가므로, 동일한 가족을 추적하여 이들 가족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극복해나가는지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함
- 계모에 대해 나쁜 선입견을 갖게 하는 우리 전래동화와 외래동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 계모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새로운 동화의 보급이 필요함
- 오늘날 대중매체가 갖는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신문이나 방송, 드라마와 같은 대

중매체에서 계모나 재혼가족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관심이 모아져야 함

- 재혼가족관계를 갈등, 대립의 구도로 지나치게 묘사하거나 혹은 그와 반대로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미화하여 묘사하기보다는 현실적 문제들과 갈등을 표현하는 가운데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모습, 화목하고 건강한 재혼가족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함

■ 학습정리

1. 재혼의 개념과 특성 및 실태

1) 재혼가족의 개념

- 재혼이란 이미 한 번 또는 그 이상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배우자와 새롭게 가정을 재구성하는 것임

2) 재혼가족의 유형

- 재혼가족의 유형은 재혼부부의 결혼지위(미혼, 이혼, 사별), 자녀 유무, 자녀양육 유무 및 재혼자의 연령에 따라 매우 다양함

3) 재혼의 특성

- 재혼을 하려는 사람들은 유사한 결혼조건을 갖는 사람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혼한 사람끼리 재혼하는 경향이 있음

4) 재혼가족의 실태

- 남녀 모두 초혼 구성비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재혼 구성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2. 재혼가족이 직면한 문제와 사회복지 지원체계

1) 재혼가족의 문제

- 사별 후의 재혼적응문제, 이혼 후의 재혼적응문제, 자녀의 적응문제

2)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동년배 지지집단 형성, 재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

10주차 1강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실천

학습 목표

- 미혼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실태를 나열할 수 있다.
- 미혼모가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미혼모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미혼모의 개념과 특성 및 실태
2. 미혼모가 직면하는 문제와 대책

1) 미혼모의 이해

(1) 사회사업사전(1996)

-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라고 기술됨

(2) 한국여성개발원(1984)

- “미혼의 상태에서 혼전임신 및 출산 또는 별거, 이혼, 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기를 가진 여성“을 총칭함

(3) 미국 사회복지사회협회(NASW)

- “치녀로서 비합법적인 아기를 가지게 된 경우는 물론, 별거, 이혼, 배우자 사망의 상태에서 법적 배우자와의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여자”라고 언급함

2) 미혼모를 보는 관점들

(1) 사회적 일탈자로 보는 관점

- 결혼관계를 통한 성행위만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규율에서 벗어나 혼전 성행위를 통해서 임신한 것으로, 사회적 일탈자로 여겨지고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간주되고 있음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도 일탈행위에 대한 교정과 사회적 기준을 재교육하고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우리나라 법에서의 미혼모는 지위가 모호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도 출산 전후로 한정되어 있음

(2) 요보호자로 보는 관점

- 미혼모가 되기 전에 필요했던 교육과 상담 등 혼전임신을 막을 수 있는 제반 서비스, 즉 사회적 지원이 부족했던 사람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자립에 요구되는 제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
- 미혼모들 중에는 임신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다고 해도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출산에 이른 경우도 많음
-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먼 곳에 숨어서 모든 문제를 혼자 감내하는 경우도 많아서 요보호자로 보고 있음

(3) 성차별의 희생자로 보는 관점(여성학적 관점)

- 미혼모 문제는 가부장적 사회의 성차별로 인한 문제로 봄

- 남성 중심적 성규범과 특정유형의 가족을 지지하고 혼인의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성과 성행위를 통제하려는 여성억압으로 간주하는 관점임

(4) 가족의 한 형태로 보는 관점

- 미혼모와 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한 개인의 결정으로 보는 관점
- 주로 북구 여러 나라에서 선택하는 관점으로 성과 결혼 그리고 아동과 인구정책 등에 대한 태도와 연관되어 있음
- 미혼모와 그 가족은 한부모 가족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으며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음
- 이런 사회 형태를 보면 미혼모 문제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것임을 알 수 있음

3) 미혼모 발생 원인에 관한 관점들

(1) 초기의 심리학적 관점

- 미혼모가 된 여성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접근으로 미혼모 발생 원인이 잠재의식적인 심리 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 보다는 정신분석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과 의식 중심의 관점이 있음
 - 정신분석학적 관점
 - ♦ 부모와의 심리내적 갈등 중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분노와 증오를 혼전 임신의 형태로 표출한다고 보고 혼전임신을 일종의 자기학대로 보는 관점
 - 심리학적 관점
 - ♦ 미혼여성이나 10대 소녀가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박탈된 가족환경에서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무의식적인 사랑의 욕구에 의하여 동기화됨으로써 임신을 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
 - ♦ 혼전임신은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성인됨을 추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자신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된다고 보는 관점
 - 의식 중심 관점
 - ♦ 미혼모가 의식적으로 임신을 원했다고 보는 관점
 - ♦ 이 경우는 미혼모의 소수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2) 생태학적 관점

-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혼모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개인적 요인
 - ♦ 어머니와의 갈등,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아버지에 대한 갈등, 사랑이라는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정한 경험, 선천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가 유난히 강하거나 지능이 낮아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경우와 같이 미혼모의 가치관이나 성격이 사회적 규범이나 통념을 초월하여 사회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가 해당됨
 - ♦ 드물지만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관에 반항하는 경우, 성격장애나 정신분열증 등 정신

적 결함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해당됨

- 가정적 요인

- 부모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미혼모의 가정안에서의 불안과 긴장이 높아짐
- 부모자녀 관계 손상으로 부모의 사랑, 이해 결여, 부부관계 손상으로 가족 간의 대화
- 단절, 빈곤가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무관심과 학대 등의 요인

- 경제적 요인

- 직접적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가족의 능력 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생활 방식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어릴 적부터 취업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취업환경 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이성교제가 설정될 수 있음
- 교육수준과 관련 있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윤락의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요인은 미혼모 발생의 환경적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사회문화적 요인

- 가정 기능의 약화, 성윤리의 변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
- 대중매체의 퇴폐적이고 자극적인 성적 자극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성문제를 유발시킴

(3) 원하지 않은 임신

- 과거에는 미혼모가 빈곤, 결혼가정, 취업근로여성의 증가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면, 최근에는 이성교제에 의한 임신이 80%이상으로 나타남
- 부모의 이혼, 재혼 등의 새로운 가정환경에 대한 부적응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 미혼모의 증가가 사회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혼모들이 대부분 피임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보다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조사에서 그 원인이 일부 드러남
-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어 피해자에게 이중의 불행을 가져다주기도 함

4) 미혼모의 정의와 현황

- (1) 본 학습에서 정의한 미혼부모는 법적으로 미혼이면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임.
- (2) 미혼모가 미혼부보다 2배 이상 많음.
 -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미혼모는 2만 2천명(자녀2만 6천명), 미혼부는 8천명(자녀1만명)임.
- (3) 연령별로 보면, 35~39세 연령대의 미혼모가 4천672명으로 가장 많고, 미혼부는 45~49세 연령대가 1천964명으로 가장 많음
 - 2017년 기준 미혼모·부의 자녀수는 35,838명으로 2016년 39,065명에 비해 3,227명(-8.3%) 감소

- (4) 많은 미혼모들이 낙태와 입양, 양육 여부를 두고 고심하게 됨.
- 대부분 어려운 경제적 상황 탓이 크지만 미혼모를 ‘비정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이 큼
 - 초저출산 시대에도 해외입양을 이루어지는 것은 미혼모를 포용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임.
- (5) 정부의 ‘양육 미혼모’ 지원은 별도의 정책이 따로 있지 않고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에 포함돼 있는 수준에 그침.
- (6)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 정부 정책은 주로 미혼 임신부의 산전후 관리를 돕는 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입양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컸음
 - 미혼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혼외임신을 수용하지 않는 직장 문화를 개선하는 등 구직 및 고용에서 미혼모에 대한 차별금지가 필요하다고 함

2 | 재혼가족이 직면한 문제와 사회복지 지원체계

1) 미혼모가 직면한 문제

- (1) 미혼모에 대한 시각의 문제
- 우리사회에서 미혼모는 사회적 일탈자로 보는 경우가 많음
 - 미혼모는 자신의 임신사실을 숨기고 가족에게조차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당함
 - 미혼모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여성스스로의 처신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2) 낙태문제
- 청소년들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피임 등의 방법을 택하기보다 임신했을 때 낙태를 택하는 경우가 많음
 - 낙태는 임신초기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임신 8~9개월 된 경우에도 행해지고 있어 생명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사라지고 있음
 - 조기 성교육을 통해 낙태의 문제점을 알리고 피임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요구됨
- (3) 미혼부의 책임 회피
- 미혼모의 책임은 여자만의 책임이 아님
 - 미혼부들은 자신의 아이에 대해 미혼모와 공동으로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 미혼모들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미혼부들에게 알리는 경우가 57%밖에 되지 않아 스스로도 임신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음
- (4) 미혼모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 1984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혼여성을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과 출산전후 6개월 이내의 보호시설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음
- 미혼모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의 수가 매우 적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와 같이 입소하는 경우가 있어 특정 상황에 맞춘 복지를 제공받기 어려움
- 미혼모 보호를 위한 제도는 한부모나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어 미혼모가 주가 되는 제도가 아님

2) 미혼모를 위한 대책

(1) 특수치료비 지원의 현실화

- 미혼모 특수치료비는 시설에 수용된 미혼모의 정상분만에 소요되는 제경비(정상분만아, 산전, 산후 조리비, 신생아 보호비, 치료약품비)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분만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산모 1인 출산 시 소요되는 비용은 자연분만 시와 제왕절개 분만 시를 구분, 기타진료비, 산전, 산후 조리비, 치료약품비 등을 포함하여 현실화하고 예산편성시 의료수가에 미치지도 않는 비용으로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함

(2) 전문가 상담비의 지원

- 현재의 미혼모시설에 대한 상담은 시설 자부담 상담원을 채용하여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이 있음
-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생활지도교사가 상담을 실시하거나 정부 산하의 부녀상담원이 주로 상담을 실시함
- 부녀상담원은 미혼모를 포함한 요보호여성 전반에 대한 상담과 일반여성을 위한 상담까지 수행하고 있어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미혼모가 입소시부터 퇴소시까지 그들을 안전하고 편안한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원이 시설에 배치되고, 인건비도 함께 지원되어야 함

(3) 직업훈련비의 지원

- 미혼모가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설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 직업훈련에 필요한 훈련비(수강료), 교통비 등 제비용을 실비로 제공해야 함
- 전문기능인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4)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미혼모의 많은 경우 아기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입양하기를 원함
- 아동의 시설입소를 선택한 미혼모의 경우에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양육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여 미혼모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함
- 미혼모자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살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모자시설이 필요

함

- 시설이 현행같이 3년이 아니라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함
- 모자복지시설 내에는 탁아시설이 없고 본인부담으로 보육시설에 영아를 맡기고 취업해야 하는 입장이며 입소규정에 있는 미혼모의 우선 입소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임
-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을 시설 내에 설치하는 등 미혼모만을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함

(5) 미혼부 양육 책임에 대한 의무법의 제정

- 외국의 경우 아동에 대해서 결혼관계에 놓이지 않더라도 아동의 모와 부가 공동의 책임을 지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임신을 여성만의 책임으로 보고 특히 혼전임신에 대해서는 여성의 도덕성이 결여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여기기 때문에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 여성들은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을 지니게 될 뿐만 아니라 낙태나 입양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킴
- 남성들에게도 자신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에 대해서 강제하는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학습정리

1. 미혼모의 개념과 특성 및 실태

1) 미혼모를 보는 관점들

- 사회적 이탈자로 보는 관점, 요보호자로 보는 관점, 성차별의 희생자로 보는 관점(여성학적 관점), 가족의 한 형태로 보는 관점

2) 미혼모 발생원인에 관한 관점들

- 초기의 심리학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 원하지 않은 임신

2. 미혼모가 직면하는 문제와 대책

1) 미혼모가 직면하는 문제

- 미혼모에 대한 시각의 문제, 낙태문제, 미혼부의 책임 회피, 미혼모 복지제도의 문제점

2) 미혼모를 위한 대책

- 특수치료비 지원의 현실화, 전문가 상담비의 지원, 직업훈련비의 지원,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미혼부 양육 책임에 대한 의무법의 제정

10주차 2강

한부모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학습 목표

- 모자가정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실태를 나열할 수 있다.
- 모자가정이 직면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모자가정의 개념과 특성 및 실태
2. 모자가정이 직면하는 문제와 대책

1) 모자가정의 이해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

(2) 모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보호받는 가족 모두를 포함함

(3) 편모가족

- 2001년부터는 부정적이고 결손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 편모를 ‘한부모’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어느 가정과 똑같이 평등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나타냄

(4) 모자가정 관련법

- 모자복지법 제정(1989년)
- 모자복지법의 개정(1998)
 -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그 명칭을 변경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2002)
 - 같은 조건의 남성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변경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2007)
 - 조손가족이 늘어나면서 이들까지 보호대상자로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함께 도모함
 - 자녀가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함

(5) 모자가정의 증가원인

- 배우자와의 사별
 - 배우자의 사망은 모자가정이 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임
 - 과거에는 전쟁과 의료 기술의 미발달로 인해서 발생했으나 현대 이후에는 교통사고와 재해 등의 증가가 주요인임
- 배우자와의 이혼
 - 배우자와의 이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배우자의 유기
 - 한 배우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다른 배우자와 자녀를 고의적으로 떠나는 경우
- 배우자의 장기투옥이나 입원
 - 배우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정신질환 등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투옥 또는 입원하는 경

- 우
 - 미혼모
 -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가 낙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모자가정보다 입양을 택하는 경우가 많음

2) 한모자가정의 실태(2016 인구주택총조사)

-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는 557만3천 가구, 영유아자녀가 있는 가구는 205만6천 가구임

2 | 모자가정이 직면하는 문제와 대책

1) 모자가정이 직면한 문제

(1) 경제적 문제

- 여성가구주는 가계를 책임지기 위해 갑자기 일자리를 찾아야 하므로 구직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규직 노동보다 단순노무, 행상, 하위서비스직 등의 저임금 직종이나 비정규직에 종사할 수밖에 없음
- 모자가정여성에게 건강상태의 부실,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낙인, 무력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됨
-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이 떨어지며, 개인적인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게 됨
-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경험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여성에게 있어 취업 기회의 제한은 다른 일반 여성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침
- 자녀 등 가구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공적인 일자리를 원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2) 자녀양육 문제

- 한부모가정 여성들의 일자리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야근이 잦거나 새벽에도 일을 나가는 등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이나 방과 후 공부방 등의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공부방은 그 수요에 비해 시설 자체가 매우 부족한 편임
-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 등 자녀들의 다양한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형편임
-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가족해체, 부정적인 사회인식 등 복합적인 이유로 학습이 부진하거나 정서적·심리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 한부모가정 여성들은 자녀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의논 대상자나 심리적 지지

를 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음

(3) 의료 문제

- 빈곤 여성가구주들은 본인이나 가족원이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도 많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기 때문에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게만 법정 지원이 가능할 뿐이고, 법정 한부모가족 여성가구 및 차상위계층가정은 자녀를 제외한 가구주의 경우 의료급여와 같은 공공부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됨
- 오랜 기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 왔던 여성가구주들은 허리디스크, 관절염, 위염 등 장기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에 걸린 경우가 많음
- 불친절한 의료인의 태도,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무시를 당하거나 치료나 수술을 거부당한 경험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의료급여 대상자임을 숨기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음

(4) 주거 문제

- 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이 가능한 여성 중에는 입주 시 필요한 보증금이 없어서 입주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 여성가구주들이 정부정책 중 가장 많은 수가 희망하는 것은 생활비 지원이고 그 다음으로 주택자금 용자로 나타난
- 현재는 용자 대출액이 적은 편이고, 은행부채가 있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용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여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면서 자립하고 싶어하지만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여성복지시설과 연결되어도 정원초과로 인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함
- 보호시설에 입소하더라도 보호기간은 3년 이내로 여성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음

(5) 심리·정서적 문제

- 대부분 모자세대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어머니는 물론 온 가족이 정서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추론됨
- 남편과 이별한 여성들은 가난과 남편의 부재로 인한 역할과중, 주변으로부터의 고립 등으로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됨
- 일반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 여성은 가족생계 책임, 자녀양육, 집안 살림 등 많은 책임을 혼자 도맡아야 함
- 가정 내 역할 수행상의 혼란, 사회적 낙인 및 위축감, 과중한 역할부담 등 많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수반함
- 일반 기혼여성보다 스트레스나 죄의식, 우울, 불안, 소외감을 더 많이 느낌
- 저소득여성가구주의 일부분은 자녀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불안정하게 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녀의 정서가 불안해지거나 이탈과 비행을 경험하게 됨

- 저소득 한부모여성들을 위한 상담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이나 예방차원보다는 단편적이고 사후치료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일부 한부모여성들은 실제 공공상담기관이나 복지관 상담실을 이용해본 적이 있으나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6)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빈곤여성들은 수급자가 되기 힘든 상황임
 -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의 가구 인정 특례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모가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되지 못함
 - 친정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는 모자가정이나 친정부모집에 거주하는 이혼·사별한 딸 등의 경우는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조건임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받지 않음
- 국민연금
 - 연금제도는 전일제로 일하고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 없는 남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이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함
 - 여성은 남성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활동 형태와의 다른 경제활동의 특성으로 인해 연금 혜택에서 불리하게 됨
 - 저소득 한부모가정 여성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도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의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비율이 높음
 - 연금제도에서 여성은 남성의 피부양자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시불로 연금을 수급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액수 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많은 경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연금제도와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지 않고서는 남성부양자가 없는 여성의 빈곤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2)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대책

(1) 정책적 지원

- 생계비 지원
 - 같은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도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구분하여 공포하도록 함으로써 보충적 지원이 가능해야 함
 - 가구원 중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생계유지를 위해 특별경비를 요하는 경우나 전문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교육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야함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은 일반 가정의 빈곤보다 빈곤탈피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을 도와주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 노동부, 비영리법인 훈련소를 통해 모자가정여성들에게 간단한 훈련뿐만 아니라 기능직

- 직업훈련도 실시해야 함
- 기능직종, 비전통적 여성 직종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고 고소득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함
- 이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 가정의 생계를 보조해 줄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 특정영업권 우선 배정
 - 공공시설 내에 매점 또는 식당, 휴게실,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영업권 배정 우선순위를 여성가주 세대에게 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소득을 보장함
 - 국가 전매사업(담배, 인삼 등)의 영업권 배정에서도 특혜를 주는 방안과 버스표나 복권판매 등 전문지식이 없어도 여성의 단순 노동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한 업종의 개발 및 활용이 강구되어야 함
- 기타 소득보장정책
 - 직접 소득보장대책을 쓰지 않더라도 사회사업기관이 다양한 소득보장대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불하거나 법적·행정적 지원을 동원하는 방안임
 - 생업자금 지원제도를 여성세대 지원책으로 활성화시켜 재정보증제도의 개선과 지원자금의 재원확대가 시급함
 - 저소득 모자가정여성의 경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검진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2) 실천적 지원

- 개별상담
 -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은 사랑과 애정의 공급원천이 부부가 있는 가족과는 다르며 상대적으로 정서적 고통을 느낄 수 있음
 -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며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음
 - 한부모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기 어려운 어머니 개인의 생애발달주기와 가족발달주기에 따른 생활과업과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개별상담이 필요함
- 부모교육 및 훈련
 - 바람직한 부모역할이 무엇이며 또 한부모 상태에서 부모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자녀를 양육하는 다양한 기술을 훈련시킴으로써 부모역할 수행 능력을 길러주어야 함
- 집단상담
 - 집단상담은 어머니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임
 - 자조집단은 구성원들에게 무엇보다도 동반자적 연대감과 지지와 위로를 공유하며 정보교환을 통해 삶의 지혜와 사회생활 기술을 배양하는 이점이 있음
 - 모자캠프의 호응도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비록 단시간 동안이기는 하여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모였을 때 그 집단이 주는 정신적 위로를 체험하기 때문임
- 가족상담
 - 가족상담은 자녀양육에 관한 상담, 자녀진로지도상담, 가족대화법상담 및 가족치료를 포함

함

-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이 경제적 문제 다음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은 자녀와의 문제임
- 가정생활의 불화가 자녀들의 청소년비행의 발생과 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상담이 필요함
- 가족상담을 통하여 모자간의 대화 증진, 가족들의 자긍심고취, 인간관계훈련, 가족유대의 식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음
- 모자가족의 강점을 강조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 가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을 통해서 친척이나 친구, 이웃 혹은 사회기관 중에 한부모여성에게 지지가 될 만한 자원을 찾아내어 이들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있음
- 모자가족에 대한 사정 시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한 지지적 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됨

■ 학습정리

1. 모자가정의 개념과 특성 및 실태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

2) 모자가정 관련법: 한부모가족지원법

3) 모자가정의 증가원인

- 배우자와의 사별,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의 유기, 배우자의 장기투옥이나 입원, 미혼모

2. 모자가정이 직면하는 문제와 대책

1) 모자가정이 직면하는 문제

-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문제, 의료 문제, 주거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2)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대책

- 정책적 지원: 생계비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특정영업권 우선 배정, 기타 소득보장정책
- 실천적 지원: 개별상담, 부모교육 및 훈련, 집단상담, 가족상담

11주차 1강

이주여성과 사회복지실천 I

학습 목표

- 결혼이주여성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현황을 나열할 수 있다.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의 실태를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과 특성 및 현황
2.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의 실태

1)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여성의 이주

-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과정은 자본주의의 세계적인 확산과 맞물리며 지역적으로 불평등한 발전을 심화시키기도 함
- (1) 국제적인 인구이동의 대부분이 제3세계에서 제1세계로의 이동이라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임
- (2) 그 배경에는 불평등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전 속에서 후진국 내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전반적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현상이 자리하고 있음
- (3) 많은 후진국의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삶의 기회를 찾아 선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주한 것임

2) 여성 이주의 특징

- (1) 노동 이주의 경우 돌봄·서비스 노동 중심의 이주가 대부분임
 - 가사도우미나 노인 및 환자를 돌보는 돌봄노동과 엔터테이너와 같은 서비스노동이 그것임
 - 고용조건과 처우에서 남성 이주자들에 비하여 열악하고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으며, 질 낮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음
 - 이주여성의 돌봄노동의 증가의 배경에는 선진국의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이로 인한 국제적인 성별분업의 심화에 기인함
 - 호쉴트(Hochschild)는 ‘글로벌 케어 체인(global care chain)’이라는 개념을 사용함
 - 이는 선진국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숙련, 전문직 일자리가 확대되고, 여기에 자국 여성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에서의 가사노동과 가족구성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임
 - 선진국 내에서도 돌봄과 관련한 성별분업의 현상은 변하지 않은 채 기존의 돌봄의 주체였던 자국 여성이 이주여성으로 대체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
- (2) 여성 이주자들은 착취, 폭력, 학대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성적 착취나 인신매매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강간을 비롯한 신체적 폭력은 물론 정서적, 경제적, 언어적 폭력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데, 이러한 폭력이 가정과 같은 개인의 생활 영역인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관리, 감독 및 통제가 미치기 어려움
- (3) 이주의 주요 방식은 남성에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결혼이주 방식으로 이루어짐
 - 대부분 제3세계 출신의 여성들로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이주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민정책이 가족이민이나 노동이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서 여성이 가장 쉽게 한국에 정착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
 - 성인직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여성들이 이주국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재생산과 돌

봄의 새로운 담당자가 된다는 것과 깊은 상관관계에 있음

- 여성의 노동이주가 ‘취업’의 형태로서의 돌봄노동의 국제적 이동이라고 한다면, 여성의 결혼이주는 가정 내에서 또 다른 돌봄노동의 국제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이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를 향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더 잘 사는 나라의 남성과 결혼하는 상황은 빈곤국 여성의 경제적 동기와 새로운 삶의 기회에 대한 욕망이 결혼에 개입된다는 것을 의미함
- 여성은 자연스럽게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권력관계 안에 편입되는 것임

3)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1) 국제결혼 증가

- 한국의 국제결혼 및 외국인주민의 현황
 -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부터임
 -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당시 만해도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나타난 다문화가구 수는 14만 4천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330천 명으로 집계되어 지난 십여 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다문화가구 수는 31만9천 가구로 전체 가구원 수는 96만 4천명에 추정되며, 그동안의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머지않아 국내 다문화가족의 수는 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 혼인 이혼 통계의 전국 통계를 볼 때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는 경기(27.6%), 서울(20.4%), 인천(6.2%)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음
 -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2만2천7백 건으로 전년대비 1천9백 건, 8.9% 증가함.
 - ♦ 외국인 여자와 혼인은 1만6천6백 건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함.
 - ♦ 외국인 남자와 혼인은 6천1백 건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함.
 - 외국인의 국적
 - ♦ 외국인 아내 국적은 베트남(38.2%), 중국(22.1%), 태국(9.4%) 순
 - ♦ 외국인 남편 국적은 중국(24.4%), 미국(23.6%), 베트남(9.6%) 순
-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된 요인
 -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
 - ♦ 남녀 모두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만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여성의 경우는 고학력, 고소득층 여성을 중심으로 미혼율이 늘어나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저학력,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미혼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저학력, 저소득층 남성의 결혼난은 비자발적인 성격이 강함
 - ♦ 이들은 결혼을 희망하나 경제력, 학력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원을 소유함에 따라 결혼상대를 만나는데 매우 불리함
 - ♦ 한국남성이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현상은 1980년대 이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시작

- 되었는데,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이들의 결혼난이 가시화됨
- 국제결혼은 농촌지역 남성의 결혼난이 증폭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국제적인 인구 이동 및 교류의 확대를 통해 한국사회의 경제,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세계화가 심화됨
 -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은 물론, 국내외 유학생 증가,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함
 - 다양한 계기로 외국인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됨

(2)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형성

-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 사용
 - 다문화가족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힘
 - 동법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용어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국적법상의 각 규정에 따른 결혼이민자, 그 가족, 귀화허가를 받은 자 등을 말함
 -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 등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외국인끼리의 결혼으로 국내 거주하고 있는 가족, 새터민 가족 등을 포함함

<표 1> 다문화가족의 의미

다문화가족	의미
국제결혼가족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
외국인근로자 가족	외국인근로자끼리 한국에서 결혼한 가족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족
새터민가족	북한에서 이주해 온 가족

출처: 최선화 외(2012 : 468), 『여성복지론』. 공동체 재인용.

-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을 중심으로 그 현황 및 실태, 특성
 - 남성의 특성
 - 한국사회에서 저학력, 저소득층 남성의 결혼난이 심각함
 - 이들은 결혼을 희망하나 경제력, 학력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원을 소유함에 따라 결혼상대를 만나기 쉽지 않음

- ◆ 경제력을 비롯한 취약한 자원을 가진 남성들이 국내 여성과의 결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함
- 여성의 특성
 - ◆ 결혼이민을 선택하는 저개발 국가의 여성들은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 이주를 감행함
 - ◆ 이들은 남겨진 가족의 생계는 물론 교육비, 의료비, 주택마련 등의 미래를 위한 투자비를 송금해야 하는 입장임
 - ◆ 결혼이민 여성은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에 이미 많은 비용을 소비하였고, 결혼이민을 선택하기 전에는 가족 안에서 중요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임
 - ◆ 결혼이민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요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국내에 정착해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
- * 남성의 입장
 - ◆ 이주여성이 가정에서 가사 노동과 돌봄노동을 담당하길 원함
 - ◆ 여성이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외국인 아내 혹은 어머니’이며, 우리나라의 가족규범을 충실히 따르면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함
- * 여성의 입장
 - ◆ 기대보다 못한 형편의 남성과 결혼한 것을 인지하게 되고, 고국에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회적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야만 함
 - ◆ 경제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경을 넘는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이들의 정체성은 노동자와 딸, 아내, 어머니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
 - ◆ 이들은 새로운 사회로의 이주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며 이를 위한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취업을 모색함
 - ◆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가부장적 성역할 기대와, 본국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기대,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취업과 소득활동에 대한 욕구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음
- 오늘날 결혼이주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이룬 다문화가족이 당면한 문제의 핵심은 결혼이주여성의 복합적인 정체성과 기대, 그리고 이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규범 및 성역할 기대가 엇갈리면서 나타나는 갈등임
 - ◆ 이주여성은 취업을 원하지만 시집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소문 등으로 타인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함
 - ◆ 문화 및 언어 차이,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 간 갈등, 가정 폭력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적응에의 어려움과 곤란을 호소함

(3)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실태

- 한국에서 이주여성의 증가를 설명하는 세 가지 단계
 - 1990년대 초 중국과의 국교를 기점으로 조선족 여성들이 대거 유입된 시기
 - 특정 종교의 신도로 일본 및 필리핀, 태국 등의 이주여성이 많이 유입된 시기

- 2000년 이후 베트남을 중심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중국(한족) 여성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대거 입국한 시기
- 최근 들어 국제결혼 증가세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일정 수준 지속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국내 다문화가족도 일정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이중언어 등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어 우리 사회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성장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 사회적 소외 및 배제 경험, 차별, 정체성 혼란, 학교부적응 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이것들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타문화와 교류, 소통을 통해 다문화를 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편견과 차별로 대대왔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부적응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노출됨
- 우리 사회와 다문화가족의 최대 관심사가 자녀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학교교육은 매우 중요함
 -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학교를 통해 처음으로 사회에 진입하게 되므로 학령기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가족 간 불화는 한국사회의 부계중심적인 가족문화와 언어의 장벽, 세대 차이, 시부모와의 갈등 등에 기인함

2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의 실태

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

(1) 폭력: 가정폭력 - 상습적 구타

-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등

(2)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임
- 국제결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선업체나 특정 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결혼비용과 선물비 등 결혼의 부대비용을 한국 남성이 부담함
-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함
- 이주여성들이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라고 함

(3) 유기

- 아내구타보다 더 무서운 폭력은 한국인 남편이 아내를 유기하는 경우임

- 외국인 여성을 유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여성의 나라에서 결혼식을 하고 합방 절차까지 거친 남자가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를 초청하지 않은 경우임
- 이런 경우 해당 여성은 다시 결혼을 못하거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낙인이 찍혀 동네에서도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함
- 한국에서 살다가 같이 살기 싫다고 무단가출해 버리거나 외국으로 가버리든가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음
- 이런 경우 외국인 아내의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을 갖추기 어려워지는 등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짐

(4) 체류 등 신분상의 불안

-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 외국인 신분이므로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런 경우 남편이 일방적으로 체류에 대한 신원보증을 해지할 수 있는 점을 빌미로,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피신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억압할 수 있으며, 이혼에 의한 강제 귀화신청시 전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음

■ 학습정리

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과 특성 및 현황

1) 여성 이주의 특징

- 노동 이주의 경우 돌봄·서비스 노동 중심의 이주가 대부분임
- 여성 이주자들은 착취, 폭력, 학대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주의 주요 방식은 남성에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결혼이주 방식으로 이루어짐

2)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 국제결혼 증가: 2014년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자녀 등을 합한 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약 156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됨
-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된 요인
 -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
 - 저학력, 저소득층 남성의 결혼난은 비자발적인 성격이 강함
 - 국제적인 인구 이동 및 교류의 확대를 통해 한국사회의 경제,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세계화가 심화됨

3)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형성

-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 사용
-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특성과 입장은 상이하게 다름

2.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의 실태

- 1) 폭력: 가정폭력 - 상습적 구타
- 2)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 3) 유기
- 4) 체류 등 신분상의 불안

11주차 2강

이주여성과 사회복지실천 II

학습 목표

-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과 사회복지실천 서비스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북한이탈여성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
2. 북한이탈여성의 개념과 특성

1)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

(1) 결혼이주여성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체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2) 결혼이주여성 정책 배경

- 1990년대 후반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됨
- 2003년 참여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소수자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가속화 되었음
- 2005년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억압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정적 체류 지원과 기초생활 보장, 취업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을 입안함
- 2006년에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 및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을 확정함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차별방지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결혼이주여성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그 성격이 바뀜
-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의 개편과 가족정책 차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기기 시작하는 과정과 겹치면서 한국 결혼이주여성 정책의 정체성이 인권정책에서 인구와 가족정책으로 바뀌었음
- 도시빈민이나 농촌 남성의 결혼문제와 저출산 및 가족 내 돌봄 부재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음

(3) 결혼이주여성 정책의 한계

- 개별주체로서의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증진과 차별문제가 다문화가족 안의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함으로써 소수자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문제는 사라지고 가족의 유지라는 차원만 부각됨
- 정부의 지원이 짧은 기간 내에 폭증하자 새로운 사업주체가 추가로 합류하여 사업의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부처 간의 우위경쟁과 갈등이 나타남
- 많은 단체가 앞 다투어 예산을 유치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과잉, 중복 지원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온정적 시혜의 대상으로 고착시키고 다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정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기도 함
- 정부에서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국제결혼을 후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여성과 자녀의 사회통합에 접근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거나 공존을 모색하는 쌍방향적 다문화주의의 사

업은 미흡한 상태임

- 문화적 고유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다수 문화에의 통합 위주로 진행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속에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접근을 찾기 어려움
-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을 다문화가족이라는 틀로 표준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결혼이주여성이 갖는 문화적 정체성이나 차이성이 ‘가족’이라는 보편적 질서로 흡수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음
 - 남편이나 시부모 등이 결혼이주여성을 자신들의 가치로 동질화함
 - 현재 한국 언론매체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동화의 대상으로 재현하고 있음
 - 문화적 동화를 전제로한 정책적 지원대상으로 재현되고, 타자화, 정형화되고 있음
 - 이들은 한국문화에 빨리 동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임
 - 문화수용자인 다수자들이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을 동화의 대상으로 사물화시키는 데 익숙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
- ⑧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다수자가 소수자인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방적인 동화주의를 이면에 깔고 있고 다문화 지향성이 결여되어 있음

(4) 결혼이주여성 정책 관점의 한계

-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관점은 배제적 동화주의 정책임
- 결혼이주여성들 중 소위 엘리트층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감도 크고 정책의 바깥에 머물게 하는 배제정책을 쓰고 있음
- 한국이 아직 다문화의 진입단계라는 점에서 동화주의 정책은 어쩌면 당연지만 필요에 따라 배제하고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적 동화주의’가 요구됨
- 외국과 달리 가족단위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낯선 곳에 이주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인권이나 복지적 측면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한국문화에 빨리 익숙해지도록 포용하고 도와주어야 함

(5) 결혼이주여성 정책 관점의 방향

- 향후 이 단계를 넘어서 결혼이주여성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하나의 개별적 주체로 인정하고 개별성과 문화적 차이성을 존중하는 ‘상호문화정책’으로 나아가야 함
- 이주여성의 존재감이 커지고 그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거주국에 당당히 요구하는 단계가 되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대등한 상호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지역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이 수가 많고 집거지가 형성된 곳에서는 상호문화정책을 앞당겨야 함

2) 결혼이주여성 관련 서비스

(1) 결혼이주여성 관련 서비스

- 초기에 여성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들이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된 결혼이주여성에게 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정착에 따른 문제가

증가하면서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됨

- (2)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임
- (3)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있고, 전담일선기구로서는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4) 국제결혼중개업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고, 베트남과 필리핀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여 입국 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5) 다양했던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수렴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이민단계를 입국 전 결혼준비기,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임파워먼트기의 4단계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결혼이주여성과 사회복지실천

(1) 역량강화적(임파워먼트) 접근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실천은 이들을 정책의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주체적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고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적 존재로 파악하는 데서 시작함
- 결혼이주여성과 일할 때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현실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한국에서의 적응과정, 본국과 다른 한국의 가족구조, 젠더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
 -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타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한 이주여성의 삶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과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보아야 함
 -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애경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클라이언트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나 문제가 본인의 결함이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국제이주자로서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자기비난을 줄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수 있게 됨
- 사회복지사는 이들을 단순한 원조의 대상으로가 아닌 도전의식과 주체적 결단능력을 가진 능동적 존재로 인정하고, 이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자세로 다가가야 함
- 집단적 접근 필요
 - *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는 개인적 수준에서만뿐만 아니라 집단수준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 집단 내 인간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한국 사회의 적응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집단 활동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임
 - ◆ 집단의식의 개발을 통해 각종 인권침해가 어떻게 개인과 집단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함
 - ◆ 집단적 노력을 통해 사회적 차별구조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됨
 - ◆ 국내에는 이미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별로 자조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국제결혼가족 자조모임도 형성됨
 - ◆ 소집단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대인관계 발달을 기초로 취업이나 자녀교육, 지역사회

참여 등의 권리 확보에서도 집단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거시적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역량강화적 사회복지실천은 결혼이주여성을 자기 삶을 개척하는 주체로 확립하는 개인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 다문화주의 발전을 이끌어 낼 주체로 발전하도록함
- 궁극적으로 이들의 존재와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양성이 강화되고 문화적 관용성과 개방성이 증가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음

(2) 사회복지실천가의 다문화역량

- 역량강화에 기반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실천가의 다문화 역량이 중요함
- 다문화 역량이란 집단 내, 또는 집단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높이는 학문적, 대인적 기술을 의미함
- 사회복지실천가는 개인의 삶과 자신의 실천 활동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방성을 견지해야 함
-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화적 요소를 개입의 중요 포인트로 파악하여 실천에 임해야 함
- 결혼이주여성들과 가족이 겪는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인물들과의 관계, 지역사회의 제도 및 사회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입의 수준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와 전체 문화를 포괄하며, 모든 차원의 개입에서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사의 다문화 역량이 발휘되어야 함

(3) 남성배우자에 대한 교육서비스

- 현재 결혼이민여성 관련 서비스는 대부분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호 이해와 존중은 쌍방 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성배우자들의 적응과 교육 참여가 필수적임
- 결혼이주여성들의 배우자에 대한 상대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이 결혼 전에 선행되어야 하며 부부가 함께 하는 상호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함
- 친밀하고 상호 수용적인 가족관계, 남편의 아내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노력 정도, 남편과의 여가시간 공유 여부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임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 사회적 지원이나 개인의 적응력보다 결혼이주여성들과 출신국 문화에 대한 배우자 및 가족의 수용과 이해, 협조적 태도가 중요함
-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 향상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함

2

북한이탈여성의 개념과 특성

1) 북한이탈여성의 개념(강병의, 2016)

- 2017년 기준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3만명(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은 2000년 이전에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하여 인접국인 중국이나 제3국을 경유하여 다시 한국으로 입국
- 2000년 이후부터는 여성과 가족단위의 탈북이 많아지고 체제불만, 자유를 갈망하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탈북 증가

2) 북한이탈여성의 탈북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이유는 비인간적이고 독재적인 북한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와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에 따른 사상적 동기가 주를 이루었음

3) 북한이탈여성의 특성

- (1) 북한사회에서 여성은 가사와 생계의 책임에 대한 이중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요구받으며 동시에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경제 활동에도 참여해옴
 - 북한의 남성은 매일 작업장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비교적 여성의 이동이 자유로워 장기간 이동하는데 유리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임
- (2) 북한이탈여성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서불안 등의 고통을 받고 있음
 -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 조직이 개입되면서 중국의 농촌 총각들과의 매매혼 형태로 이루어 지던 북한 여성의 탈북 통로가 매춘이나 인신매매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
 - 중국의 계속된 단속 강화와 북송될 경우에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 등의 강도 높은 처벌로 인해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감
 -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은둔생활과 도피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됨
- (3)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으로의 입국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어 남한으로의 입국을 선택하게 됨
 - 남한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신변 노출 등의 위험성이 크더라도 그동안 자신이 확보한 자원으로 입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태도를 보임

4)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지원 방안(신정은, 2015)

- (1) 북한이탈여성의 건강 개선 방안
 - 신체 및 심리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면 취업과 사회적응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의 불안 및 충격으로 인해 건강이 피해해진 상태로 한국에 입국하므로 초기 정착과정에서부터 주기적인 건강 상담과 치료를 해야 함
 -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한 후에도 그 지역의 하나센터가 주체가 되어서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상담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2) 북한이탈여성과 한국사회의 문화적 차이 극복 방안

-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서로 간의 상호교육, 상호교류, 공동 활동들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확인
-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사회 관련 교육을 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우리와 한민족임을 체계적으로 교육
- 북한이탈여성들과 일반여성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멘토-멘티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3)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상황 개선 방안

- 북한이탈여성들은 각 개인의 환경요건이 다양하므로 각자의 학력, 탈북과정, 개인의 욕구, 연령별 등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
- 이론 교육 중심보다는 사회에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함
- 북한이탈여성들이 대학편입학 시 취업할 수 있는 기술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자신들의 전문적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여성들의 직장 생활 경험부족 등의 문제를 미리 경험하기 위해 인턴 채용의 기회 제공

(4) 북한이탈여성 문제해결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인식제고

-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하여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과 행정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을 두어 법안을 검토, 개선해 나가야함
- 국가는 성인지적 관점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해 나가야 함

■ 학습정리

1.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

1) 결혼이주여성 정책과 서비스(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비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 목표: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함,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를 구현함
- 세부정책 과제: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 정비

2) 결혼이주여성과 사회복지실천

- 역량강화적(임파워먼트) 접근
- 사회복지실천가의 다문화 역량강화
- 남성배우자에 대한 교육서비스

2. 북한이탈여성의 개념과 특성

1) 북한이탈여성의 특성

- 북한사회에서 여성은 가사와 생계의 책임에 대한 이중고를 겪음
- 북한이탈여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서불안 등의 고통을 받고 있음
-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으로의 입국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2)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지원 방안

- 북한이탈여성의 건강 개선
- 북한이탈여성과 한국사회의 문화적 차이 극복
-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상황 개선
- 북한이탈여성 문제해결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인식제고

12주차 1강

여성과 가정폭력

학습 목표

-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가정폭력을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의 현황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1)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1)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즉,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 가정구성원은 배우자, 전 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가정폭력은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함
 -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은 구별됨. 부부싸움은 결혼생활 동안 발생하는 말다툼이나 의견충돌 등의 갈등상황, 구성원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인 가정폭력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2) 가정폭력의 유형

- 신체적 폭력 :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자유구속 등
- 정서적 폭력 :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천정, 시댁 비난, 심각한 욕설, 인간관계 통제, 간섭과 의심, 기물파손이나 동물학대 등의 간접적인 폭력 등
- 성적 폭력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부부강간 등,
- 경제적 폭력 : 경제활동 통제, 경제적인 방임, 생활비를 주지 않음 등
- 기타 상대방의 의견이나 결정권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이나 결정을 강요하는 행위도 폭력의 유형에 해당됨
- 이주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방임, 유기, 낙태 강요,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고 주지 않음 등의 행위도 폭력에 해당됨

(3) 가정폭력의 종류(대상) 및 실태(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 2016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가정폭력이 5배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폭력의 70%가 아내를 대상으로 한 남편의 폭력이었음.
 - 지난 2012년 8762건이던 전국 가정폭력 사건 검거건수는 2016년 4만5614건으로 5.2배 늘었음
- 2016년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 4만5453명 중 74.4%인 3만3818명이 여성이었음.
(2015년부터 피해자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 가정폭력 예방대책이 시급함.
- 가족원 폭력률 (만 65세 미만 응답자)
 - 만 65세 미만 응답자를 대상으로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원(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친척 등)으로부터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을 조사함.

- 만 65세 미만 응답자가 지난 1년간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피해율은 3.7%였고, 응답자가 가족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율은 3.6%였음
- 폭력유형별 피해율은 신체적 폭력 1.1%, 정서적 폭력 3.2%, 경제적 폭력 0.6%였음.
- 가족원에 의한 노인학대 피해율(만 65세 이상 응답자)
 - 만 65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원(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으로부터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및 방임 피해 경험을 조사함. 학대 피해율은 유형별 학대행위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임
 - 지난 1년간 가족으로부터 노인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7.3%였으며, 학대유형별 피해율은 신체적 학대 0.4%, 정서적 학대 6.5%, 경제적 학대 1.5%, 방임 1.4%임
 - 주 가해자인 가족원은 아들·딸인 경우가 6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위·며느리 20.2%, 손자·손녀 7.0% 순이었음.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은 28.6%였음
 -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족원의 학대 이유는 ‘해당 가족원의 나에 대한 부양부담으로’(36.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해당 가족원의 스트레스로’(29.4%), ‘이유를 모름’(15.6%), ‘해당가족원이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10.4%) 순이었음
 - 학대 발생 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족이라서’(61.1%)가 가장 많았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23.3%),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15.6%) 순이었음

2) 가정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특성

- 가족 내의 폭력으로 사회적 묵인의 대상으로 은폐되는 특성
- 지속적, 반복적인 특성
- 배우자, 자녀, 부모 폭력 등의 중복되는 특성
- 세대 간 전이되는 순환적 특성
-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무의식적 인권침해로 반복적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등 주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되며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음
- 가정폭력 평균 지속기간은 11년 2개월이며 피해자의 48.2%가 10년 이상 경험하는 등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정도도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특성
- 가정폭력의 대상은 다양해지고 있으며(부부폭력 →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폭력), 유형 또한 확대(신체폭력 → 정서, 경제 폭력)되는 추세임

(2)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

- 자존감 저하 및 희생자화
 -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하면서도 타인이나 다른 상황에서는 과도하게 흥분하고 화를 내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함
 - 폭력사실을 숨기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경향을 보임
 -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망각, 생각의 차단, 무기력감, 감정의 둔화, 가해자의 판단에 대한 수용 등 ‘희생자화’됨

- 공포의 재경험
 -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나타나는 폭력공포의 재경험 증상보임
 - 가해자가 귀가할 시간이나 가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대상을 접할 때마다 공포감을 느끼며 매사에 경계하고 조심하는 행동을 보임
- 독립심 결여
 -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들을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데에 두려움을 느낌
 -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정신적으로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새로운 변화에 대해 큰 위험을 느낌
 - 피해자의 독립심 결여는 자신의 자원 결핍을 자각하게 하고, 폭력적인 가정을 떠날 수 없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됨
- 우울증
 - 가정폭력 피해자는 우울증을 갖는 경우가 잦고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특성

- 부모의 폭력행동 모방, 충동자제력 부족, 자해행동, 위축행동, 공격성, 과잉행동, 비행, 문제 해결능력 부족, 성적 부진, 잦은 결석, 두려움, 우울, 불안, 주의력 결핍 등

(3)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

- 분노조절의 어려움
 - 분노조절의 어려움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조그마한 자극에도 발끈하거나 크게 화를 낼 수 있음
 - 가해자를 전화상담이나 면접상담에서 대할 때 이러한 특성을 잘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분노를 표현할 때도 맞대응하기보다는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여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높은 통제욕구
 - 통제욕구란 상황과 사람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임
 - 아내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물리적 폭력을 쓰는 경우가 많음
 - 자기의 힘으로 상대의 힘을 굴복시키려는 마음이 큼
 - 통제욕구가 사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제한당하고 억눌리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할 경우에는 힘으로 맞서는 것을 피해야 함
 -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할 경우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닌 힘의 욕구, 통제의 욕구를 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부드럽게 응대하는 것이 효과적임
- 불행한 성장과정
 -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장사는 대개의 경우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 성장하고 결혼을 한 후에도 친밀한 관계인 아내와 어떻게 대화하고 갈등 발생 시 풀어나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성장과정의 불행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잘못이 아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인이 된 결과, 마치 가해자의 잘못처럼 가까운 자기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됨
- 관계기술의 미숙
 - 가정폭력 가해자는 대인관계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임
 -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해야 하는지, 나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지 아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음
 - 가까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지도 못하고, 한 번 떨어진 관계를 가깝게 만들지 못함
 - 갈등은 종종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함
 - 관계기술의 미숙은 기술의 습득을 통해 교정되는 성질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근본적인 원인은 부적절한 대인관계가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단기간의 기술습득이 있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됨
 - 보다 꾸준한 상담 및 교육이 있어야 가해자가 관계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음

(4)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

- 부정적 자아개념
 - 가정폭력 피해자는 오랜 가정폭력의 피해 후유증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음
- 가해자의 변화에 대한 믿음
 -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간이 흐르면 가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
- 자녀문제
 - 가정폭력 피해자는 사회에서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대접받지 못하고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경제적 문제
 -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자립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음
- 이혼여성에 대한 스티그마
 - 한국사회는 이혼한 여성에 대한 낙인화가 강함

(5)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반복적인 폭력과 불안감으로 자녀들의 감정 조절기능과 충동조절능력에 손상을 입음
- 불안한 아동들은 자학적인 자기파괴행동과 정서적 불안정감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기 쉬움
-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자녀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가정을 꾸린 뒤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향이 있음

(6) 가정폭력의 파급력

- 가정폭력은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결됨
 - 자살, 살인, 노인학대, 부모폭력, 아동학대
- 또 다른 폭력의 시작
 -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정분위기 영향(자은 언어폭력 노출, 부모간 폭력 목격)

3) 한국의 가정폭력 특성

(1) 가부장제와 성별분업

- 사회에서 성을 이유로 상이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성차별, 성불평등),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순한 생물학적, 성적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작용하는 것임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구조적’ 원리가 가부장제와 성별분업임

(2)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규정과 가정폭력

-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사회적 규정은 한국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의 폭력을 남성다운 행위로 간주하고 미화하는 태도임
- 여성과 남성에게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차이나게 하고, 이는 사회 전반의 남성우월주의와 결합하여 여성을 남성폭력의 피해자로 만들
- 여성에게 가정의 화목과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은 여성이 가족 간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도록 만들고 또한 가정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갈등상황에서도 쉽게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도록 함
 - ‘남자는 때릴 수 있고 여자는 고분고분해야 한다’는 전제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폭력의 피해자로 하여금 폭력 피해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함

(3)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공사구분 논리와 가정폭력

- 가부장적 사고에 기반한 통념들(“남편은 우월하고 아내는 열등하다”, “아내는 무시해도 괜찮다”, “가장으로서의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때려서라도 가르칠 수 있고 가르쳐야 한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폭력을 용납할 뿐 아니라 정당화함
- 여타의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사회보장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가장이 처벌받을 경우 당장 생계문제가 제기됨
- 남편이 가정폭력사범으로 접수된다 해도 아내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발생함
- 가정을 사회와 유리된 개별단위로 보면서 가정 폭력 사안에 대해서만 사회가 개입하려는 태도는 사회 전반의 남성우월주의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사회, 경제, 문화구조를 외면한 채 개인의 폭력사건만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므로 한계가 있음

(4)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의 일종으로 보는 경향

-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으로 보려는 현상은 가정폭력을 철저하게 사적인 영역으로 보려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임
- 가정폭력은 단순히 ‘부부싸움’이 아니라 ‘부부’라는 이름만으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1)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 (1) 상담지원으로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가정폭력상담소의 전화와 면접상담, 이주여성은 자국어로 1577-1366에서 지원하고 있음
- (2)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함
- (3)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 진료지원을 하고 있음
- (4)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법률 구조 신청이 가능함
- (5) 가정폭력 피해자 중 쉼터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상담 후 입소 가능
 - 10세 이상 아동을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6)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함

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1)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음
- 현황
 - 2016년 1366(여성긴급전화) 상담 건수는 26만7천건으로 전년(27만4천건)에 비해 약 7천건 감소함
 - 1366(여성긴급전화)을 통한 여성 상담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이 전체 상담 건수의 61.8%로 가장 많음
 - 약 10년 전과 비교하면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은 급증하고, 가족문제, 부부갈등, 이혼 등의 상담은 감소하는 추세임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자국어로 1차 긴급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상담 후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개입하고 있음

(2) 가정폭력상담소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하여 피해자의 보호 및 법률지원 서비스 등 관련 기관으로 연계함
- 지역사회 홍보 및 가정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및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보호시설에서 가정의 폭력과 방치, 학대 등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여 의식주 해결은 물론 의료지원, 취업준비, 교육, 문화활동, 상담을 통하여 심신을 안정시켜 가정, 사회로의 복귀나 자립을 도와줌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학 등의 조치를 하여 아동의 취학을 지원함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입소사실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음

■ 학습정리

1.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

1) 가정폭력 개념 및 유형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2조 제2항).
- 가정폭력의 유형
 -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폭력, 경제적 폭력, 본인의 의견이나 결정을 강요하는 행위,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

2) 가정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

- 가정폭력의 특성
 - 가족 내의 폭력으로 사회적 목인의 대상으로 은폐되는 특성, 지속적, 반복적인 특성, 배우자, 자녀, 부모 폭력 등의 중복되는 특성, 세대 간 전이되는 순환적 특성,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무의식적 인권침해로 반복적, 학교폭력등 주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되며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음
- 피해자의 특성
 - 자존감 저하 및 희생자화, 공포의 재경험, 독립심 결여, 우울증
- 가해자의 특성
 - 분노조절의 어려움, 높은 통제욕구, 불행한 성장과정, 관계기술의 미숙

-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반복적인 폭력과 불안감으로 자녀들의 감정 조절기능과 충동조절능력에 손상을 입음
 - 불안한 아동들은 자학적인 자기파괴행동과 정서적 불안정감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기 쉬움
 -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자녀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가정을 꾸린 뒤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향이 있음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 1) 여성긴급전화 1366(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 2) 가정폭력상담소
-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2주차 2강

여성과 성폭력 · 성매매

학습 목표

- 성폭력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 성매매의 정의 및 방지 정책에 대해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및 현황
2. 성매매의 정의 및 방지정책

1) 성폭력의 개념과 발생원인

(1)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
 - 넓은 의미로는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희롱과 강간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의미함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위법한 행위임
- 성추행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행위로 간음 이외의 성적 가해행위이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함
 -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서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2) 발생원인

- 성에 대한 고정관념
- 성폭력 가해자는 친밀감의 표현이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으로 느끼는 성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
- 성폭력 가해자는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으며 불평등한 권력관계, 힘의 차이
- 성폭력 발생원인을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찾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구체화하고 있는 성차별적 성별 이중규범과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임
-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성폭력을 이용함

(3) 잘못된 통념으로 알아보는 성폭력의 특성

- 성폭력은 계획적이라기 보다 우발적인 것이다? No
- 아동들은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다? No
- 아동을 귀엽다고 어루만지는 것, 성기를 노출하는 것은 실질적 성폭력이 아니다? No
- 아동성폭력의 경우 어릴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덮어두면 기억이 사라질 수 있으며 안전하다? No
- 여자가 저항을 약하게 했다면 성폭력 당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No
- 적극적으로 저항하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No
- 야한 옷차림을 즐겨 입는 여자는 성적으로 문란한 경향이 있다? 성폭력의 책임은 피해자에

제도 있다? No

- 성폭력이 행해질 때 신체적 고통이 없거나 쾌감을 느낀다면 성폭력이 아니다? No
- 동성 간에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다? No
- 강간은 심각하지만 성추행은 가벼운 것이다? No

2) 성폭력범죄의 특징 및 실태

- (1) 2016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여성은 50.9%가 불안하다 느끼며, 남성(40.1%)보다 10.8%p 높음
- (2) 2016년 절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형법범 주요 범죄 중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17배 많으며, 다른 범죄는 남성이 많음
- (3) 여성 피해자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강도」는 2006년 2,512건에서 2016년 1/5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성폭력」과 「폭행」은 2배 이상 증가함
- (4) 2017년 1366(여성긴급전화)을 이용한 상담 건수는 총 28만9천건, 상담 내용은 「가정폭력」이 가장 많으며, 전년보다 「성폭력(29.9%)」, 「성매매(28.6%)」, 「중독(9.4%)」, 「가정폭력(9.3%)」 순으로 많이 증가함
- (5) 성폭력범죄의 특징으로는 높은 재범률, 청소년 가해자 증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남성피해자 증가, 피해사실 은폐 등이 있음

3) 성폭력의 유형(대상에 따른 성폭력)

- (1) 친족성폭력은 친족관계라는 일상적 친밀감과 신뢰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 (2) 어린이 대상으로 성폭력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하는 행위
- (3) 동성 간 성폭력은 동성 간에(여성 간/남성 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4) 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19세 도달 1월 1일 이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을 하는 행위
- (5) 데이트성폭력은 성적인 친밀감이 있으면서 데이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강간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행동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 폭력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 (6) 성인성폭력은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는 행위
- (7) 학내 성폭력은 학교를 둘러싼 인간관계, 특히 권력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교수와 교사에 의해 학생에게 행해지는 성폭력, 선후배 혹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8) 장애인성폭력은 신체상, 정신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는 행위
- (9) 직장 내 성폭력은 직장 내에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이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

위

(10) 부부 성폭력은 남편이 아내를 폭력, 협박 등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 하는 행위

(11) 스토킹은 괴로움과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행해지는 반복적이고 잦은 침범적 행위

(12)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적 침해행위.

4)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

-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신설, 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됨

5)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1) 의료지원

- 성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은 여성·학교폭력피해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전국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치료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의료비 지원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2년 10월 25일부터 지원대상 및 1인당 지원 한도액을 폐지하였고 피해자 가족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

(2) 법률지원

- 성폭력 피해여성 및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 등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지원함
- 기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법원의 증인지원시설 설치 및 증인지원관계도가 도입됨

2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1) 성매매의 정의와 인식

(1) 성매매의 정의

- 성매매란 인간의 신체와 감정을 금전을 매개로 하여 사고 파는 행위, 성적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서비스를 받은 거래의 통칭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한 성교 및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임
- 성매매에 대해서는 성적 욕망의 개인적 해방구, 성매매 여성의 자발적 행위, 필요악, 성매매

시장구조에 대한 무지로서 성매매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문제임

(2) 성매매에 대한 인식

- 성매매에 관한 가장 오래된 통념
 -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 성매매는 ‘직업’이 아니라 ‘억압’이며, 엄밀히 말하면 ‘농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임
 - 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이다 :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면 ‘누구의 필요에 의해 누가 피해가 입는가’가 전제되어야 함.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위해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차별과 여성폭력을 인정하는 것임.
- 성매매와 남성 성욕 간의 그릇된 연관성
 -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다 : 실제 성매매와 성폭력 발생률은 정비례함
 - 남성의 성적 욕구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 섹스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은 남성은 지금까지 없음.
 - 장애인성과 같은 소외계층의 남성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 소외계층의 ‘인권’을 이용하여 또 다른 인권유린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뿐임
- 성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
 -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섹스)를 즐긴다 : 성구매자가 자신의 성매매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임.
 -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많이 번다 : 돈을 벌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여가는 빚에 눌러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이들을 몰아가게 됨
 -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이 남성(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 성매매 여성은 폭력과 학대, 비인간적 처우에 매일매일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임.
 - 성매매를 선택한 것은 여성이다 : 실질적으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미성년자부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임.
 - 좀 더 안전한 성매매가 가능하다 : 콘돔 사용을 늘리고 성전염성 질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고 해서 성매매가 안전해지지 않음.
- 성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 무력화하기
 - 성매매를 금지하면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더 확산될 것이다 : 성산업이 음성화되는 것은 금지시켜서가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함임.
 -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 여성 역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구매자들의 위협과 폭력을 막을 수 있다 : 공창제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에게 안전함을 보장하거나 성구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음
 - 성매매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시행한 말모 프로젝트(1977~1983년)의 결과를 보면, 마약중독으로 재활이 불가능한 60여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탈성매매에 성공함

2) 성매매의 문제점과 관련 법률

(1) 문제점

- 성문화의 왜곡
 - 성매매가 사라지면 성폭력이 사라진다고? 성매매와 성폭력은 비례적 관계이다. “여성에 대한 성적 행위가 남성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성문화임
- 범죄피해 노출
 - 성매매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착취(불어나는 빚)뿐만 아니라 사기 및 협박, 폭력, 성폭력 등 술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 마약범죄조직과의 연계, 인신매매 동반, 국내 성매매 음지화, 해외 성매매는 인신매매 발생과 인신매매 피해자를 양산함
-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 인간존엄성 상실, 성적 대상화 만연, 상대방 존중감 상실이고, 사회적 문제로 비합리적 경제구조, 범죄와의 상호 공존임

3) 성매매 관련 법률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새로운 개념 도입 및 정의
 - ‘윤락행위’의 개념을 폐기하고 ‘성매매’ 개념 도입,
 -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양태를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위해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개념의 도입, 성을 파는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영상물 등의 촬영을 목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대상자를 인계받는 경우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 있음
- ‘성매매 피해자’ 개념 도입과 형사처벌의 특례
 - 위계, 위력,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형법상의 심신미약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의 성매매 여성만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인신매매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무효화하는 조항만 포함하고 채권승계 등은 삭제함
 - 채권무효에 대해서는 채권이 사유재산 소유에 대한 민법상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성매매 관련 채무를 과도하게 무효화할 경우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필요시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선의취득제도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규정하고 있음
- 심리의 비공개 근거 마련

- 성매매 사건 관련 자수자, 신고자, 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의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함
-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 성매매 사건 관련 수사 중에 있는 외국인 여성(신고, 고소, 고발한 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매매 관련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제도 도입
 -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성매매자에 대해 보호사건의 처리 우선
 - 성매매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토록 하고 있음
-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 벌칙의 형량을 조절하여 타법과 형평성 유지
 - 성매매 강요에 대해 유형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성매매 알선营业을 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조절(현행 5년 이상),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신설, 단순 성매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함
- 범죄단체의 가중 처벌
 - 성매매 및 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함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
 - 청소년 성매매에 관해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도록 함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규정
-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시 수사기관의 협조절차 규정

4) 해외 성매매 방지 정책 및 한국정책 방향(성매매합법화와 금지주의)

(1) 성매매 합법화

-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는 독일, 호주, 노르웨이로 2001년 독일은 성매매를 합법화함

- 성매매 여성의 노동3권 및 생존권 보장, 여성노동자로 인정, 사회보험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성매매 합법화에 따른 사회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2) 성매매 금지주의

- 스웨덴은 1999년 구매수단과 상관없이 모든 성적 서비스 구매행위는 처벌 대상 성매매금지법을 제정함

(3) 한국의 성매매 정책방향

- 존엄성 있는 인간에 대해 금품을 매개로 성행위 허용은 불가하고 있으며, 이는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인식하고, 남녀 상호존중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
- 성매매 알선업무 처벌조항 세분화와 피해여성인권을 철저히 보호하여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음

■ 학습정리

1. 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및 현황

1) 성폭력의 개념

- 넓은 의미로는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희롱과 강간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의미함

2) 성폭력의 발생원인

- 성에 대한 고정관념, 성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 불평등한 권력관계, 성차별적 성별 이중규범과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밀접한 관련,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성폭력을 이용함

3)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 의료지원, 법률지원

2. 성매매의 정의 및 방지정책

1) 성매매의 정의

- 성매매란 인간의 신체와 감정을 금전을 매개로 하여 사고 파는 행위, 성적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서비스를 받은 거래의 통칭

2) 성매매의 문제점

- 성문화의 왜곡, 범죄피해 노출

3) 성매매 관련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주차 1강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학습 목표

- 여성노인의 실태와 삶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여성노인의 실태와 삶
2. 여성노인과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1) 노인의 개념 및 특성

(1) 노인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국가별, 시대별, 정치·사회적, 문화적 상황 및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차이가 있음

(2) 1951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던 제2회 국제노년학회(IAGG)에서의 노인 개념

-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함

(3) 노인의 특성

-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신체조직에 결손이 있는 사람
-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소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 인체의 기관의 조직기능에 노화현상이 일어난 시기에 있는 사람
- 생활에 있어서 적응성이 적극적으로 결손되어 가는 사람
- 조직 및 기능의 소모로 적응,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

(4)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

- 노인복지법
 -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함
- 매년 발행되는 통계청의 고령자통계
 - 65세 이상 대상자를 고령자로 정의함
- 국민연금법
 - 정상 연금 수혜 연령을 60세로 규정함
- 고령자고용촉진법
 -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함
- 우리나라 생물학적, 사회학적 통념에 의하여 만 60세를 환갑년(環甲年)으로 하는 전통이 있어 이때부터 노령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대한노인회나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가입연령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음

(5) 여성노인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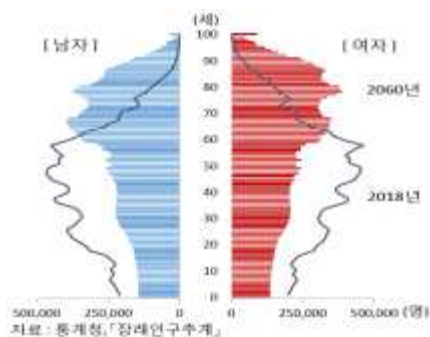
- 중년기의 생리학적, 심리학적 문제의 특유한 항목으로서 폐경기가 있음
- 시모나 조모의 지위를 얻음에 따라 노성 자각이 시작됨
- 가정살림의 주도권을 양도함에 따라 노성 자각이 촉진됨
- 탈부부기의 감정의 변화가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한층 더 큼

2) 여성노인의 실태와 삶

(1) 여성노인의 일반적 현황

- 총인구 대비 ‘노령의 여성화(feminization of old age)’ 현상이 두드러짐
- 고령과 더불어 여성노인의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양상은 현대사회의 노인문제가 주로 여성노인의 문제가 될 것을 시사함
- 2018년 고령자통계(통계청)
 - 2018년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3%를 차지함
 - 65세 이상 고령자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는 증가 추세임
: 61.8명('00) → 68.2명('10) → 74.6명('18) → 85.5명('40) → 91.3명('60)
 - 2018년 노년부양비*는 19.6명에서 저출산 · 고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에는 82.6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 노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 노령화지수*는 2016년 100.1명으로 0~14세 인구를 넘어서, 2018년 110.5명으로 나타남
- * 노령화지수 : 유소년인구(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그림1] 인구 피라미드



[그림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 UN은 한 나라의 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미국은 1942년에,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사회가 됨).
 - 고령사회 진입에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일본 2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됨
-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일본보다 짧은 기간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제기됨
 -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데 24년이 걸렸음.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짐
 - 저출산 및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노년부양비는 1975년 정점 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5년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짐

-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생산인구의 비율을 저하시키는 한편, 노령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노년부양비 및 의료비 등 노인의 욕구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사회의 노인부양부담을 가중시킴

(2) 가족관계

- 가구형태 변화의 추이분석 결과
 -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8년 우리나라 가구의 30.7%는 여성가구주이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여성 가구주 비율(%) : 18.5('00) → 26.1('10) → 30.7('18) → 34.8('30)

(3) 소득과 경제활동

- 노인의 경제수준(2018년 고령자 통계)
 -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 일반수급자 149만2천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43만1천명으로 28.9%를 차지함
 - 성별로 보면, 남자 수급자(14만5천명)보다 여자 수급자(28만5천명)가 약 2배 많으며, 남녀 모두 전년보다 각각 8,086명, 1,732명 증가함
 - 뚜렷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나타냄
- 노년빈곤 원인에 대한 관점
 - 가. 노년기의 특정한 사건의 결과로 보는 관점
 - ♦ 소득활동 중단이나 사별, 중증질환 발병과 같은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여성 노인이 빈곤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
 - 나. 노년기 이전 생활의 연속으로 보는 관점
 - ♦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일생을 통해 겪어 온 노동경험의 부족 문제, 낮은 임금, 낮은 연금 각출료로 인한 불리함, 노후의 소득활동 중단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노년기에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주장

(4) 건강

- 기대여명과 건강관리(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
 -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취약한 상태(2017. 3. 13 한의신문).
 - 2016년 기준 기대수명과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6.1년, 0.5년 더 긴 반면,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은 남성이 0.4년 더 김
 - 2016년 1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 중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폐혈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2016년 여성의 현재 흡연율은 6.1%, 고위험 음주율은 5.4%로 전년보다 증가함
 - ♦ 여성의 현재 흡연율(%) : 5.3('15) → 6.1('16)
 - ♦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 : 5.1('15) → 5.4('16)
 -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남성이 높고,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은 여성이 높음
-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건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이유

- 출산과 양육의 주 담당자라는 생태적 특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했던 환경적 특성
- 젠더 패러독스 패턴
 -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소득, 교육수준, 직장 직종, 무배우 상태 및 독거 거주형태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있어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속해왔기 때문에 여성노인의 이 같은 불리한 경험차이로 여성노인들이 더 건강하지 못하다는 기존의 젠더 패러독스 패턴을 보임

(5) 주거환경

- 2018년 여성 1인 가구는 284만3천 가구로 꾸준히 증가 추세임
- 2018년 1인 가구 비중은 여성은 「70세 이상」, 남성은 「30대」가 가장 높음
 - 2018년 여성 1인 가구는 70세 이상이 29.3%로 가장 높고, 다음은 20대(16.0%), 60대(15.9%) 순으로 많음
 - 여성은 60세 이상이 1인 가구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남성 1인 가구는 20대~5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 2018년 이후 여성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구성비는 60대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70세 이상은 증가하여 2035년에는 70세 이상 비중이 47.9%로 가장 많고, 30대와 50대는 9% 수준, 40대는 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여성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여성노인이 홀로 생활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발생함.
 - 우리나라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가족중심적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가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남성노인보다 좀 더 밀착된 관계의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남성노인보다 더 긴 시간의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여성노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음.

(6) 여가활동

- 기부경험, 자원봉사활동 경험 및 사회적 관계망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2017년 여성은 여가시간에 주중, 주말 모두 「TV시청」, 「휴식활동」 순으로 많이 활용하며, 다음으로 주중은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주말은 「문화예술관람」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남성보다 여가시간에 「TV시청」, 「문화예술」, 「관광」, 「취미, 자기개발」, 「휴식」, 「사회 및 기타활동」을 더 많이 활용함
 - 남성은 여성보다 「스포츠」,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을 더 활용함

2 | 여성노인과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1) 소득보장 지원

(1) 현금급여 여부에 따라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구분

- ①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 ②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 경로우대(공영 경로우대제도, 민간 경로우대제도, 주택자금 할증 지원, 국민연금 실버론, 각종 세제혜택, 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 주택 우선공급)
 - 고용증진 생업지원제도인 노인일자리사업 등

(2) 남성부양자 모델 및 남성가구주의 경제활동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개편이 필요함

- 노령계층에 대한 기초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는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현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고 여성노인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지만, 아직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에는 그 절대액이 부족한 실정
- 고용 여부나 고용기간만 반영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의 수급기준의 보완이 필요
- 예산의 제약이 있겠지만 연금급여율의 설정 시 연금가입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연금급여액이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개혁
- 시간제나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남성들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여성노동 특성을 반영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3) 여성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여성노인들은 가사, 육아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사, 간병 등 돌봄분야와 같이 여성들이 익숙한 분야에서 신규 직종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확대
- 현재 확대되고 있는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하교도우미, 방과 후 보육 등 취업모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나아가 더 많은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에서의 신규 직종 발굴도 필요함

(4) 고학력과 전문직 직장경력이 있는 여성노인들

- 소양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지역 내 유아 및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등에서 안전교육, 보충학습, 예절교육, 인성교육 등 안전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도우미 직종을 개발하여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교육과 안전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5) 노인인력지원기관

- 노인들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보다 취업으로의 연계기능을 더 요구받고 있는데, 연계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관련 직업훈련 및 원만한 직장 생활에 필요한 소양교육 등 노인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야 함
 - 노인전담 직업훈련센터나 직업경험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 여성노인의 삶의 특성과 직업경력 장애를 고려한 직업의식, 직업설계, 여성의식, 일·가정

양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양교육 교재와 유망직업 훈련교육 교재 등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6) 홍보활동

-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건소,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반사회 등에 노인일자리 정책이나 사업에 관련한 브로서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함

(7) 빈곤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 빈곤 여성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적부조를 현실화해야 함

2) 건강 증진 지원

(1)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암 등의 중증질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특히 노년기의 만성질환 등은 지속적인 의료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취약함

(2)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지만, 고혈압이나 골다공증 등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을 보유할 확률이 높아짐

-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현재의 중증질환 중심에서 소득수준 등 부담능력 중심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구조는 이들 여성독거노인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킴
-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치료’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로 포함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체계를 마련해야함

3) 주거지원

(1) 노인에게 있어 기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에 대한 욕구는 복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

(2) 은퇴한 후 사회활동이 축소되면서 이전에 비해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3) 노인에게 주거는 안락과 보호의 의미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웃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사회적 의미도 지니며, 적절한 생활환경은 노인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복지를 증진시킴

- (4) 노인복지정책 영역 중에서 가장 미진한 영역이 바로 주거보장의 영역
- 우리나라의 주거보장정책은 주택공급정책에 치중
 - 주택소유를 재산증식을 통한 소득보장 시도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한 개입을 기피하고 있음
 - 노후 주거보장을 목적으로 한 노인복지정책의 주안점이 노인복지시설 관련 정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임
- (5) 여성노인의 개별욕구를 고려한 최소한의 안정이 보장되는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함
- 여성노인들은 주로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주택을 노인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개조, 수리할 경우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임대료 및 재산세 면제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지원 대책

4) 여가활동 지원

- (1)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것임
- (2) 여성노인의 경우 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직접 손자녀 돌봄, 간병 등 가족돌봄에 참여하는 경우 여가활동에 시간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3) 여성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과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4) 노인의 대부분은 남녀 모두 TV 시청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다양한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가 요구됨
 -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서 가능함
- (5)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단위의 노인여가문화를 활성화하며, 1인 1여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고령자의 성별이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형 여가문화활동 시설의 활용 등이 있음
- (6) 평생교육
-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됨
 - 노년기 여가시간의 의미 있는 활용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존중감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해 성공적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

- (7) 다양한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결사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함
- (8) 건강하지 못한 노년층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보건소와 경로당이 연계하여 건강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건강수준이 낮은 노년층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집으로 찾아가는 ‘여가 프로그램 가정배달’ 형식의 지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9) 노인의 생애를 활기차고 생산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긍정적 수용, 자립적 생활을 위한 설계와 체계적인 준비, 직업역량 및 사회참여, 여가역량 개발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함
- (10) 최근에는 정책적으로 노후설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 노후설계를 통해 여성노인들이 생산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11) 수시로 욕구조사와 이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계획 등은 여성노인복지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는 곧 효과적인 여성노인복지사업의 전제가 됨

■ 학습정리

1. 여성노인의 실태와 삶

1) 노인의 개념 및 특성

-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함(국제노년학회, 1951)

2)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

-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함
- 매년 발행되는 통계청의 고령자통계: 65세 이상 대상자를 고령자로 정의함
- 국민연금법: 정상 연금 수혜 연령을 60세로 규정함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함

- 우리나라 생물학적, 사회학적 통념에 의하여 만 60세를 환갑년(環甲年)으로 하는 전통이 있어 이때부터 노령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대한노인회나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가입연령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음

2. 여성노인과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 1) 소득보장 지원
- 2) 건강 증진 지원
- 3) 주거지원
- 4) 여가활동 지원

13주차 2강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학습 목표

- 여성장애인의 실태와 삶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여성장애인의 실태와 삶
2. 여성장애인과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

1) 결혼 및 자녀 (2017 장애인 실태조사)

(1) 결혼 상태

- 유배우자 (55.3%), 사별(18.7%), 미혼(15.3%) 등.
- 자폐성장애인은 전원(100%)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인(77.9%), 정신장애인(55.7%), 뇌전증(48.2%)의 경우는 다른 장애인에 비해 미혼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2) 장애인의 평균 결혼연령은 26.3세

-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20세~29세(69.7%)에 결혼하고, 이외 장애인의 결혼 연령은 30세~39세(18.6%), 10세~19세(8.3%), 40세~49세(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결혼 당시 장애여부

- 22.7%의 장애인이 결혼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
- 77.3%의 장애인은 결혼 당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혼 당시 지적장애인(81.1%), 안면장애(75.6%), 뇌전증(72.0%), 그 밖에도 시각(36.9%), 언어장애(35.5%), 심장장애(30.8%), 정신장애인(30.7%), 지체장애인(20.7%)의 경우에도 대체로 높은 비율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
- 이와 대조적으로 뇌병변장애(7.8%), 신장장애(4.6%), 간장애(4.0%), 장루·요루장애인(2.5%) 등으로 결혼 전 장애를 가지고 있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이들의 장애는 대체로 성인기 이후 사고나 재해 혹은 질병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예측됨.

(4) 결혼 당시 배우자의 장애유형

- 지체장애(48.8%), 청각장애(75.9%), 언어장애(73.6%), 시각장애(62.7%), 지적장애(37.9%)는 장애인 본인과 동일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됨.
- 향후 장애유형끼리 결혼을 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구축하고 생활방식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 예컨대,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수화와 같은 공식언어의 활용으로 인한 주류 사회와의 차별화 가능성 등
- 이 밖에도 지적장애인 가정에서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생활지원 및 자녀양육 시스템의 구축 등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

(5) 결혼당시 배우자의 장애 등급

- 1급이 11.4%, 2급이 33.7%, 3급이 25.7%, 4급이 12.7%, 5급이 5.0%, 6급이 11.5%으로 나타남.
- 결혼 당시 배우자의 장애상태는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인 점에 주목.
- 특히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의 배우자는 1~3급 사이의 중증장애인으

로 나타남.

(6) 장애인의 출생지

- 99.7%(전국추정치 2,106,254명)의 응답자가 국내출신(대한민국), 그리고 소수의 응답자(0.3% 미만)가 대만, 중국,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파악됨.

(7) 장애인 배우자의 출생지

- 98.7%가 대한민국이며, 장애인의 배우자 1.3%는 국외출생자(대만, 필리핀, 중국, 몽골, 캄보디아, 일본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와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 가정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함.

(8) 장애인이 결혼 하지 않았다면

-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및 장애문제 때문에(46.1%),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2.6%),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여서(19.6%), 집장만과 결혼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12.6%),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안면장애, 정신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는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건강과 장애로 인해서(대략 50~70% 이상)라고 지적함.
- 이들의 건강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 점에 그치지 않고, 가족을 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적 혹은 물적 자원이 빈약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협상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9) 장애인 중 혼인 경험이 있는 경우(미혼모/ 부 포함)

- 자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96.4%가 자녀가 있으며, 3.6%의 응답자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기혼자 대부분이 1명 이상의 자녀가 있고, 장애인이 가족을 부양하며 동시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함.

(10) 장애인의 자녀수

- 2명이 40.9%로 가장 많았고, 3명은 21.7%, 1명은 14.3%, 4명은 12.5%, 그리고 5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장애인도 10.6%인 것으로 파악됨.
- 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장애인이 복지수혜자이며 사용자로 여겨온 사회적 통념을 깨고,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 교육을 책임지는 돌봄 책임자이며 동시에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장애인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면 향후 자녀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사회서비스가 고려. 지금까지는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 대책과 서비스를 수립하여 왔으나, 향후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고려할 때에는 장애인 가운데, 배우자 유무, 장애인 배우자의 장애유무, 가족 내 또 다른 장애인이 있는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이밖에도 자녀의 수, 자녀양육 조력자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11) 자녀의 장애여부

- 대부분(94.7%)의 장애인이 자녀가 장애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5.3%의 장애인은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들 가정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이 장애자녀를 돌보는 보호자로서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주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
 - 따라서 현재 제도화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활동지원, 이동지원, 의료복지, 문화지원 등 이외에도 장애자녀에 대한 돌봄지원, 양육지원, 교육지원 등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장애인의 결혼과 임신, 출산과 자녀양육 등에 대해서는 초보수준의 관심을 보여 왔으나, 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전체 장애인의 5.3%가 장애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장애인 당사자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들 자녀의 평균연령대가 성인 중기 이후인 40대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고령화 되어가는 장애인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한 가족 내 장애인이 다수인 가족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현황조사와 대책이 요구됨.
 - 예컨대, 중·장년기 이후의 중증이며 고령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배우자, 자녀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이들은 단순 장애인 가정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이들 가족은 위기, 집중관리와 보호가 요구되는 고위험, 최우선 지원 대상 가구로 분류하여 집중적인 보호와 지원대책이 필요함.

2) 임신과 출산

(1) 만 49세 이하 여성장애인의 70% 이상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한 경험이 있음

- - 만 49세 이하의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이 마지막으로 임신을 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여성장애인이 그렇다(72.1%)고 답했고, 그때는 장애인 아니었다(27.9%)로 응답하였음.

(2) 임신기간 중 애로사항(1순위)으로 임신 시 가장 힘들었던 점

-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 (20.6%), 본인의 건강악화(13.8%),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12.4%),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9.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 밖에도 집안일의 어려움(6.1%), 가족들의 출산 반대(4.2%),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3.7%),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서(2.6%), 주위의 시선 때문(1.8%), 병원시설의 설치 미비(1.2%), 임신출산 관련 정보부족(0.9%), 직장에서의 퇴직 권유(0.6%)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지적하였음.

- 이와 더불어 응답 장애인의 22.2%는 임신기간 중 애로사항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3)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어려운 점

- (1) 만 49세 이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16.0%),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2%), 활동보조인(10.1%) 등 높은 욕구를 보였음.
 - 이 밖에도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자녀교육도우미, 건강관리 프로그램, 상담(심리정서)서비스, 자조집단(멘토),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 지원 등이 여성장애인 지원 욕구 1순위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2)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
 -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28.9%), 다음으로 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15.2%), 친구 등 동료교제의 어려움(11.0%), 자녀양육의 어려움(9.5%), 사회화 기회의 부족(7.6%) 등으로 꼽았다. 이 밖에도 성장과정 중 가족으로부터 따돌림(2.1%), 결혼 후 시댁식구들의 학대차별(5.0%), 교육기회의 부족(5.1%), 성추행·성폭행·강간 등의 문제(3.8%), 임신·출산의 어려움(4.6%), 여가시간 활용의 어려움(5.5%)등을 어려웠던 경험으로 응답하였음.

4) 여성장애인의 삶

- (1) 남성장애인에게는 육체의 손상이 기능적인 장애만을 의미하는 반면, 여성장애인에 있어 기능적인 손상은 ‘정상적인 여성성’의 상실로 간주되어 육체적 손상을 가진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라는 범주에서 제외됨.
- (2) 여성장애인을 무성적인(asexual) 존재로 규정하거나, 아내 혹은 어머니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로 가치절하함.
- (3) 여성장애인의 경우 결혼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임신, 자녀양육, 가사부담, 시집식구들과 갈등 등의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2 | 여성장애인과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

1) 교육지원

- (1) 교육지원의 필요성
 -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낮은 교육수준임
 - 여성장애인은 학령기 시점부터 교육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교육기회로부터 배제되어 낮은 교육수준에 머물러있음

(2)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

- 여성장애인의 문제와 욕구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기초학습과 인문교육, 사회 및 체험 교육, 보건 및 가족 교육 등으로 교육내용 구성
- 장애 특성상 이동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방문형(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장려함

(3) 교육지원 방안: 교육기회의 확대

- 장애여아를 포함하는 장애아동이 통합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여성장애인이 취학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아동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교육이 이뤄져야 함
- 공교육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 특성상 정규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등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함

(4) 여성장애인의 교육사업에 대한 목적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상담과 동기부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5) 여성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자원봉사자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담당자의 노력이 필요함

2) 취업지원

(1)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지원

- 장애유형별 개별화된 고용정책의 개발
 -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매우 시급
 - 중증장애인 직업확대 사업,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고용사업, 사후 지도사업 등을 통해 다양하고 개별화된 접근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 강화
 - 여성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 구직등록에 대한 홍보확대 및 구직등록 관리의 체계화
 - 공공직업훈련기회 확대
- 여성장애인의 활동성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고용환경의 개선
 - 소규모 자영업의 창업을 위한 지원(장애인직업훈련원 내 여성장애인 전문 창업강좌 개설 등)
 - 여성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전통적인 직업을 포함하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기술과 훈련시설의 규모를 확대

- 공기업의 여성장애인 고용우대제도 도입
 - 여성장애인 고용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여성장애인의 공공기관 등에 할당제

(2) 여성장애인이 근로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로부터 배제되는 주된 원인은 여성장애인의 근로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때문임

- 사업체의 고용주 및 직원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함

(3) 통신이나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방식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4) 여성장애인의 경우 육아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택근로가 적합한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3) 건강지원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정보와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지역사회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여성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건전한 장애수용을 돕고 자존심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야 함

(2)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체계의 확립

(3) 고가의 보장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4)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의 마련

(5)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6) 저소득 여성장애인 가정을 위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함

4) 주거환경 지원

(1) 외국의 경우 장애인은 시설로의 이동보다는 자신의 주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택 내부의 개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2) 장애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 내 환경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지원을 받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조실태를 조사(2000)

-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엌과 욕실에 대한 개조가 가장 많았으며, 수도꼭지,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부엌 작업대 높이 낮춤 등의 개조를 실시

(4) 여성장애인들은 전세, 월세, 영구임대의 형식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

실에서 주택개조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며 불편을 느끼면서 불만족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음

- (5) 임대주택이라도 거주자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하는 동안 개조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며 장애인용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함

5)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지원

- (1)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여성장애인에 대한 편견

-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특히 ‘무능력(incompetent)’하고 ‘의존적(dependent)’인 존재로 인식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야 하는 이중의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됨
- 여성장애인은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고정관념과 여성장애인이 장애아를 낳을 것이라는 우생학적 주장이 여성장애인으로 하여금 임신하는 것을 방해함
- 여성장애인은 일반여성에 비해 또한 남성장애인에 비해 혼인이라는 제도에 진입하는 것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 여성장애인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가족을 형성하는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

- (3)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함

- (4) 여성장애인의 육아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우선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5) ‘제2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에서는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산전·산후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장애여성을 위한 피임, 성,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사업, 여성장애인의 보건,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장애인자녀의 보육시설 우선입소 등을 계획한 바 있음
-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정책이나 세부 추진계획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

- (6) 의료진

- 편안한 진료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근이 가능하게 하며, 높이가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조정된 검사대를 마련하고, 장애인을 이동시킬 때도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함

- (7) 가족이나 친구 또는 개인도우미 등을 검사실에 동석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6) 차별 및 폭력 대응

- (1)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장애유형별 이해와 장애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
 -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장애인의 이해에 관한 교육용 지침서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초등학교부터 교과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2)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 직접적인 차별 이외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의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TV, 인터넷, 라디오 등의 매체를 활용하거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작성이 이루어져야 함
 - 전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3) 여성계와 장애계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성의식과 성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방송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 작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장려하고 기존의 부정적인 의식을 개혁해야 함
- (4) 장애인 관련 문제 발생 시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개입을 통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5) 담당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강화와 교육이 요청됨
- (6) 장애인 중 차별과 폭력의 취약계층인 여성, 중증, 저연령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집중적인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7) 여성장애인의 가족생활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통합적인 가족복지적 접근이 요구됨
- (8) 사회적 지지도 영향이 강한 만큼 여성장애인에 대한 주변인들의 인식 개선과 지원, 개인 간 네트워킹 강화가 필요함

■ 학습정리

1. 여성장애인의 실태와 삶

- 1) 남성장애인에게는 육체의 손상이 기능적인 장애만을 의미하는 반면,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기능적인 손상은 ‘정상적인 여성성’의 상실로 간주되어 육체적 손상을 가

진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라는 범주에서 제외됨.

- 2) 여성장애인을 무성적인(asexual) 존재로 규정하거나, 아내 혹은 어머니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로 가치절하함.
- 3) 여성장애인의 경우 결혼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임신, 자녀양육, 가사부담, 시집식구들과 갈등 등의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2. 여성장애인과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

- 교육지원, 취업지원, 건강지원, 주거환경 지원,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 차별 및 폭력 대응

14주차 1강

맞벌이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학습 목표

- 맞벌이가족의 개념과 유형을 파악하고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 맞벌이가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복지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맞벌이가족의 개념과 유형 및 현황
2. 맞벌이가족의 문제와 복지대책

1) 맞벌이가족의 개념

- 맞벌이가족은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사회적 지위 확보, 가정경제 기여 등 자아만족과 행복감을 경험하는 새로운 가족형태
- 맞벌이가족은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한다는 면에서 기능적 측면이나 가족관계 측면에서 가족의 역할 분담이나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중요
- 남편은 도구적 역할을 하고 아내는 표현적 역할을 하는 기존의 가족형태에서 역기능적 가족 문제가 지적되면서 과거의 상이하고 분담적인 부부역할 수행보다는 역할의 공유, 동등한 의사결정,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점을 가지고 있음

2) 맞벌이가족의 유형

- 맞벌이가족에 대한 실태 분석에 따르면 취업 여성의 취업 동기나 직종 차이, 사회계층 차이, 취업 여성의 인생주기,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적 요인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남
- 여성의 취업 동기에 따라 맞벌이가족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생계유지형, 내조형, 자아실현형, 여가활용형 등으로 분류

(1) 생계유지형 맞벌이가족

- 가족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기혼 여성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취업을 하는 형태
- 학력이 낮을수록 많고 연령층이 40대 이상일 경우 특히 많음

(2) 내조형 맞벌이가족

- 생계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가족의 더 나은 경제적 여유를 위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와 남편의 학업이나 출세를 위하여 여성이 생계를 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파생되는 형태
- 취업은 하였지만 여성의 성역할 태도는 매우 보수적이며 남편에 종속된 위치를 수용
- 도시가 농촌보다 많고 학력수준이 낮을 수록 이 유형에 속함

(3) 자아실현형 맞벌이가족

- 중산층 이상 고학력의 여성이 가사노동의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취업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근대적인 성 역할 태도에 입각하여 평등한 부부관계를 정립하려는 형태
- 이들은 주로 도시에 많으며 학력수준은 대졸 이상이 가장 많고 젊은 연령층이 이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

(4) 여가활용형 맞벌이가족

- 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유, 내조 또는 자아실현 등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를 살리면서 여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형태.
- 다른 유형의 맞벌이가족에 비해 여가활용형의 취업 동기는 적은 편

- * 맞벌이가족을 위와 같이 분류할 때, 우리나라 취업 여성의 상당수는 생계유지형에 해당하며, 나머지 세 유형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 *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어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면 여성 인력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높아지리라 전망된다.

3) 맞벌이가족의 특성

- 개인중심적 산업화 사회에서 여성 개인의 경제적 욕구 충족이 사회적 인력 수요와 맞물려 점증 추세에 있는 맞벌이가족은 전통적 확대가족이나 기존의 핵가족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나타냄

(1) 가족구조

- 맞벌이가족은 구조적으로 확대가족이나 핵가족형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의 편의를 위하여 확대가족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핵가족구조를 보이는 경우에도 친인척들이 근거리에 거주하여 상호부조가 쉬운 수정핵가족 내지 수정확대가족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 맞벌이가족은 외벌이가족의 경우보다 주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며 시댁이나 친정 혹은 그 밖의 친인척을 통한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가족구조를 보임

(2) 취업 이유와 양상

- 기혼 여성의 취업 이유는 생계비 보조 등의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저축, 자녀교육비 순
- 그러나 여성의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공헌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기혼 여성의 취업 동기가 극히 가족 중심적, 경제적 이득으로 국한되어 있음
- 취업 양상을 보면 기혼 여성의 취업 직종은 지역에 따른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농촌에서는 대부분 농업 관련직이고 도시에서는 판매직과 서비스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생산직

(3) 부부역할 분담 및 권력관계

- 여성의 취업이 과연 평등하고 민주적 부부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선행 연구들의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음
- 일반적으로 맞벌이가족에서 여성은 재정권 강화로 가정 내 역할 분담이나 권력관계에서 비교적 대등한 위치
-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동계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경직된 사회적 규범 때문에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
- 부부의 성 역할 태도 역시 여성의 취업 여부와 관련이 있음

- 부부가 함께 근대적 성 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 맞벌이가족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부인의 취업을 통하여 남편의 성 역할 태도가 근대적으로 바뀔 수도 있음
- 그러나 부부의 성 역할 태도와 취업과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기혼 여성의 생활의 질을 높여 준다고 할 수는 없음

(4) 부부적응 및 가족갈등

- 맞벌이가족에서 부부 간의 적응 양상은 ‘남편-직업 / 부인-가정’의 외벌이가족과 큰 차이는 없음
- 여성의 취업은 자신의 다중역할 간의 갈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배우자와의 적응도가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만족을 얻음으로써 전반적인 결혼만족도에는 좋은 영향을 미침
- 그 이유는 여성의 취업 여부 자체보다 취업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가 부부의 적응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 ① 여성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적응도가 높음
 - ◆ 여성의 취업 선택 여부도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인이 선택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는 경우보다 부부적응도가 높음
 - ② 맞벌이가족의 가족갈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
 - ◆ 취업 여성의 자녀관계는 사회적 계층, 직종, 자녀의 연령과 성별 등의 복합 요인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게 됨
 - ◆ 일반적으로 자녀양육 대행자는 시부모, 친정부모나 가정부, 베이비시터부인데 전자의 경우 과잉보호에 대한 갈등, 후자의 경우 애정 없는 양육에 대한 우려가 문제

4) 맞벌이가족의 발생원인

- 맞벌이가족의 형성과정
 - 한국에서의 맞벌이가족 형성과정은 과도기, 사회적 혼란기, 초기 산업화, 산업화 가속화 시기 등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1단계 : 과도기(여성 노동의 참여 원조기, 1900~광복 이전)

- 근대적 의미의 여성 경제활동참여는 1900년대 초
- 그 이전까지는 엄격한 가부장체제, 유교적 남존여비사상, 폐쇄적 신분사회 등을 반영하여 여성은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부속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음
- 1900년대 초 일본이 조선의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시작
- 이 때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는 노동현장에서는 흑사당하게 됨

(2) 2단계 : 사회적 혼란기(여성 노동의 인식 전환기, 광복 이후~1960년 이전)

- 1945년 광복 이후 대량의 실업사태가 야기되었는데 이것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자 여성의 경제활동도 크게 위축

-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남성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
- 전쟁이 끝나면서 여성들을 가정 내에 묶어 놓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었으나, 전쟁 와중에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생계유지수단의 하나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였으며, 일단 시장에 뛰어든 여성들은 경제력 유지를 위해 계속 일하지 않을 수 없었음

(3) 3단계 : 초기 산업화 시기(여성 노동력의 양적 팽창기, 1960~1980)

- 원조경제에 의존하였던 1950년대를 지나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우선 정부주도하의 수출제일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공업화 내지 대외지향정책
- 이러한 초기 산업화 과정은 급속한 사회변화를 초래
- 산업화 전략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고용확대정책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노동력의 성별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도 빠르게 증가
- 초기 산업화 단계로 특징지을 수 있는 1960~70년대 경제개발정책은 전통적 기술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인 봉제, 섬유 등의 경공업 부문에 주력하였음
- 이에 따라 취업여성의 연령이 매우 낮았고 대부분 저학력 미혼여성이었으며, 고용형태도 학교 졸업 이후 결혼하기 이전까지만 취업하는 단기형이 대부분이었음

(4) 4단계 : 산업화 가속화 시기(여성 노동력의 질적 변화기, 1980~현재)

- 한국경제는 1980년대 들어 산업화 속도가 다소 늦춰지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나, 1990년대의 경제자유화 내지 국제화 바람과 함께 벤처기업 붐이 일어났고, 2000년대 들어서는 IT 및 정보과학화를 계기로 산업화 가속화
-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절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출생률 저하, 생활수준 및 교육수준 향상으로 저학력 미혼여성 노동력이 감소하자 여성취업자의 연령이 올라가기 시작하였으며, 기혼 여성의 취업비율도 높아졌음
- 그리하여 고학력 소지자의 기혼여성도 노동시장에 차츰 유입되면서 여성인력 공급구조패턴이 바뀌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저연령·저학력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산업화 초기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있어 부조화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음
- 그 결과로 부문별 노동력 부족 현상이 증폭되었음
- 1990년대 이후에는 노동력보충을 위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여성의 직업의식 고양과 맞물려 기업과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됨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있어서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았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기혼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반대현상
- 고용형태가 기혼 중년여성을 중심으로 한 장기형으로 점차 바뀌는 추세
- 아울러 여성의 시간제 취업률도 차츰 높아지고 있음

형성과정	내용
1단계 : 과도기 (여성노동 참여의 원조기, 1900~광복 이전)	1900년대 초 일본이 조선의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시작
2단계 : 사회적 혼란기 (여성노동의 인식 전환기, 광복 이후~1960년 이전)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성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기 시작,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도 개선
3단계 : 초기산업화시기 (여성노동력의 양적 팽창기, 1960~1980)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5개년 경제개발계획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 -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빠르게 증가시킴
4단계 : 산업화 가속화시기 (여성노동력의 질적 변화기, 1980~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 1980년대 이전까지는 미혼 여성의 참여율이 높았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기혼 여성의 참여율이 높음 - 시간제 취업률도 나타남

5) 맞벌이가족의 영향

(1)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 가정에서 기혼 여성의 취업은 곧 그만큼의 금전적 수입 증가를 가져옴
- 그러나 주부의 수입, 주부 자신이 인지하는 재산 형성기여도, 가정생활을 위한 제반 지출 경비 분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은 자신이 돈을 버는 일보다 쓰는 일의 비중이 더 높음
- 즉, 생산 기능의 역할 인식보다 소비 기능 역할 인식이 높으며 그 돈이 재산 증식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주부의 취업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 ①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가정의 생활 패턴 변화가 야기하는 영향
 - 주부의 취업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요구하며 취업 주부의 시간 부족으로 인한 가계 소비 행태의 변화를 가져옴
 - 주부가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 자녀가 있는 경우 탁아 비용 등의 지출을 필요로 함
 - 취업 주부는 제한된 시간으로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의 생활양식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노동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편의 위주로 바뀌게 됨
 - ② 추가소득에 힘입은 가정의 구매력증대 효과
 - 주부의 취업은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구매력 증대로 연결됨
 - 주부 취업에 따라 추가된 소득은 열등재가 아닌 한 모든 지출 항목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증가의 폭은 소득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

(2)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 현대 가정의 이상적 부부관계는 평등성 지향
- 전통적 가정에서 부권은 남녀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제
- 그러나 향상된 교육 수준과 여성 취업률에 의해 배우자 선택에서부터 남녀의 종속관계는 탈피되고 있으며 가족형태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가족의 가족기능 수행 변화는 전통적 부권 위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함
- 부부관계 불평등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가정 안의 불평등이 곧 가정 밖의 남녀 불평등을 야기하는 직접적 이유가 되기 때문
- 여성이 가족 내에서 평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남성과 공히 가정과 직장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훌륭히 해내면서 인간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전제 조건
- 결혼으로 어느 한쪽의 잠재력 개발이 중단된다면 그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에 대부분의 여성이 동의하고 있음

(3)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 자녀는 부부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
- 자녀 출생으로 가족구조 면에서 부부간의 양자 관계는 부모와 자녀라는 삼자 관계로 바뀌게 되며 부부 상호작용 형태가 부모역할 부상으로 재편성되면서 부부역할에도 변화가 일어남
- 자녀는 부부관계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줌
- 자녀는 부모에게 역할 수행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결과 부부는 공동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욱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고 인간적으로 성숙됨
- 그러나 취업 주부들이 많은 부담을 안게 되어 그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자녀양육에 더 어려움을 겪으며 자녀의 대리양육문제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차적 방안은 육아 및 교육 기능의 이전, 예를 들면 유아원, 유치원, 미취학아동 대상 학원 이용 등
- 게다가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자녀양육의 문제는 누가 어린 자녀들을 돌볼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어 가정 내 역할 분담 정도로는 해결될 수 없음
- 이 문제는 탁아기관의 증가와 활성화 등 국가의 탁아정책으로 해결해나가야 함

6) 여성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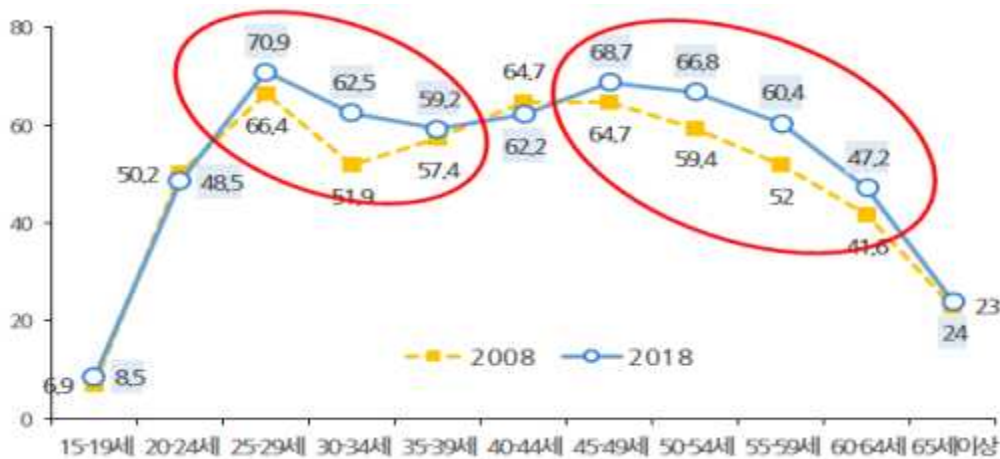
(1) 여성 경제활동과 성별관계의 변화

-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일과 가족 영역 관계에서 기업과 공장은 삶의 중심기관으로 재배치되는 일 중심적 사회조직으로의 재편이 이루어짐.
- 취업을 선택하는 여성의 경우 일과 가족의 갈등이 전면화됨.
- 일과 가정의 양립체계가 수월한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과 비슷한 U자형 커브로 나타나며 결혼,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2)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도 여성인재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옴
- 남성 위주의 직장 내 분위기도 여성인재 활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옴
 - 2018년 여성의 고용률은 20대 후반이 70.9%로 가장 높고, 이어서 40대 후반(68.7%), 50대 전반(66.8%)순으로 높음
 - 여성의 고용률은 30대에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에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의 모양을 보임
 - 여성의 고용률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20~24세와 40~44세는 감소한 반면 다른 연령대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30~34세(10.6%p)와 55~59세(8.4%p)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함

[그림1]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교육 정도별 취업자

- 여성 취업자의 「대졸 이상」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남성보다 5.0%p 낮음
 - 2018년 여성 취업자 중 대졸 이상의 비중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졸이 37.3%를 차지함
- 남성도 대졸 이상이 4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졸(39.1%)순임
 - 대졸 이상 여성 취업자 비중은 2000년 19.2%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초졸 이하, 2013년 고졸을 앞지른 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7) 맞벌이가구 현황

- 2018년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67만 5천 가구로 유배우 가구 중 46.3%를 차지하며 전년(44.6%)보다 1.7%p 증가함
- 연령대별로 보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40~49세가 54.2%로 가장 높게

- 나타남
- 맞벌이 가구 비율은 15~29세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가 전년보다 증가함

8) 2018년 일·가정 양립지표의 주요내용

- (1) 2017년 여성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8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2) 2017년 자녀 연령이 어리거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 비율은 낮고,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가구 여성의 근로시간이 감소함
 - 자녀 연령별로는 6세 이하 맞벌이 가구 비율(41.6%)이 가장 낮고, 자녀수별로 보면 자녀가 3명 이상(43.3%) 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음
 - 맞벌이 가구 여성의 경우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함
: 6세 이하(34.8시간) < 7~12세(39.5시간) < 13~17세(40.8시간)
- (3) 2017년 미혼인 남녀 고용률 차이는 1.6%p이나, 유배우 남녀의 경우는 그 차이가 28.5%p(남자 81.9%, 여자 53.4%)까지 벌어짐
- (4) 기혼 여성(15~45세) 취업자 중 37.5%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음
- (5)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으로 전년(43시간)보다 12분 감소하였으나,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6) 가사분담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만, 실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는 비율은 이에 못 미침
- (7) 남편의 가사노동은 집안청소와 시장보기 및 쇼핑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세탁과 식사 및 요리준비의 비율이 낮음
- (8)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육아휴직 사용자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도 전년대비 증가함

2 | 맞벌이가족의 문제와 복지대책

1) 맞벌이가족의 문제

- (1)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 맞벌이가족의 가장 큰 당면 문제는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를 들 수 있음
 - 특히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음
 - 취업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자녀양육의 책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모성보호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기혼여성 인력자원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점에서도 어린이집의 양적·질적 확대 보급은 매우 중요함

(2) 가사역할 분담 문제

- 가사역할은 음식 준비, 세탁, 청소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어온 부분으로 아직도 여성의 역할로 기대되고 있음
- 남성은 직업을 가져도 가사노동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 반면 여성에게는 취업을 하였다 해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기회를 주지 않음
- 사회적으로 남녀 간의 공평한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공동체로서 가족의 기능을 강구하여 수직적 부부관계에서 수평적 부부관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의 가치 불균형을 해소시켜나가야 할 것임

(3) 가족관계 문제

-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주부의 취업이 맞벌이가족 부부의 역할구조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주부의 취업은 부부간의 외면적 역할뿐 아니라 내면적 태도와 관계의 변화까지 가져와 부부 및 가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맞벌이가족의 부부관계는 물론 부모-자녀관계,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그리고 노부모, 장애아 부양문제로 인한 인간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인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4) 저출산 문제

-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학력 향상과 사회진출, 양육비·교육비의 부담, 젊은 세대의 결혼관·가치관 변화 등 다양함
- 가장 근본적 원인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의 고정관념임
-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었는데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의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주어져 있는 실정임
- 출산과 육아가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에게 걸림돌이 되는 현실이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

2) 맞벌이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거시적 복지대책

- 자녀 출산·양육관련 복지대책
 - 산전·산후 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
 - ◆ 기업들은 법규정에 따라 산전·산후 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결혼퇴직, 임신퇴직의 관습에 따르는 기업제도 있음
 - ◆ 2001년 6월 국회는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그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모성보호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 육아휴직제도의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교육공무원의 임신·출산휴직에 관한 규정(제44.45조)이 있으나 기업에서는 이를 적극적

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 보육제도

- ◆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 의하면,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제처, 2017).
- ◆ 누리과정의 도입, 평가인증제도의 정착,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근로관련 복지대책

- 남녀차별제도의 시정

- ◆ 취업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펴는 데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법적·제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 남녀고용평등법이 갖는 문제점은 고용 기회의 균등, 취업여성의 근로조건 개선, 육아시설의 확대, 육아휴직제의 정착, 채용과 모집, 승진 등에 있어서의 성차별 근절
- ◆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맞벌이가족으로서 모두 연금수급자가 되면, 여성배우자에 대한 가급연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도 가급연금액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음

-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해결

- ◆ 저소득층 여성은 결혼하여 가정에서만 안주할 수 없고 경제적 자립이나 생활수준 향상은 커녕 현실적으로 절박한 생계 유지수단으로 절대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하여 취업업을 하지만, 결혼 전보다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 - 경제적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 성차별 의식전환 보급 확대

- ◆ 가족정책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평등화, 여성 취업훈련의 강화, 여성 사회교육기회의 확대, 가정 지원 및 복지 증진(건강한 가족규범의 정착, 요보호여성의 복지 증진, 여성개발지원 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인습적 모습을 일소해야 함
- ◆ 남녀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많은 분야에서 있어 왔지만, 교육적·운동적 차원에서 가부장적 의식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시간제 근무 및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 ◆ 종일 근무를 일정한 작업장에서 하던 방식이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에 대한 욕구 증가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제 근무나 자신의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 근무제(flextime system) 등이 신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 시간제 근무가 저임금과 일체의 후생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으로 여성인력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예로 여성고용할당제는 산업 또는 직종에서 채용과 승진 인원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임

- ◆ 노동시장의 차별 중 채용, 훈련, 승진 차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남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인데, UN은 사회 각 분야에서 30% 이상을 권고하고 있음

(2) 미시적 복지대책

- 보육서비스
 - 특수아동이나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태이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수급 불균형 문제, 보육환경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저하 문제, 보육교사의 전문성 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일부 지자체에서 보육료가 지원되었고, 이후 2013년부터는 무상보육이 확대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정착.
 - 맞벌이가족을 위하여 운영시간에 따라 반일제, 종일제, 시간연장형, 숙박보육, 일시보육과 보육장소에 따라 가정보육, 기관보육, 직장보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직장어린이집
 - 기업의 보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장내 시설설치 위주에서 탈피해 고용주의 보육비용 부담방안을 다양화하는 측면도 바람직함
- 학교급식 실시 확대와 질적 개선
 - 학교에서 실시되는 급식은 아동의 균형있는 영양섭취를 위해서도 중요함.
 - 학교급식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영양교육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더욱 전문화된 학교급식체계를 마련하여 현재보다 더욱 확대되고 질적으로 개선된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 맞벌이가족의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부모교육 프로그램),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지도 프로그램 및 예능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자녀를 위한 단체생활학습 및 각종 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음
 -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레크리에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향상 프로그램 등이 이용됨
 -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원조서비스로서 법률상담이나 생활상담 전화가 있음

■ 학습정리

1. 맞벌이가족의 개념과 유형 및 현황

1) 맞벌이가족

- - 결혼한 부부가 동시에 모두 직업을 가지면서 구조적으로는 확대가족 내지 핵가족으로 형성된 가족을 뜻함

2) 맞벌이가족의 유형

- 생계유지형, 내조형, 자아실현형, 여가활용형 맞벌이가족

3) 맞벌이가족의 형성과정

- 1단계 : 과도기(여성 노동의 참여 원조기, 1900~광복 이전)
- 2단계 : 사회적 혼란기(여성 노동의 인식 전환기, 광복 이후~1960년 이전)
- 3단계 : 초기 산업화 시기(여성 노동력의 양적 팽창기, 1960~1980)
- 4단계 : 산업화 가속화 시기(여성 노동력의 질적 변화기, 1980~현재)

2. 맞벌이가족의 문제와 복지대책

1) 맞벌이가족의 문제

- 자녀양육 및 교육, 가사역할 분담, 가족관계, 저출산문제

2) 맞벌이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 자녀 출산·양육관련 복지대책
- 근로관련 복지대책
- 보육서비스
- 직장어린이집
- 학교급식 실시 확대와 질적 개선
-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14주차 2강

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학습 목표

- 여성복지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해 파악하고 여성복지발전을 위한 제언을 할 수 있다.
- 국제사회 여성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여성복지의 과제를 전망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여성복지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
2. 국제사회 여성정책 동향

1). 여성복지 수행의 기본 원리

(1) 평등성의 원리

- 사회복지에서 광범위한 의미로 평등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여성복지에서는 더욱 그러함
-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 등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의 단적인 사례임
- 여성복지서비스에서 남녀간에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가치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적용됨

(2) 전문성의 원리

- 여성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의 욕구와 요구에 대응한 사회적 서비스로서 그 특성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핵심적인 주요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함
- 복잡한 인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

(3) 통합성의 원리

- 요보호 여성의 문제는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유기적이고도 포괄적인 대응책이 필요함
- 통합성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4) 지속성의 원리

- 여성복지서비스는 단절됨 없이 대상자에게 개입부터 치료나 보호의 목적이 완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서비스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차원의 서비스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됨

(5) 여성주의적 원리

- 기존의 지배적인 인식론을 전제로 한 실천들은 성차별주의에 오염되어 있으며 여성의 경험과 본질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음
- 여성을 주체적 경험이나 주관과는 동떨어진 불변의 실재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의식과 경험, 개념 속에 재구성되는 역동적이고 현실적인 실재로서 전제하는 것임
- 여성주의 입장에서 객관성이란 얼마나 철저히 여성의 경험에 기반을 두어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지가 핵심임

2) 현행 여성복지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

(1) 여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 1990년대까지 정부는 여성이나 여성문제에 대한 원인을 여성 개인의 결함이나 잘못에 있다고 생각함
- 대부분 사후치료적인 접근에 그쳤고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보다는 사후적인 미봉책 마련에 급급했음
- 1990년대 이후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함
 -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기존의 요보호대상자인 여성의 보호 중심에서 전체 여성의 복지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여성 문제에 대해 여성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고에서 사회와 환경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으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여성복지를 위한 예산은 낮았으며, 예산 속에 맞춰진 복지 프로그램의 시행은 양적, 질적으로 불충분한 상황이었음
-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를 거치면서 여성정책은 법·제도적으로 계속된 발전을 거듭하고 여성복지정책 또한 그 범위와 내용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
 - 제3차에 걸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남녀평등,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서부터 성주류화의 도입까지 체계적으로 여성정책을 만들어 시행함
 -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부부터 가족법의 폐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등과 함께 성폭력, 성매매, 장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분야별 법률을 제·개정함
- 여성복지는 여전히 한계가 많음
 -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과 인권의 보장을 외치고 있음
 - 성폭력에 대한 가중된 처벌을 담고 있는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성폭행범죄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
 - 형식적으로 법적·제도적인 발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시행에서는 관심과 주의를 소홀히 했음을 나타냄

(2) 여성정책에서 여성들의 참여 확대

- 국가정책 및 여성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한 채 주로 남성들에 의해 여성정책이 결정되어 옴
- 법률 제정하는 국회에 여성의원 비율이 매우 낮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관리직에서의 여성 비율 또한 매우 낮음
- 상대적으로 성차별을 경험하지 못한 남성들이 성차별적 관행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여성들의 어려운 삶과 경험을 얼마나 대변하여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회의적임
- 여성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임

(3) 법과 현실 간의 괴리 완화

-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낮음(예를 들면, 가정폭력에 관한 법에 ‘안방접근금지’라는 비현실적인 조치가 있음)
- 현실에서 법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법 집행에 따르는 재정적 예산 지원이 확보되고 있지 못함
 - 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며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 여성들 자신이 매우 소극적임
- 현실적인 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기존의 실효성 없는 법들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법의 적용 시 상황과 어려움을 사전에 고려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법의 시행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야 함

(4) 법률 간의 일관성 결여와 불균형한 정책 추진

- 우리나라 여성관련 법률은 사후해결책으로 하나씩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일관성 있게 만들어지거나 시행되지 못함
- 법률 간에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법률의 적용 시 적용 대상자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함
- 정책 간에 중첩된 부분이나 간과된 부분도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부서 간에 유사한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비연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인 경우가 많음

3) 여성복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언

(1) 정책 결정 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 여성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정책의 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 여성참여가 저조한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잠정적 우대조치를 적극 활용함
- 공직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으나 이제는 여성승진할 당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임
-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목표제를 위촉위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정원의 30%를 목표로 해야 여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
-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가 갖는 의의
 - 모든 관련 정책에서 여성의 이익과 여성의 관점이 고려됨으로써 여성 문제해결과 평등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평등사회 건설을 이룰 수 있음
 - 사회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 분야의 정책 결정에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여성이 미래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자발적 단체에 의한 영향력 행사가 정책결정 과정에 미치는 효과가 커지고 있으므로 여성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자발적 압력 단체로서 여성단체 기능을 강화해야 함

(2) 여성들의 적극적인 법 활용

- 여성들이 성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함으로써 하나씩 관례를 만들어 가야 함
-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전 여성의 문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전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보의 접근과 습득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각종 공공기관,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의 법률지원을 직접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함

(3) 여성 관련 예산의 확보

- 여성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 업무 전담부서의 위상을 높여 예산분배 과정에서의 여성의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이 가장 지체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2009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되었지만 정착단계는 아직 아님
- 성인지적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치참여와 공직 부문에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임

2 | 국제사회 여성정책 동향

1) 성주류화 관점의 채택

(1) 1995년 UN

- 성주류화를 여성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GAD(Gender and Development) 접근의 논지에 부응하여 각 국가의 정책에서 이 관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권고함

(2) 대부분의 국가

- 국가행동계획에서 성주류화 관점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행함

(3) 캐나다

- 국가 계획의 기본 목표 중의 하나로 '여성의 평등에서 성 평등으로'를 채택
- 여성정책이 여성집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남녀 간의 관계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천명함

(4) 핀란드

- 성주류화를 위하여 각 부처의 연례보고서에 여성과 남성 간의 급여 차, 리더십에서의 성관점, 성평등 기회, 다양한 지위 부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평등 등의 성주류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5) 덴마크

- 1996년 말 의회에서 행정부와 정치 부분의 성평등 시행을 위한 지침을 내린바 있음
- 2000년 5월에는 평등지위법을 채택함으로써 성주류화 정책을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채택함

2) 정책의 책임성 기제 강화

(1) 선진국에서는

- 성주류화를 실현하고 여성정책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젠더예산과 젠더 분석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음

(2) 호주

- 국가예산에 여성 관점을 반영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활용

(3) 캐나다

- 연방계획에서 젠더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으며 타부처의 젠더 분석 지원을 위한 국 차원의 부서까지 설치하고 있음

(4) 핀란드

- 새로운 입법안이 제기될 경우 그에 대한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있고, 각 부처의 연례보고서에 주류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5) 노르웨이

- 1999년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함

(6) 한국

-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4년 성별영향평가를 시범 시행하기 시작, 2005년부터 제도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3) 협조체계의 다각화

(1) 호주

- 연방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여성지위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부부처의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하여 여성정책사무관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성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정보교류를 하고 있음
- 연방 주별 연례회의와 여성자문단 회의 등이 고위급의 논의를 가능하게 함

(2) 캐나다

- 여성지위청이 있으며 10개의 지방사무소를 가지고 있음
- 여성지위청은 젠더분석에 관한 부처 간 회의를 주관하고 부처별 젠더분석에 대한 보고를 받음

(3) 핀란드

- 정부 내에 여성정책기구 및 각 부처대표, 통계 및 여성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정책 모니터 실무단을 설치하여 여성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음

4) 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1) 법적 평등 그리고 실질적인 평등 보장

-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 가족법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등 법상의 차별 철폐와 법적 평등의 구현단계임
- 법적 평등을 바탕으로 뿌리 깊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전통적인 성차별적 태도 및 고정된 역할 분담에 대한 편견과 관습의 변화를 가져와야 함
-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매스컴 등을 통한 의식변화 프로그램이 계획적으로 지속되어야 함
- 민간단체인 여성단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므로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대해야 함
- 국제교류 속에서 국제적 변화 수준과 방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와 맞 맞추어 나아갈 필요가 있음

(2) 여성인권의 증진과 보호

- 인권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국가는 여성들이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관련 제도도 발달해 왔으나 아직도 법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큼
-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여성 문제 예방 및 해결의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사회범죄이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차별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확대되어야 함

(3) 성인지적 사회보장

- 여성에 대한 사회보장의 확충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정신적 자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여성을 단지 남성의 피부양자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여성도 자신의 연령과 생애과정에 따른 생활 변화에 상응하는 보장을 받아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여성빈곤 문제에 대한 보다 성인지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들의 생애주기별 빈곤실태를 파악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과 수급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들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여성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제한점이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성인지적 정책형성 기법을 활용하여 공공부조제도를 구축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 사회보험도 여성 노동의 특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여성의 개별연금수급권이 확보됨으로써 여성이 노동을 통해 자립이 가능해져야 빈곤에서도 벗어날 수 있음
 - 소득활동자 중심의 연금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성인지 정책
 - 중립적으로 보이는 관행이나 정책일지라도 남성과 여성이 처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정책
 - 사회복지정책도 성별 차이를 따져 수립함으로써 동등한 정책 효과를 가져 오도록 만드는 것임
 - 사회보장제도가 전제로 삼고 있는 ‘가부장제에 기초를 두 가족주의’를 탈피해야 함
 - 여성의 생활을 경제적 의존자, 가사노동자로만 묶어 두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함
 - 현재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들인 모자가정, 독신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변화하는 사회 속에 대안적 가족 형태로 수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해야 함

(4) 생애과정에 적합한 복지정책

- 여성의 생애 과정은 여성의 취업률, 취업만족도, 고용관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복지정책은 이러한 생애 과정을 적절히 고려해야 함
- 여성은 스스로 가사노동에 전념할 것인지, 사회노동에 전념할 것인지 혹은 양자의 절충적 형태를 취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여성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
 - 요보호여성의 문제 ⇒ 여성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 문제
 - 사후개입적 서비스 중심 ⇒ 예방사업의 확대
 - 단편적 서비스 제공 ⇒ 통합적인 지원체계
-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역의 특수성과 상황을 고려한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만들어야 함
- 여성주의적 복지실천의 목표

- 여성의 억압을 유지·재생산하는 구조를 밝혀내고 그 구조의 변혁을 통해 인간 해방에 기여하는 것임
- 여성복지에 대한 여성주의적 전망
 -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성의 경험이 첨가되어야 하며, 여성의 입장에서 분석되어야 함
 - 여성주의적 여성복지실천의 전망은 여성주의 인식론과 경험론, 그리고 입장론이 그 근본이 됨

■ 학습정리

1. 여성복지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

- 1) 여성복지 수행의 기본 원리
 - 평등성, 전문성, 통합성, 지속성, 여성주의적 원리
- 2) 현행 여성복지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
 - 여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 여성정책에서 여성들의 참여 확대
 - 법과 현실 간의 괴리 완화
 - 법률 간의 일관성 결여와 불균형한 정책 추진
- 3) 여성복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언
 - 정책 결정 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 여성들의 적극적인 법 활용
 - 여성 관련 예산의 확보

2. 국제사회 여성정책 동향

- 1) 국제사회 여성정책 동향
 - 성주류화 관점의 채택
 - 정책의 책임성 기제 강화
 - 협조체계의 다각화
- 2) 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 법적 평등 그리고 실질적인 평등 보장
 - 여성인권의 증진과 보호
 - 성인지적 사회보장
 - 생애과정에 적합한 복지정책

1주차 1강

여성복지의 개념 및 의의

학습 목표

- 여성복지의 개념과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 여성복지의 대상을 여성이 처한 특성과 역할, 생애주기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여성복지의 접근방법을 정책적, 실천적 접근 방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여성복지의 개념과 정의
2. 여성복지의 대상
3.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1) 여성복지의 개념

- (1) 여성문제에 대한 시각이나 이데올로기 등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름.
-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도 다양해서 여성복지 프레임에 어떤 관점을 통해 조망하는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짐.
- (3) ‘부녀복지’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이었다면 ‘여성복지’라는 개념은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의미

2) 여성복지의 정의

-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복지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궁극적 목표가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남성중심적 가치관과 이들 가치관을 토대로 구축된 각종 법 및 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 (2) 이근홍(1992)
 - 여성복지란, 그 대상을 미혼모, 성매매 여성, 가출여성, 근로여성, 저소득 근로여성, 학대받는 여성들과 같은 요보호여성은 물론이고, 모든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이 행하는 모든 조직적인 활동
- (3) 이혜경(1997)
 - 여성복지를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여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되는 자원의 재분배 노력들로 이해
- (4) 위의 정의들을 바탕으로 여성복지의 일반적인 개념을 정리
 - 여성복지란 국가나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부장적 가치관과 자본주의적인 생산역할에 근거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에서의 정책적·실천적인 모든 노력.

3)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 (1) 사회복지가 여성을 관심의 대상에서 배제
- (2) 사회복지의 주요 계층 간의 문제로 파악, 성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
- (3) 서구사회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인권 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을

기점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들은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비판되기 시작

- 기존 복지국가의 이념은 여성과 가족, 그리고 여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들 간의 상관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

예) 성별분업과 여성의 억압문제

- 사회복지지는 암묵적으로 성차별을 더욱 부추기는 기제로서 역할.

예)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들이 진정으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여성이 사회적 재생산에 기여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의도)

(4) 여성주의자들은 앞서와 같은 비판을 통해 사회복지가 오히려 여성의 삶을 척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성평등적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

(5) 서구와 한국에서의 여성주의와 사회복지의 결합에 대해 비교하면,

서구에서는 여성주의와 사회복지의 조우가 사회복지학과와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성운동계와 여성학자들에 의해 운동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크게 다름.

(6) 우리나라의 여성주의적 사회복지실천은 초기에는 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근절 등에 대한 접근, 현재에는 사회복지실천의 전체 영역과 전 과정에서 여성주의적 접근이 시도.

2

여성복지의 대상

1) 여성복지의 대상

- 그동안 남성이 가족 밖에서 돈을 벌어 오는 대신 여성은 가족을 유지하는 주된 책임자로 인식,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주된 책임자로 기대.
- 여성은 독립된 인간보다는 남편이나 자녀에 부수된 의존적 존재로 인식.

2) 여성이 처한 특성에 따른 구분

(1)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으로 나누는 방법

- 이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구분 방법.

- 요보호여성 : 사회적으로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결함이나 가정적, 사회적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
 - 요보호여성이란 주로 저소득 한부모 여성, 저소득 취업모, 미혼모, 가출여성, 성매매 피해 여성, 학대받는 여성 등을 포함.
- 일반여성 : 우리 사회의 여성이라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 일반여성의 가정적, 사회적 문제(김태진, 2009)
 - ◆ 첫째, 가정의 종속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로 유형·무형의 폭력과 가정 내에서의 폭력유형으로서의 아내에 대한 폭력, 여성 학대 등
 - ◆ 둘째,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관계되는 문제로서 여성의 가정의 종속, 가사에 대한 일차적 책임 전담으로 인한 사회참여의 제한과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저하, 심리적 보상이 정당화되지 못한 것에 따르는 문제
 - ◆ 셋째, 사회적 자원의 결핍문제와 가부장제하에서 생기는 불평등과 성차별의 문제
- 일반여성의 문제가 그들 가정의 종속성과 남성성의 의존성에서 연유된 것이라면, 요보호여성의 문제는 종속성과 의존성의 대상이 되는 가정과 남성의 부재 내지 부조화에서 비롯된 것

3) 여성의 역할에 따른 구분

- 여성은 사회로부터 아동과 노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기대.
 -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여성의 대상을 구분하며 자녀에 대한 각종 보호적 지원이 이에 해당.
 - 따라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교육적, 보호적 지원은 여성복지의 대상. 즉, 한부모가정 자녀의 교육비 지원, 보육비용 보조, 공부방 이용료 면제, 정서적 지원 등이 이에 해당

4)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구분

-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구분보다 여성의 삶의 연속선상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
 - 여성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의 사회적 위험 및 욕구를 중심으로 여성복지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
 - 생애주기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짐
 - ◆ 첫째,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생의 사건들로 구성된 측면
 - ◆ 둘째, 생애주기 동안의 위기적 사건들과 관련된 측면
- 생애주기 동안의 위기적 사건들
 - 일반적으로 가정 내 폭력, 이혼, 가족구성원의 사망, 실직, 장애, 요보호 성인의 발생 등이 해당.

3 |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1) 정책적 접근방법

- (1) 여성정책은 여성문제에 대하여 사후개입적 처우라기보다는 예방적 처우라는 관점
- (2) 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에 대하여 제도적, 법률적, 거시적으로 접근
- (3) 국가가 여성을 위해 시행하는 여성과 관련된 복지, 교육, 노동, 보건, 의료, 환경, 가족, 문화 등의 모든 활동

4 | 여성복지론

- (4) 이러한 여성정책은 여성복지정책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름
 - 일찍부터 인구정책, 교육정책, 가족정책,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등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
- (5) 여성정책의 대상은 여성이 가진 권리를 중심으로도 구분
 - 여성 개인의 욕구 충족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정책의 대상은 성매매 여성, 가출 여성,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등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들이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의 대상은 미혼모, 저소득 한부모 여성 등이며, 의존자로서의 여성차별적 정책의 대상은 일반여성과 저소득 여성 등

2) 실천적 접근방법

- (1) 특수한 욕구를 가진 여성들의 문제를 취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활동, 여성복지의 제도적 개념을 보완하는 잔여적 특성
- (2) 여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
 - 여성복지실천으로서의 여성복지서비스는 사회제도적 측면, 집단상호적 측면, 개인·심리적 측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들의 각 측면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복잡한 구도를 만들면서 여성문제를 형성하고 있음.
- (3) 여성의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의존이 형성된 과정을 분석하며, 여성들이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
 - 이는 여성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주의 상담, 여성주의 정신 분석, 여성주의 가족치료,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

3) 운동적 접근방법

- (1) 여성운동
 -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변화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정치적 행동의 한 유형
- (2)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운동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
- (3) 1990년대 이후부터 시민운동과 연계해 사회복지 이슈를 공론화하고 이를 운동으로 이끌어 내려는 움직임이 시작.
- (4) 사회복지운동
 - 관련 이해당사자들, 즉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대상자, 노동자 등의 적극적 참여와 행동을 통해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정의
- (5)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복지에 대한 권리를 사회 내에서 실현하고 이를 국가에 요구하는 운동의 성격
- (6) 여성복지 분야는 다른 어떤 사회복지 분야보다 그 대상의 폭이 넓고, 문제의 근원이 성차별적 이념, 가치, 정책, 제도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이러한 구조적 틀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성운동적 접근.
 -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권익의 향상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운동조직으로는 여성의전화, 여성민

우회 등의 여성단체가 있음.

■ 학습정리

1. 여성복지의 개념과 정의

- 국가나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부장적 가치관과 자본주의적인 생산역할에 근거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에서의 정책적·실천적인 모든 노력을 말함.

2. 여성복지의 대상

- 여성이 처한 특성에 따라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으로 나누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구분 방법

1) 요보호여성

- 사회적으로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결함이나 가정적, 사회적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
- 요보호여성이란 주로 저소득 한부모 여성, 저소득 취업모, 미혼모, 가출여성, 성매매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등을 포함.

2) 일반여성

- 요보호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의 여성이라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봄.

3.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1) 정책적 접근방법

- 여성정책은 여성문제에 대하여 사후개입적 처우라기보다는 예방적 처우라는 관점

2) 실천적 접근방법

- 특수한 욕구를 가진 여성들의 문제를 취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활동, 여성복지의 제도적 개념을 보완하는 잔여적 특성

3) 운동적 접근방법

- 여성운동은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변화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정치적 행동의 한 유형